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 학년도

박사학위논문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지도교수 : 송 민 경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김 지 수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김 지 수



김 지 수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24년 6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i
감사의 글	vii
논문개요	ix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1. 기후레짐의 변화와 특성	7
1) 국제 기후레짐의 변화	7
2)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변화	22
3)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환경(기후)교육의 변화	33
2.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제도적 정의	43
1)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43
2) 젊은 세대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 의미	51
3. 선행연구 고찰	57
1) 기후위기 언론보도와 담론 형성 연구	57
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젊은 세대와 시민참여 연구	60
4. 언론보도와 비판적 담론 분석	64
1) 언론보도와 담론	64
2)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71

제 3 장 연구방법	76
1. 자료 분석	76
1) 자료 수집과 조사 기간	76
2) 자료 수집 방법	78
2. 분석 방법	79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80
2) 의미연결망 분석	83
3) 비판적 담론 분석 절차	84
제 4 장 연구 결과	89
1. 텍스트 차원의 분석 결과	89
1) 버즈 분석 결과	89
2)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90
3) 의미연결망의 중심성 분석 결과	94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06
1) 전체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106
2) 보수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109
3) 진보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114
3.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담론 분석 결과	118
1) 기후위기 심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가중되는 젊은 세대	118
2) 젊은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기후)교육 활성화	122
3) 기후위기 대응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젊은 세대	130
4) 기후정의 행동에 나선 젊은 세대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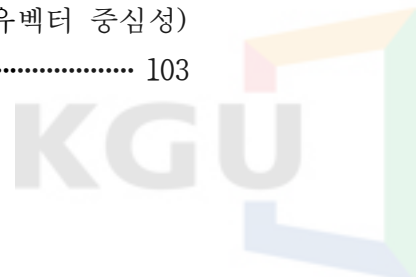


제 5 장 결 론	144
1. 요약	144
2. 결론 및 논의	147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161
참고문헌	165
Abstract	196



표 목 차

〈표 II-1〉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차이점 비교	16
〈표 II-2〉 최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 경과(2020-2021)	28
〈표 II-3〉 환경교육의 국제적 흐름	36
〈표 II-4〉 한국 정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과정	39
〈표 II-5〉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48
〈표 II-6〉 국내법상 젊은 세대에 대한 명칭과 연령 범위	52
〈표 II-7〉 국제기구·단체에서 정의하는 젊은 세대 관련 집단의 연령 구분	54
〈표 II-8〉 주요 국가의 젊은 세대 관련 집단 정의 명칭 및 연령 기준	56
〈표 III-1〉 데이터 수집 및 내용	78
〈표 III-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내용	79
〈표 III-3〉 의미연결망 분석의 중심성 지표	84
〈표 IV-1〉 전체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90
〈표 IV-2〉 보수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92
〈표 IV-3〉 진보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93
〈표 IV-4〉 전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95
〈표 IV-5〉 전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96
〈표 IV-6〉 보수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99
〈표 IV-7〉 보수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100
〈표 IV-8〉 진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02
〈표 IV-9〉 진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103



〈표 IV-10〉 전체 신문 토픽 구성 단어 목록과 토픽명	107
〈표 IV-11〉 보수 신문 토픽 구성 단어 목록과 토픽명	110
〈표 IV-12〉 진보 신문 토픽 구성 단어 목록과 토픽명	115
〈표 IV-13〉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토픽 범주화	117



그 립 목 차

〈그림 II-1〉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주요 변화 과정	24
〈그림 II-2〉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발전 및 특성	37
〈그림 II-3〉 청소년기의 확장	46
〈그림 II-4〉 페어클러프의 비파적 담론 분석 모델	73
〈그림 III-1〉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데이터 분석 절차	80
〈그림 III-2〉 시각화된 LDA 모형의 개요	82
〈그림 III-3〉 LED 확률적 토픽 추출(토픽모델링)	87
〈그림 IV-1〉 기후+젊은 세대 키워드 관련 데이터 연도별 추이	89
〈그림 IV-2〉 전체 신문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94
〈그림 IV-3〉 보수 신문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94
〈그림 IV-4〉 진보 신문 주제어 워드클라우드	94
〈그림 IV-5〉 전체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98
〈그림 IV-6〉 보수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101
〈그림 IV-7〉 진보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105
〈그림 IV-8〉 전체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106
〈그림 IV-9〉 보수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109
〈그림 IV-10〉 진보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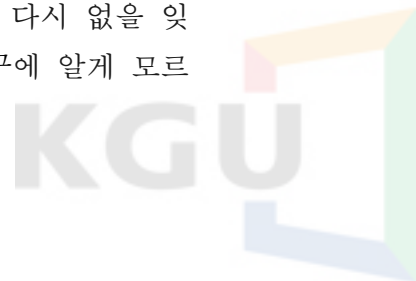
감사의 글

저에게 현장은 공간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 현장 활동가로 살고 싶었는데 현장과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있게 만들었던 학위는 늘 무거운 미안함과 부끄러움입니다. 2011년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입시 거부를 선언하던 청소년들의 투명한 가방끈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런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가방끈이 긴 세상보다는 투명한 가방끈 세상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삶이었고, 앞으로의 삶은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7년 전 학위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날개 하나 짊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1시간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논문 꼭 쓰시길 독려해 주셨던 이광호 교수님의 말씀에 이제야 답을 드리면서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 지도교수님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저의 연구가 더 나은 논문의 모습을 갖추나갈 수 있도록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도를 해주신 송민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0년대 중반 학사논문으로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2003년 석사논문은 “청소년자치활동과 인권신장”을, 마지막 박사논문은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면서 그 시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며 해답을 찾아간 시간이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연구가 덜 부끄러울 수 있게 심사 과정에서 좋은 배움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셨던 송민경 지도교수님, 이광호 교수님, 최중진 교수님, 김민 교수님, 조남익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다시 없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알게 모르



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강주연, 남화성, 김주 선생님과 군포지역사회에서 25년간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박사학위 마치라고 끝까지 독려해 주신 조완기 선배님, 조성범 선생님, 정인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저의 아버지께 때늦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거운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은 작은 날개보다 소중한 마음이니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순간 저에게 좋은 영감과 상상으로 새로운 과제와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젊은 세대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구라는 행성의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면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고 있을 젊은 세대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권력이 되는 그날을 위해 작은 응원의 마음으로 이 연구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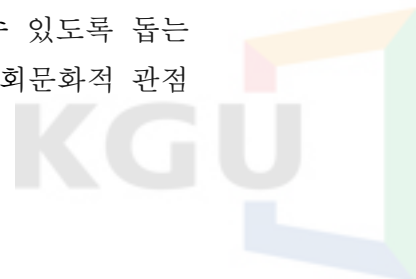


논 문 개 요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식과 대응은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언론보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러한 담론이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색한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에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의 주요 종합일간지 보도를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후레짐(regime)의 변화와 특성과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제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기후레짐의 변화와 특성에서는 국제 기후레짐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변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와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 중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기후)교육을 살펴보았다.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환점으로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꼽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들이 있었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비전’ 선포 이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의 변화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주요 흐름과 특성에 대해 다루었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



과 제도적 정의에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젊은 세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기후위기 언론보도 및 담론 형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젊은 세대와 시민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보도와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는 언론보도와 담론,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에 대해 살펴보므로써 연구 분석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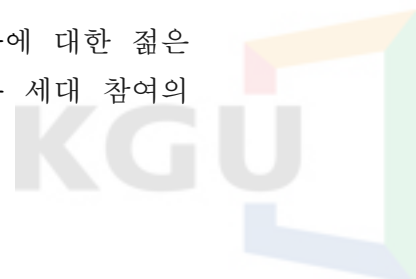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수집된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의 4개의 종합일간지 보도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 데이터 수집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간이며, 기후와 젊은 세대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각 언론사의 보도 경향과 주제어 빈도, 네트워크 중심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대한 언론의 담론 변화를 파악하였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보도 건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수와 진보 언론 간의 보도 양상을 비교한 결과, 보수 언론에서 더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주요 담론을 살펴보았는데,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의 담론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 신문은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 교육=학생=미래산업 개발 역군으로 강조하는 반면, 진보 신문은 기후위기 이해당사자이면서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젊은 세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 언론의 정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 분석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고, 환경(기후)교육과 젊은 세대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 요약과 담론의 상황을 정의하는 헤드라인과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 신문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젊은 세대를 대상화하는 반면, 진보 신문은 젊은 세대를 화자화 함으로써 젊은 세대를 주도 세력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내세우는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기사의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스 프레임 구성의 정파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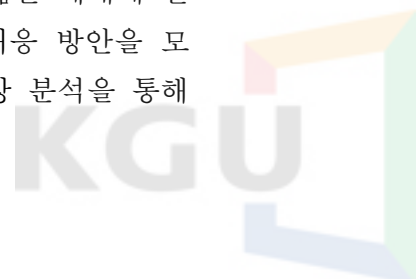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언론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다루는 방식이 시기별로 변화하며, 이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언론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다루는 방식에서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책임의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 신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젊은 세대를 환경(기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역군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당사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보면서 이를 위해 환경(기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언론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다루는 방식에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젊은 세대의 교육과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젊은 세대 교육은 기후위기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젊은 세대에게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가치판단과 해석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응을 위한 일상적인 실천으로서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언론보도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역할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젊은 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젊은 세대들의 참여로 기성세대의 행동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갱신했다는 뉴스는 더이상 놀랄 일이 아니며, 오늘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과 연관된 노동, 인권, 젠더, 에너지 등 다양한 불평등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속하는 인간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요원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재난이다. 기후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없으면 인류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서영표, 2016).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2023년 발표한 ‘The Global Climate 2011-2020’ 보고서에 의하면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기후변화 속도는 놀랄 만큼 급증했고,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인 증가는 육지와 바다의 기록적인 기온 상승은 물론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WMO, 2023)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시기에 따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루는 용어는 변화해 왔다. 2019년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어서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¹⁾. 이후 그동안 사용했던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 등의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 the Guardian(2019. 10. 15.) The Guardian's environmental pledge 20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ng-interactive/2019/oct/16/the-guardians-climate-pledge-2019> (검색일: 2024. 02. 15.)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했다는 우려와 논의는 이제 전문가나 학자들 사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1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하 IPCC)의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가능한 5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205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세기 중 산업화 이전 대비 1.5~2℃가 오를 것으로 보고하였다(IPCC, 2021). 또한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재난 위험 감소 노력이 없다면, 2050년에는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인한 난민 예상 인구가 현재의 약 2배에 달하는 2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NHCR, 2021). 이처럼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늦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박수진, 2022).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겠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등과 같이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공적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은 주로 일부 전문가와 정부 관료 및 정치가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김직수, 이영희, 2015). 예컨대, 기후문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과학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공적 분야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에는 과학자나 정치력을 지닌 이해집단만이 주로 참여해 왔다. 반면, 정작 의사결정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 일반시민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박주형, 이운정, 2015).

더욱이 기후위기 문제는 지역적 광역성과 장기성으로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glob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수준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함께, 각 수준에서 정부, 기업,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홍영식, 이덕로, 2019).

한국 사회에서도 초기의 기후위기 담론은 정부, 기업과 같이 주로 기후변화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정치력을 가진 이해집단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정부와 기업들은 녹아내리는 북극해의 얼음과 동토층, 멸종의 위기에 처한 북극곰, 점증하는 기후재앙 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절멸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성 담론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계몽적 수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일상의 실천적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이라고 인식하면서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탈 플라스틱 등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을 강조하는 담론의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김선철, 2021). 이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확산되었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플로깅(plogging)’ 프로그램이나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플라이트 세임(flight shame)’, ‘종이 영수증 줄이기’ 등과 같은 환경 캠페인의 실천과 확산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들어 전 지구의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기 삶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관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예컨대 2019년 9월 기후와 행동(action)을 함께 내건 최초의 유엔 정상회의인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기 직전,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400여만 명이 ‘글로벌 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을 펼치면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촉구하였다(경향신문, 2019).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 대구, 창원, 청주, 홍성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기후파업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라고 외치며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 상황 선포를 요구하였다(기후위기비상행동, 2019).

이러한 요구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young people)의 목소리도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9월 27일 한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결석 시위(school strike)를 주최하고, 일반 시민들과 기후행동에 함

게 참여하였다. 기후행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등교 거부를 하면서까지 기후 파업에 함께하는 결석 시위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현명주, 정희라, 2020). 이들은 적극적인 기후문제의 해결과 대응을 요구하면서 “기성세대들이 흠쳐 간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우리는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로 기후 변화 문제의 당사자이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결석 시위를 주최하고 참가한 청소년들의 행보가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그들의 활동과 메시지가 알려졌다(현명주, 정희라, 2020).

그런데 기후행동에 나선 젊은 세대의 주장은 기존의 기후위기 담론에 따라 펼쳐진 환경 캠페인들과는 목표와 대상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전에는 주변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쓰레기를 줄이자, 분리수거를 잘하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라는 소위 개개인의 친환경 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반면 학교 결석을 불사하면서까지 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의 목표 대상은 정부와 기업 등의 구체적인 대응이었다. 그들은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기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하였다(신현정 외, 2022). 그리고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제기하거나,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대량의 호소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행동은 실제로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2021년 발표된 각 시·도 교육청의 기후교육 계획 보고서에 정책추진 배경으로 제시되거나(울산광역시 교육청, 2021), 전국 시·도 교육감 공동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 (2020.07.09) 발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신현정 외, 2022).

이러한 젊은 세대의 기후행동은 기성세대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할 위기에 처한 불공정한 상황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장미림, 2023). 그러면서 기후위기 문제에서 젊은 세대가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연방기후보호법」 일

부 위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김영수, 2022). 또한,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60년 전에 태어난 세대보다 폭염을 7배 더 많이 겪을 것(한겨레, 2021.09.27)이라는 등 평생 훨씬 많은 이상기후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이제 기후변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주요 현안이 되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생태계와 산업, 경제활동을 넘어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장진아, 2021).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현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젊은 세대야말로 기후위기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해야 할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다(윤순진, 2009). 그리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이해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은 더 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는지, 피해 당사자이자 권리 주체로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이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젊은 세대를 연결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제시한 논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기후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연구로 기후행동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에 대한 담론 분석은 더욱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에 관한 담론 형성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의미에 대한 인식 틀을 고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서 젊은 세대의 위상과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나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

난 젊은 세대에 대한 담론 형성과 의미에 대한 종단적 변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과 문제

이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담론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기후체제의 시작 직전의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준비 시점인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 동안 주요 4개의 종합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의 위상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시기별로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어린이, 아이, 아동, 청소년, 청년, 젊은 세대, 미래세대 등 젊은 세대와 기후위기 담론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에 나타난 단어와 주제어들은 무엇이며, 정파별로 시계열 분포 추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둘째,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에 있어 언론사의 보도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둘러싼 담론들은 사회문화적 실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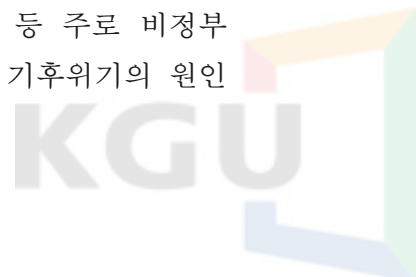
1. 기후레짐의 변화와 특성

1) 국제 기후레짐의 변화

국제 기후체제에서 ‘체제’는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의미한다(환경부, 2016). 국제 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원칙(principles)·규범(norms)·규칙(rules)과 의사결정 과정의 집합’이다. 넓게 해석하면 행위자들도 포함된다(환경부, 2016). 따라서 국제 기후레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s)과 이를 결정하여 이행·강제하고 발전시키는 기관(institutions),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상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환경부, 2016).

국제 기후레짐의 시작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로 볼 수 있다. 이 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인류가 환경문제를 의제로 해서 모인 유엔의 첫 번째 회의였다. 이 회의 결과로 스톡홀름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고, 지구환경의 날(6월 5일) 지정과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환경과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입장의 차이가 처음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회의이기도 하다. 스톡홀름 선언문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했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는 ‘저개발(under-development)’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진 산업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재정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장재현, 2012).

1998년 이전까지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자어나 시민단체 등 주로 비정부 부문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1988년 과학자들이 온실가스가 기후위기의 원인



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처음 규명되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환경부, 2016). 1988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공동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IPCC를 설치하였다. IPCC가 보통 5~7년 주기로 작성하는 종합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종합평가 보고서 이외에도 특별보고서, 기술보고서가 별도로 있다.

IPCC의 1차 보고서 발표를 토대로 1990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 제정이 촉구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을 위한 기후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가 작성한 기후변화협약 안(案)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 일명 리우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하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 약칭함)’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국가들은 거의 ‘준거부권(near-veto)’ 또는 ‘사실상의 거부권(de facto veto)’을 가지므로 구속력 있는 규칙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신범식, 2012).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과정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이하 COP)’에서의 연합 형성과 그 막후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 비정부기구 등의 조정 및 중재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다(Barnett, 2007; Conca, 2006). 하지만 국가, 지역 기구, NGO,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의 중심이었으며, 교토체제 형성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신범식, 2012)고 볼 수 있다.

리우 정상회의 결과로, ‘리우선언’과 40장에 걸친 방대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듬해부터 매년 5월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 3대 환경협약이라고 불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장재현, 2012).

우선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지구 기후시스템이 위협받지 않을 수준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조치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UN, 1992; 김이진, 2022).²⁾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인 197개 국가는 전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공통 관심사(common concern)’로 규정하고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개별 국가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에 따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우산그룹(Umbrella Group, UG: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과 신흥·개발도상국 협의체(G77+중국), 군소도서국연합(AOSIS), 최빈개발도상국(LDCs) 등에 다른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밖에 OECD 국가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의무국(Annex II) 의무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체제 전환 국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Annex I) 의무를 각각 부과했다(외교부, 2015).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협약 당사국들이 매년 개최하는 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다. COP에서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는 물론 이를 통해 각종 ‘협정’과 ‘의정서’가 채택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 기후레짐은 1992년 채택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는 큰 틀

2) UNFCCC 3조 3항, 4조 1(b), (e), (f)항 참조 제3조 3항은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은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4조 1항에는 선·개도국 공통 의무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의 자체적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jsessionid=gBBpfndtvNSbushhpa50AVEJfNNkp0fAoJrRO9ZsVxNy6qdNyuRDT7a1rMdBdOti.eduweb_servlet_engine6?CTS_SEQ=44463&AST_SEQ=309&nationReadYn=Y&ETC=5&searchNtnl=UN

에서 현재까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측면에서 두 차례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두 차례의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97년 COP3가 선진국과 동구권 국가의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 채택에 기반한 ‘교토체제’이다(신범식, 2012). 두 번째는 2015년 COP21이 채택한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2020년부터 국제 기후변화 행동을 결정하는 ‘신기후체제’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최원기, 2015).

이같이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지구온난화 현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연과학자 집단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한 국가의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남미자와, 2020).

이에 1972년 스톡홀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레짐 형성에 성공한 이슈인 오존층보호를 시작(고상두, 2010)으로,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와 일정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와 1.5℃ 상승 억제 노력을 목표로 한 파리협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해 왔으며, 이러한 합의들이 만들어 낸 기후레짐들은 어떤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교토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23년 12월 현재, 협약의 당사국(party)은 197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을 더하면 198개국이다. 그런데 이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로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약하거나 강

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은 1977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산업화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국제 조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38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에만 구속적 배출 저감목표를 선정하였다(강상인 외, 2016). 1차 공약 기간(2008-2012)의 목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가량 감축으로 다른 협약과 달리 교토의정서의 특징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유도하였다는 점이다(강상인 외, 2016).

‘교토의정서’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COP1에서 부속서 1 국가의 의무 강화를 위하여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교토에서 열리는 COP3에서 채택하기로 한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인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특별그룹(Ad Hoc Work Group on Berlin Mandate, AGBM)이 설치되었다(환경부, 2008). 이후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COP2에서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협상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결국 COP1에서 결정된 이후 8차례의 특별그룹(AGBM) 회의 개최를 통하여 선진국의 의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환경부, 2008).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 참여 등의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입장이 대립되었다.

이후 199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COP4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 BAPA)’이 채택되면서 COP6까지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세부 이행 절차 마련과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의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비부속서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의사를 표명하였다(환경부, 2008). 나

아가 1999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5에서 아르헨티나가 경제성장과 연동한 감축의무 부담 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 등도 자발적으로 의무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COP6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엄브렐라(umbrella) 그룹(비유럽권 ‘부속서 I’ 국가)’과 EU의 입장 차이로 교토의정서 세부 이행 절차 확정에 실패하고, 2001년 3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의 불참 선언으로 교토의정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환경부, 2008).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COP10에서 러시아가 비준하고,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1에서 교토의정서 이행 절차 보고 방안을 담은 19개의 마라케시 결정문이(이상윤, 이승준, 김이진 외, 2014) 승인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협의회 구성 합의에 이른다(환경부, 2008).

결국, 1997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로 의정서 체제의 출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등 갈등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범지구적 대응 체제가 출범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기후변화를 국제정치의 지구적 과정의 핵심에 위치(Bodansky & Diringer, 2010)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대상과 목표뿐 아니라 감축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감축 제도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제를 적극 활용한 방안을 도입했다는 의미에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불린다(남미자 외, 2020). 예컨대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 거래제(ET), 청정개발제도(CDM) 도입 규정 등은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동이행제도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I 국가 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제6조의 내용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제17조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청정개발제도는 제12조의 비부속

서 I 국가에서 감축한 양을 부속서 I 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남미자 외, 2020).

또한 교토의정서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끝나는 2012년 이후(Post-2012)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행 방안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범지구적 협상은 지속적으로 결렬되었다. 마침내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범지구적 기후변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인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 적용될 합의문 채택을 위한 Post-2012 협상도 시작되었다. ‘발리행동계획’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MRV)” 감축과 완화 행동, 개발도상국들의 적응,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 기술의 이전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원칙을 확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대한 협상을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COP15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신범식, 2012).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후체제의 위기 초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COP15에서는 강대국 간 각축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쟁 강화 등으로 국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특히 미국은 중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보고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들이 실질적인 감축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 직전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입장 차이 외에도 상원에서 기후변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2005년 대비 온실가스 17퍼센트 감축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과 중국이 투명한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에 진전을 보이고, 청정에

너지 기술이전에 대한 기초적 합의가 성사되면서 잠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을 골자로 한 과도기적 조치인 ‘칸쿰 협정문(Cancun Agreements)’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구적 협상 과정의 지속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환경부, 2010).

이 같은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COP17로 이어졌다. 이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신기후체제를 이끌기 위한 토대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DPEA) 구성에 합의한다. 또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될 COP21에서 채택할 모든 국가에 적용할 의정서(protocol),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형태의 결과물에 합의한다. COP17은 이러한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형태의 결과물을 개발하도록 새로운 협상 트랙인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을 2012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한다(이상윤 외, 2014). 또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기간을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고, 2015년까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이 법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협약을 맺은 후 거기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20년부터 실행할 것도 합의한다. 이 외에 합의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감축 활동이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하였다(오형나, 201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 공동 대응의 초기 단계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동 협약의 실행 지침인 온실가스를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감축시킬 것인가를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행동계획을 둘러

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탈퇴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일부 국가들과 혼선이 지속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세계 1, 2, 3위에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제 기후레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 신기후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P17에서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P)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국제 기후레짐 정립 논의가 활발해졌다. 바르샤바(2013)와 라마(2014)에서 개최된 COP에 이어 2015년 다섯 차례의 공식적인 작업그룹(ADP)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3년 바르샤바 COP19는 2015년 합의 도출 과정의 일환으로 각국이 정한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수준을 2015년 COP21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요국 간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진 2014년 페루 리마(Lima)에서 개최된 COP20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의 차이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정지원, 문진영, 2015).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은 협약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CBDR)’과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부속서 체제 유지를 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진화하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과 각국의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을 강조하는 한편 이분법적 국가 구분에 반대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성공의 선결 조건은 ‘Pre-2020’ 공약의 이행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감축 공약 미이행과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COP20에서는 일부 세부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고, 시장 메커니즘, 투명성 체제, 향후 재원 조성 확대 논의 등을 파리협정 발효 출범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협상하였다. 또한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는 각 국가가 정하는 기여의 제출 일정과 범위, 제출 후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였으며, 향후 협상에서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2015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유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

된다(이상운 외, 201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5개국이 참여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2015년 파리 COP21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일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후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협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는 <표 II-1>과 같다. 큰 틀에서 볼 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공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기후레짐이다.

<표 II-1>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차이점 비교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평균 5.2%, 2차: 평균 18%)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 및 1.5℃ 상승 억제 노력
대상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감축 의무국가	37개 선진국 및 EU (美, 日,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불참)	선진·개발도상국 모두 포함한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 기준	기준연도 배출량 및 국별 여건 고려	진전 원칙 (다음 NDC는 현재 NDC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목표 불이행 시 징벌 여부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비징벌적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 가능한지 의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배출량 비중	1차 공약기간 22%, 2차 공약기간 13%	INDC 제출 국가 95%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목표수준설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공약기간	1차('08~' 12년), 2차('13~' 20년)	5년 단위 감축목표 갱신 ('20년 ~)

출처: 환경부(2022, p.7)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선진국에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으나, 개발도상국에는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였다. 반면,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참여(applicable to all)하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legally binding)로서 주기적 점검 체계로 목표 상향 의지(ambitions)를 반영하고 협상의 지속성(durable)을 높인 것이다.

다시 말해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토의정서와 같이 국제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각 국가가 정하는 세부 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라는 점이다(이승준, 2016). 특히, 파리협정은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과 감축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구분하여 모든 국가가 합의문의 법적 구속은 받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하고 있다(정민정, 2016). 즉,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목표에 대한 구속이 아닌 저감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적 절차 설치의 유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기여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관련 제도가 신설되거나 보완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강상인 외, 2016).

1997년 채택되어(2005년 발효) 지난 20여 년간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해 왔던 교토체제는 막을 내리고,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범세계적 기후변화 협력 규범으로서의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시대가 열린다(김호홍, 2021).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의 핵심 결과물은 파리협정과 협정 이행을 위한 총회 결정문(decisions)과 각국이 사전 제출한 ‘국가별 기여 계획(INDC)’ 등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 보장을 위한 적응 역량 강화 및 회복력 증진과 더불어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는 글로벌 적응 목표의 최초 수립이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안보 이슈인 기후위기 문제에 지구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담으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지원과 빈곤퇴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파리협정 체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2018년 개최된 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줄여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극단적인 자연재해는 물론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과 대규모 ‘기후 난민’ 발생 등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맞게 될 거라 경고하였다(한겨레, 2021.10.26).

이후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은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을 완성하였다. 특히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과 함께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의 추가 상향, EU와 한국, 미국 등 참가국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두 배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2022년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1.5도에 맞추는 것에 합의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이는 2021년부터 본격화된 ‘신기후체제’가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글래스고 기후 합의’는 ① 과학 및 시급성 ② 적응 ③ 적응 재원 ④ 감축 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기술 이전·역량배양 ⑥ 손실과 피해 ⑦ 이행 ⑧ 협력의 8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협력에 있어 대중 참여에 관한 4가지 우선 영역(정책 일관성, 통합된 행동, 도구와 지원, 관리·평가·보고)과 6가지 ACE 요소(교육, 대중 참여, 대중 인식, 대중의 정보 접근, 국제협력)로 구성된 글래스고 작업 프로그램(2022-2031)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신속한 착수 요청과 더불어 향후 COP 의장단에 청년 주도의 기후 포럼 개최를 통한 청년층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촉구도 포함되었다(이혜경, 2021).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시작되었고, 2021

년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131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 국가들의 탄소 감축 규모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에 이른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2015년 COP21을 전후해서 제출한 2030년 국가별 결정 기여(NDCs: 자발적인 국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윤순진, 2021). 이후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는 개발도상국 요구에 따라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 JTWP)’을 설립하기로 하고, COP28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외교부, 2022).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은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을 위해 누가,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어떤 피해에 대해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2023년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全)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①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②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 효율 2배 증대 ③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④ 저감 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였다(외교부, 2023). 또한 COP27에서 채택한 개도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을 결정하면서 총 792백만 달러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하여 총 85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외교부, 2023).

이같이 파리협정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것은 향후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COP21의 결정문은 비당사국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리협정과 각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공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이다(Yun, 2020).

(3) 신기후체제 이후 대두되는 기후정의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은 크게 확대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 이전에는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파리협정 이후에는 경제적(산업적) 측면과 함께 기후정의 담론의 확산과 취약계층, 불평등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정책 로드맵으로, 정치적 의제로서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논의의 전개를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서보영, 2023).

앞서 살펴본 국제 기후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추진되어 온 국제 환경협력의 성패는 주로 비용과 이득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유발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입게 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었다(고상두, 2010). 또한 유엔과 각국 정부, 자본, 주류 NGO 등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제회의들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 같은 대안적 문제 해결 접근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경제적인 수단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어왔다.

오늘날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위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제, 주거, 건강, 식수,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재해·재난 빈도와 강도의 증대로 이어져 최근에는 기후위기, 더 나아가 기후재앙이라는 용어도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모습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의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 채택,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규창 외, 2022).

따라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점차 다양한 영역과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8년 8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도한 결석 시위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경각심 고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 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회사 앞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일정 정도 이상인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투자자 주도의 기업행동 변화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 또한 프랑스에서는 2021년 5월 4일 「기후법(loi climat et résilience)」이 제정되었고, 이후 언론과 광고 등 미디어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절감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다(진민정, 이봉현, 신우열, 2021). 예를 들어 디지털 버전의 탄소 영향 평가를 위한 도구를 마련하거나 언론사 웹사이트가 차지하는 용량이나 게재되는 기사의 수를 줄이고, 보다 생태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룹화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전문적이고 기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진민정 외, 2021).

이렇게 다각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펴듯, 적절한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서 산업과 기술 발전을 추동한다면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런 것들을 묶어 종합적인 국가 발전계획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나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등은 단순히 탄소중립을 위해서 CO₂ 감축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환의 모멘텀으로 능동적인 대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수십 혹은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하며,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에 면밀한 정책과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진민정 외, 2021).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 이수현 옮김, 2024)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로 인한 혁신들이 초래할 비용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또한 기존의 화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투자되는 자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일컬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명확히 하고, 현재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권적 관점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조효재, 2022)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가 더 이상 경제적인 수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 삶에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생태계가 직면할 가능성이 큰 기후위기라는 대재앙의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정의’ 등과 같은 인권적 개념에 기초한 논의와 관심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로 국가 간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 왔던 국제 기후레짐의 방향을 세계 시민사회의 수준으로 전환하고, 생태적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기후정의를 실천해 나갈 시민들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약속으로 체결되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왔다. 그 내용들은 자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별 화석 연료 저장 대책이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각 국가의 경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정부가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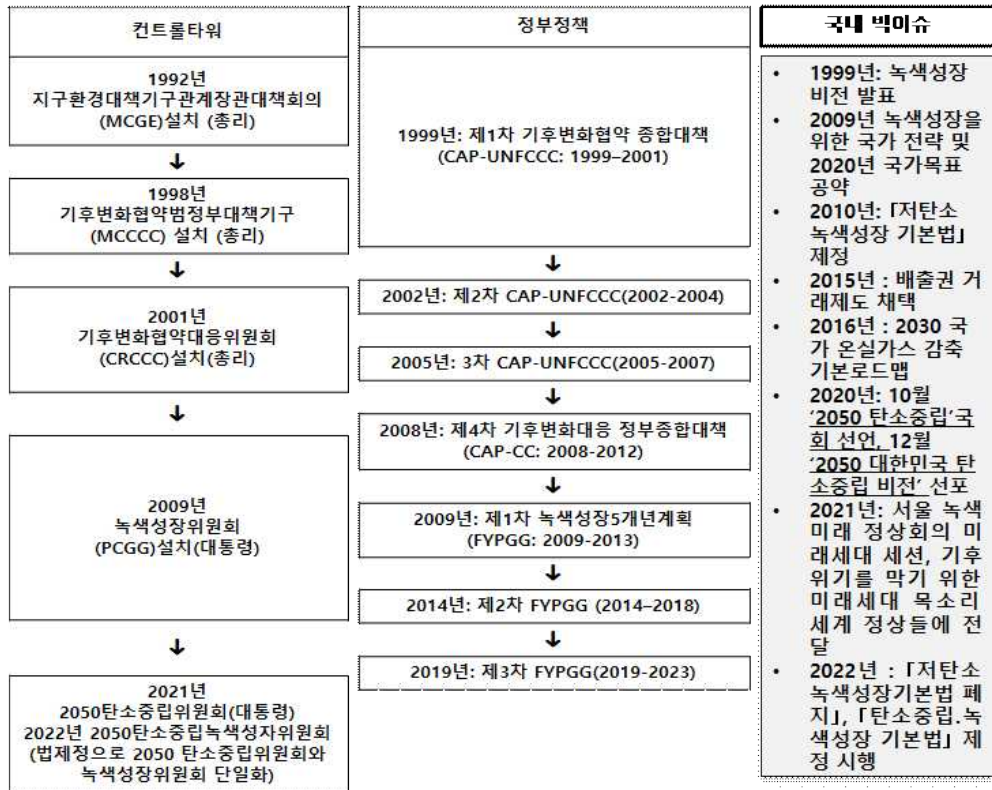
대응을 위한 계획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국제 기후레짐의 진화에 대응한 제도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추진되어 왔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 동인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적인 영향, 대통령의 관심, 기업의 영향력, 관료정치,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 등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태훈, 2008). 특히 국제적인 영향은 한국 사회의 환경정책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2015년 9월 수립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나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발효(2016년 11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선진국 중심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국제적 흐름을 수용하여 2020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태훈, 김희석, 2022).

(1)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변화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변화는 <그림 II-1>와 같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2년 국무총리 산하에 ‘지구환경대책기구관계장관대책회의(MCGE)’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대책회의는 국제환경협정, 리우선언, 의제 21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조치, 유엔과의 협력,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그 밖의 국가와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홍보³⁾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환경부, 2002; 윤경준, 윤이숙, 2016). 또한 이 대책회의는 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운영되면서 산업, 환경, 글로벌 협상 분야에서 선정된 44개의 세부 과제 추진을 결정하는 등의 활동하다가 1996년 정부의 위원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다(환경부, 2002).

3) 구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규정(1995. 6. 2. 국무총리훈령 제312호로 폐지) 제2조.



출처: 연구자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그림 II-1>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주요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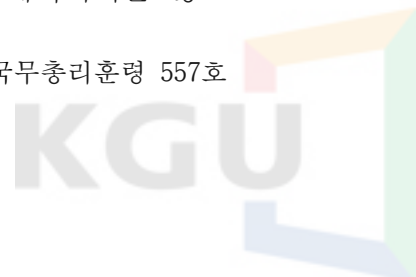
그런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서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100대 최우선 정책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에너지 절약 정책추진’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MCCCC)’를 설치하였다. 이 대책기구는 기후변화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성과로는 199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

(CAP-UNFCCC)’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이 시기까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정부 대응체계는 주로 정부 부처 간 협의체 형태였다. 이런 협의체를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취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는 그 자체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체제보다는 부서별로 수립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성격의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1년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위원회(CRCCC)’를 설치하였다. 이 대응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방향과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모니터링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CAP-UNFCCC) 평가, 온실가스(GHG) 배출물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합의, 온실가스 재고 및 연구개발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또한 기본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였다⁴⁾. 이 연장선에서 대응위원회는 2002년 ‘제2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CAP-UNFCCC: 2002-2004)’⁵⁾, 2005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CAP-UNFCCC: 2005-2007)’⁶⁾, 2007년 ‘제4차 기후변화대응정부 종합대책(CAP-CC: 2008-2012)’⁷⁾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협약대응위원회에서 수립되었던 종합대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2002-2004)’은 기후변화협약 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한 협상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강화, 교토 메커니즘 기반 구축, 기후변화협약 대응 시민참여와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총 8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기후변화협약 대응위원회, 2002). 이어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2005-2007)’에서는 처음으로 적응 대책을 추진하였다. 즉 기후변화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구축, 각 분야의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과 함께 협상, 완화, 적응과 같은 기후 주제를 포함한 기후변화계획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체적이지는 않으

4) 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0. 9. 27. 국무총리훈령 557호로 폐지) 제3조.



나 투자 가능 금액(예정 기간 중 16조 6,000억 원)을 명시하였다(환경부, 2008; 윤경준, 윤이숙, 2016). 3차까지 추진되었던 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은 3년간 실행되었으나 4차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명칭도 ‘기후변화 종합대책(CAP-CC)’으로 변경되었다.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최소화,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 등을 명시하였다(국무총리실, 2008). 그런데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은 2009년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FYPGG)’과 통합되면서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협약대응위원회(CRCCC)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PCGG)’로 통합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녹색성장 비전(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비전은 5개년계획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국가 경제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성장동력 촉진과 사회 구성원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다(미래비전비서관실, 2009). 그리고 2009년에는 비전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비롯하여 총 11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대표적인 6가지 사항은 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④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⁵⁾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7월, 2050년까지 적용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준비하고, 제1차 녹색성장5개년계획(FYPGG: 2009-2013)과 제2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FYPGG: 2014-2018) 수립은 물론 2013년 7월 법 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로 소관이 이관되기 전까지 녹색성장 전략을 책임졌다.

5)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폐지) 제15조

제1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FYPGG: 2009-2013)은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등 10대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외교부, 2009). 제2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FYPGG: 2014-2018)은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 협력 강화 등 5개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제3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FYPGG: 2019-2023)은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정책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기후 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 등 5대 방향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후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국회 선언’에 이어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제로화’ 청사진을 공개하였다. 이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전반적인 추진 경과는 <표 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법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월 공식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종전의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한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종전 위촉직 민간위원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하였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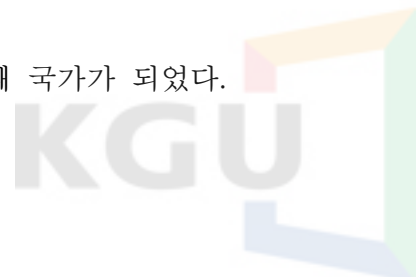
〈표 II -2〉 최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 경과(2020-2021)

연도	기간	주요 내용
2020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국회 선언’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2021	1월 20일	산림청, 2050년까지 벌목 후 30억 그루 심기 발표 → 시민 반대, 10월 말 계획 철회
	4월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서 “NDC 연내 상향” 선포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5월 30일~31일	정부,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개최
	8월 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 2030년 NDC 최소 35% 이상 명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의결 → 2050탄소중립·탈석탄, 2030NDC 40%감축 확정
	11월 1일	COP26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12월 7일	2024년부터 초·중·고 전 교과에 생태전환 교육 반영

출처: 한겨레(2021.12.08)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 주재 첫 회의에서 새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 심의, 동 전략을 토대로, 2023년 3월까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 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결정하였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등 3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 사회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 배분 조정 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

이로써 한국 사회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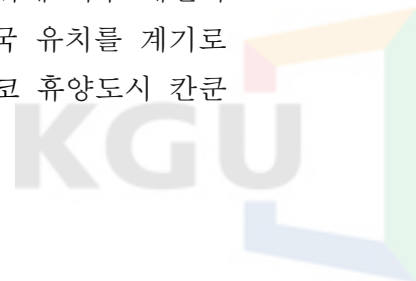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고,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 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등 국가재정과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은 물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계층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명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5년 6월, 파리협정(신기후체제) 타결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별 기여 방안(INDC)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6년 11월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서 12월 3일 발효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도 마련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평가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 기존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방식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절대량 방식으로 수정하여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안(案)(관계부처 합동, 2018)을 마련하였다.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조정 안(案)을 발표(기획재정부, 2021)하면서 2021년 12월에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기후 재원이 필수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기후 재원 분야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2010년 멕시코 휴양도시 칸쿤



(Cancún)에서 열린 COP16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이 결정되었고, 2012년 한국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2014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회의에서 21개국이 총 약 94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한국도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였다(기획재정부, 2014). 그리고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 2억 달러 공여를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외교부, 2019) 바 있다. 이어서 2023년 10월 독일 본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 회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 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한국이 3억 달러 공여를 선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25개국 공여국들이 조성한 금액은 총 93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기획재정부, 2023).

(2)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상하는 젊은 세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점차 기업과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국제사회 차원에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요시하는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에서도 ESG 경영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COVID-19를 계기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관점이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공급망과 기후 환경 리스크, 인권 및 안전·환경에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한 이슈로서 다뤄지고 있다(이준희, 2020). 기업들은 현시점에서의 투자와 수익, 매출과 함께 고객과 투자자로부터 요구되는 ESG 관련 리스크 관리, 경영 체계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과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다(이준희, 2020).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ESG 경영공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공공기관 ESG 경영, ESG 채권·펀드 활성화, 시장 자율 규율체계, 공공부문 ESG 투자와 ESG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이어서 2022년 12월에는 ‘ESG 인프라

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기획재정부, 2022).

이같이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주로 정부와 기업 등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닌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대응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득실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관련된 헌법소원(2021헌마1264, 2022헌마854 및 2020헌마389, 2020헌마1516)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국가인권위원회(2023)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비례성) 관련 검토 의견에서 미래에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탄소 예산을 급속히 소비한다면 미래세대는 극히 적은 탄소 예산을 배분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령에서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미래세대에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는 정부와 기업이 설정하고 추진

하는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돌하는 이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언론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정확한 정보 전달과 맥락 있는 논평 제공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토의될 수 있는 공론장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민정 외(2021)는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 나아가 지구촌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루고 실행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효재(2022)는 기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분야적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 기후위기 ‘들’이 있고, 여러 기후행동 ‘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언론, 여성, 인권, 사법, 복지, 노동, 아동, 보건의료, 장애, 노인, 교육, 치안, 지방자치, 도시행정, 정보기술, IT 기술, 시민사회, 이주, 국제개발 협력, 문학, 문화, 예술,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당장의 투자나 노력만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의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젊은 세대들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회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해당사자로서 가지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떠한 관점과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환경(기후)교육의 변화

한국 사회도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 지구적 대응과 변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수준에 발맞추어 기업과 사회적 조직들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시민 개인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대부분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환경과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현상과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주체이자 젊은 세대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도 환경과 기후위기 관련한 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환경교육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립되거나 합의되지 못한 점, 둘째, 주로 과학 관련 교육의 일부로 환경과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는(남미자 외, 2020)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들도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는 현실적인 흐름도 고려하였다. 학교 환경교육에는 환경, 생태,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탄소중립 등 다양한 용어와 주제에 관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주제와 관련된 용어를 통일해서 기술하기보다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기후변화 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탄소중립 교육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1) 환경교육의 국제적 변화 흐름

국제적 수준에 있어 ‘환경교육’이라는 정의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48년

파리에서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국제회의(INCN)에서였다(강철성, 2004). 이 회의에서 프리차드(Thomas Pritchard)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하는 교육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EE)’으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학자들이 환경교육을 특정한 전문 분야로 정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환경교육의 윤곽을 만들었던 주요 국제기구들은 상당한 정도로 목적과 대상, 접근방법의 공동 인식을 끌어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현대적 의미의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류 환경에 관한 유엔 제1차 회의’ 때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과 ‘인간 환경에 관한 행동 강령’으로 볼 수 있다. ‘인간 환경 선언’에 포함된 26개 원칙 중 ‘원칙 19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와 성인에 대한 교육은 개인, 기업과 지역사회가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하도록 그 생각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강철성, 2004; 장윤정, 2012). 또한 이 회의에서 선언된 인간 환경 선언과 인간 환경에 관한 행동 강령의 실행 기구 설립이 권고되면서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의 결의로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이 채택되었다(유엔환경계획, UNEP 홈페이지 참조). 이후 유엔환경계획은 1975년부터 유네스코(UNESCO)와 공조하여 권고 내용에 대응하여 국제 환경교육 프로그램(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e, IEEP)을 만들어 환경교육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1975년 개최된 ‘베오그라드 국제 환경교육 회의’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을 명확히 하는 ‘베오그라드 헌장’이 채택되었으며, 1977년 ‘트빌리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는 환경교육의 개념, 영역, 역할을 설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시한 국가적·국제적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면서 공식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후 1987년 모스크바에서 유네스코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주관으로 ‘환경교육전문가 훈련’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발전(ESSD)이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Palmer, 1998; 강철성, 2004). 같은 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인간 태도의 변화는 교육, 토론, 공공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환경교육이 의제의 초점이 되었다(강철성, 2004).

1991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기금(WWF) 등은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사용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구를 돌보는 것: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을 발표했다. 뒤이어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와 인간의 행동 원칙을 천명하는 ‘지구헌장’과 함께 의제 21이 채택되었다(Palmer, 1998). 의제 21의 전체적인 내용은 환경교육에 관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지속 가능한발전과 대중의 인식, 교육 촉진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강철성, 2004).

이러한 환경교육의 국제적 흐름과 변화는 <표 II-3>과 같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방법과 정치적 지향을 가진 학자와 운동가에 의해 논의되고 실천이 되어 왔다. 1980년대는 세계화 교육과 가치교육, 1990년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시민교육, 2000년대는 지속가능성 교육 또는 지속가능한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면서 여러 갈래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COVID-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UNESCO와 OECD 등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 감염병 유행, 기후위기 등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형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는 미래 교육의 당면 과제 중 환경적 도전을 첫 번째 도전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II-3〉 환경교육의 국제적 흐름

연도	내용
1968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파리회의(UNESCO Biosphere Reserve Conference) - 환경교육과정, 훈련 및 인식개발 요청
1970	UNESCO & IUCN - 환경교육의 초창기 정의 제공
1972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 UNESCO & UNEP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촉발
1975	벨그라드 헌장(Belgrade Charter) - 환경교육 목적 제안
1977	트빌리시 선언(Tbilisi Declaration) - 첫 번째 국제 환경교육회의로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설정
1980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발전의 중요성 제시
1987	모스크바 트빌리시 +10 - 환경교육 진행 상황 평가 기회 제공 브룬트란트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제시
1992	리우 지구정상회의 -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의제 21(Agenda 21) 제시
2002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5개의 목표 영역제시(water and sanitation, energy, health and environment, agriculture,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2005 - 2014	유엔 지속가능한발전 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 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 <https://www.seeic.kr/>(검색일자: 2023. 04. 10)

또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8). 이 프로젝트에서는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취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 2030년 무렵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교육 분야 전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활동 맥락에서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과정과 내용은 물론 학교시설 운영, 지역사회 파트너십,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환경교육적 의미가 논의되고 있다(Henderson & Tilbury, 2004). 이는 학교 전체적인 접근(whole-school approach)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김현진 외, 2022)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주요 흐름과 특성

역사적으로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교육 체계 속에서 도입되었다. 환경교육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장진아, 2021). 한국 사회의 환경교육 패러다임은 다음 <그림 II-2>와 같이 계몽의 시대, 지식의 시대, 체험의 시대, 참여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기점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며(이재영, 2012),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접근법 등이 변화해 왔다.



출처: 이재영(2012); 장진아(2021, p.14)

<그림 II-2>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발전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은 1970년대 공해교육으로 시작되어 계몽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80년대 인지적 영역의 지식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최석진, 2004). 이후 1990년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환경교육에서 현장 체험 학습은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김인호, 김귀곤, 1998).

한국 사회의 환경교육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논의와 선언에 따라 발전해 왔다. 그중 1975년 구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제 환경교육 워크숍(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Workshop at Belgrade)’에서 채택된 ‘베오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과 1977년 환경교육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정부 간 회의에서 제창된 ‘트빌리시 선언(The Tbilisi Declaration)’은 환경교육의 틀을 형성한 주요한 논의로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트빌리시 선언’(UNESCO, 1977)에서 구체화 된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제6,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목적 수준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고(조성화, 최돈형, 2008), 현재까지도 이 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이후 2021년 전부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환경교육 역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강진영, 202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환경교육은 국제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환경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했던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남상준, 1995; 한국환경교육학회, 2003; 장미정, 윤순진, 2012).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는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회 환경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활동 주체나 파트너십의 대상이 변화해 왔으며, 활동 주제나 내용, 범주, 활동 유형도 폭넓게 확대되어 왔다(장미정 외, 2019).

특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시작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제25조), 민간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제26조) 등을 규정하면서 환경교육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2008년 독립법령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제6조)이 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를 근거로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환경부, 2020)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 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한국 정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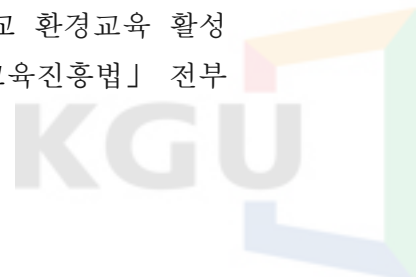
구분	비전	주요 내용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11-2015)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5개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구축, 사회 환경교육 전문인력 운영 활성 화 등 총 23개 과제로 구성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16-2020)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4개 분야와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소의 계층 환경교육 지원 확대 등 총 15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21-2025)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 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의 4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

출처: 환경부(2022) 참조.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2012년 환경교육의 거점기관인 ‘국가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1999년 폐지되었던 환경교육과를 2018년 환경교육 전담 조직인 환경교육팀으로 재설치하여 국가 환경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환경교육은 ‘환경을 위한 교육’, 즉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가르치는 참여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자신의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가거나 우유 팩을 씻는 정도의 소극적 실천 수준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통합적인 탐구 교육을 통해 시스템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장진아, 2021).

한편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대별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 마련과 발전 과정은 결국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중심의 환경교육이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환경교육은 198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적지 않은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국가적·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특정 환경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사후약방문식에 그쳐왔고, 그나마도 체계적·지속적 추진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서도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익준, 2014). 이런 문제 제기에도 환경교육은 1982년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개편되면서 과학 등 일부 과목에 환경 내용이 반영되면서 학생들에게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고등학교에 환경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이미숙, 김지연, 2013). 이후 기후위기 용어 사용이 본격화되던 2020년, 지식과 교과목 중심이던 환경교육을 넘어 현실적·실천적·미래 지향적 환경교육의 실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지속가능한발전교육 2030(ESD for 2030)’ 문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큰 변혁(big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각하는데(이선경, 2023), 여기서 큰 변혁은 개인의 변혁적 실행, 사회구조의 변혁, 첨단 기술 미래를 통해 가능하다(OECD,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사회 전반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한편, 2020년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다루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교육부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0)에 따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담 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였다. 그리고 2021년 9월 제출된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조항(제22조의2) 신설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 강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1b).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학교 ‘환경’과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교과 모두에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영역을 독립 신설하고, 위기가 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②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이 초래하였으며, 그 영향과 피해는 지역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③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기후행동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또한 이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의미와 특징,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과 불평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 행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이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과 인간의 책임감,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이선경, 2023).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지속가능한발전 교육, 생태환경교육, 환경생태교육, 생태전환교육, 기후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다(김현진 외, 2022). 예컨대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교육, 인간 중심 환경교육이 아닌 생태 중심 환경교육,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교육 등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0-2024) 발전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0)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2021년에는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부

처인 교육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등 각 부처와 관계기관들은 2021년부터 환경교육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교육부, 2021a).

한편, 기후위기가 지구생태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인간종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김종민 외, 2021)는 인식 아래 환경교육은 ‘생태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전 지구인의 인식 및 ‘삶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전환해 가고 있다(장진아, 2021). 이 맥락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발전과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시민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시민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고 있다(장진아, 2021). 즉, 그동안 환경교육은 교육과 환경정책적 측면의 이론적 논쟁이 중심이 되면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이를 둘러싼 갈등 해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여건 조성 등의 이슈는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는 기후위기 대응의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교육부, 2021b)이다. 또한 환경교육에서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과 직업 분야에서 환경문제 및 쟁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학습자의 지식, 기능, 동기, 태도 등이 결합하여 행위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한다(서은정, 2017). 따라서 생태와 인간의 관계,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을 통해(교육부, 2021b) 지식-기술-태도-행동의 통합은 물론,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의 지역사회 간 협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정보를 근거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과정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생태전환교육은 삶과 행동의 전환을 실천하는 주체로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내재하고, 필요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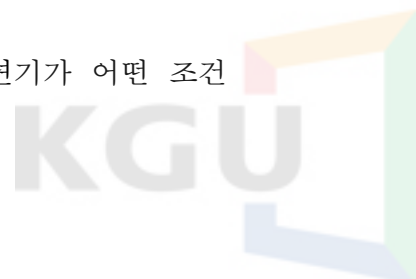
과 정보를 통해 영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실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에 관해 형성되고 있는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의 환경교육 관련 제도 및 실천의 변화와 발전 흐름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인 젊은 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단순히 환경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교육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제도적 정의

1)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젊은 세대가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정의는 학문 분야나 정책 목표를 비롯하여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예컨대, 생물학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구분하는 시기가 다르며, 청소년기 내에서도 입학, 졸업, 취업 여부 등과 관련해서 갖는 경험들이 다르다. 예컨대, 학생기의 연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또한 사춘기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질풍노도의 모습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서구 사회의 특성이며, 비서구 사회의 청소년들은 다른 특성을 보여 왔다(조혜영, 2016).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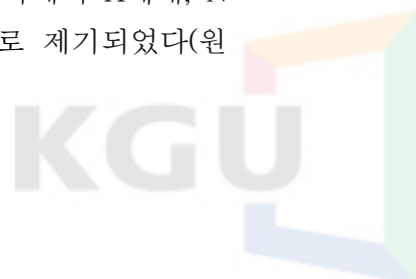
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청소년기가 어떤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란 범주와 청소년기를 근대화의 산물이자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최이숙, 2002; 김현성, 2004; 박연미, 2005; 이혜숙, 2006). 서구에서 청소년의 범주가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전의 일이다. 근대화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있었지만, 이들을 청소년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다(이혜숙, 2006). 예컨대 프랑스는 18세기까지는 청소년을 아동으로부터 구분하지 않고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람들을 앙팡(enfant)으로 불렀다(권두승, 조아미, 1998; 이혜숙, 2006). 또한 17~18세기 미국에서는 아동(child), 청소년(youth), 젊은이(young person) 등을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화, 공업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서 의무교육 제도가 마련되면서 청소년기라는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권두승, 조아미, 1998; 이혜숙, 2006).

한국 사회도 ‘청춘소년’, ‘소년’, ‘청년’이란 용어가 사용되다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은 1940년에 발간된 ‘조선어사전’에서이다(이혜숙, 2006). ‘조선어사전’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실린 것을 볼 때, 사전 발간 이전인 1930년대에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소년이란 용어가 왕성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책이나 사회 현상, 연구 등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청소년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청소년에 관한 논의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원용진 외, 2002). 첫 번째 관점은 청소년 집단의 일탈과 비행 현상들을 주로 다루는 범죄사회학, 일탈 사회학적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의 핵심을 청소년 비행과 교정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청소년들을 새로운 감수성과 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읽어보려는 시도들이다. 이 시도들은 신세대 문화에서 X세대, N세대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명명해 왔던 세대 담론으로 제기되었다(원용진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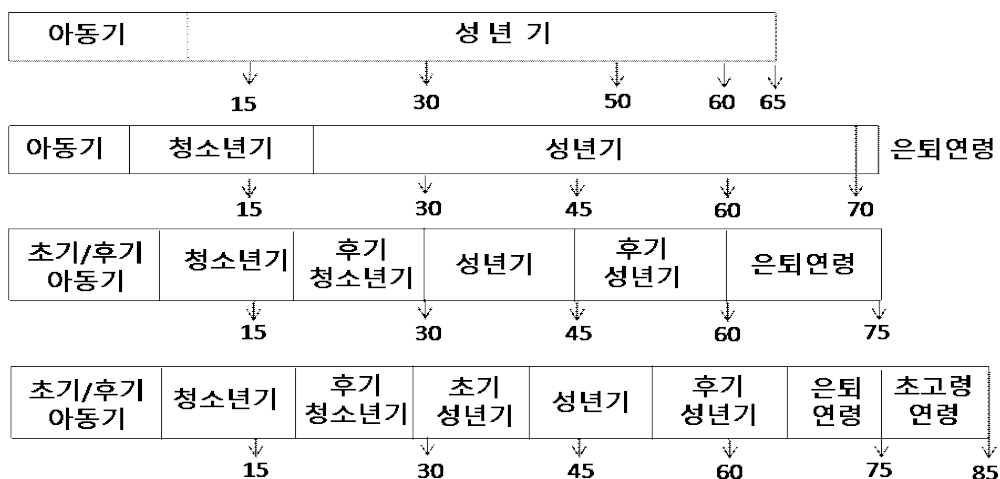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청소년 관련 초기 연구와 문헌들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단일한 특성을 가진 연령집단으로 가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스탠리 홀(S. Hall, 1904)의 관점과 같이 청소년기를 생물학적 발달단계의 한 특성으로 파악하는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Griffin, 1997). 코헨은 이러한 전통에 따른 청소년 관련 논의들이 청소년을 단일 범주(a unitary category)로 파악하고, 공통된 특징이나 청소년과 성인의 차별점을 찾아 유형화하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청소년주의(youthism)’라 명명하기도 하였다(Cohen, 1997). 청소년주의적 입장은 학문 영역뿐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의 담론적 효력으로 이어졌다. 이는 청소년을 내적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식별하고, 정상성을 지닌 성인과 대비되는 보호되고 통제, 훈육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원용진 외, 2006).

한편 청소년기가 아동기를 거쳐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아니라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나타난 ‘사회·역사적 산물’ (Gillis, 1981)의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 Gillis(1981)는 청소년 존재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이후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근대 이전에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존재했지만, 이들을 성인과 구분된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 개념은 점차 분화되었고, 사회·정치·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수용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 등을 규정하고 요구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관점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8세기 중반 이후 계몽주의자들의 등장과 함께 종래 어린아이의 관점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청소년 기간(youthland)’은 “돌보아지며 일할 필요가 없고 비도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기간(pedagogical province)’ ” 으로 탄생한 것(이광호, 2003a에서 재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탄생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바로 현재 청소년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이광호, 2003b).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라는 용어는 ‘연령’ 자체보다는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용어를 불문하고 젊은 세대의 모습은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존재’, ‘의존에서 자립 준비 단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강주연, 2021). 특히 사회변화 속에서 이뤄진 공교육 기간의 확대와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 강화와 같은 흐름은 <그림 II-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동 유예 연령집단 증가와 청소년기의 확장 현상으로 나타났다(Hurrelmann, 1999; 원용진 외, 2006).



출처: Hurrelmann(1999, p.23); 원용진 외(2006, p.337)

<그림 II-3> 청소년기의 확장

이러한 맥락에서 조한혜정(2020)은 후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Youth’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고 강조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청년인 대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일본과 1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소년궁’과 40세 장년을 포함하는 ‘공산주의 청년단’에 이르는 범위를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중국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결국 젊은 세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규정하느냐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와 지위의 변화, 젊은 세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하위주체나 독립된 집단으로 보는 세대론 기반의

연구(Fornäs & Bolin, 1995)들도 이루어졌다. 만하임(Mannheim, 1952)은 세대 문제에서 동년배 집단과 세대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에 주목하면서 세대는 신분, 계층, 계급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질서의 범주로서 그 지위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집단성 개념과 집단화 개념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Jureit & Wildt, 2014). 또한 사람들은 특정한 세대 위치에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며, 세대 위치는 개인에게 특수한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를 부과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나 유년기, 성년기, 장년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사회적 공간 내에서 공통 위치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같은 시기에 출생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과 삶의 내용 등에 참여할 가능성과 동일한 종류의 의식층을 지니고 참여할 가능성이 공통된 위치를 구성한다고 보았다(Mannheim, 2013). 코호트나 세대 관련 연구들은 ‘출생 코호트’ 집단이 생애주기 단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사회화 및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의식과 태도 및 행위 양식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출생 코호트라 할지라도 청소년기에 역동적인 사회 변동을 경험한다면 여타 세대들과는 다른 세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인정, 2016).

청소년을 보호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주체로서 바라보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관점도 등장하였다. Gutiérrez(1994)는 임파워먼트를 개인의 내적, 대인관계적, 정치적 힘을 증진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성장, 회복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개인적인 요소를 다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근본 원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나아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시민참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Dallago et al., 2010; Wagaman, 2011; 서민지 외,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세대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 즉, 젊은 세대가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전망(임홍택, 2018)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관점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생산방식의 변화, 공교육 기간의 확대 등에 따른 청소년기의 확장에서 기인한 자연발생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사회구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 등에서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강주연(2021)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행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 사회세대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표 II-5>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5>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구분	이행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	사회세대론적 관점
시간	젊은 세대는 성인이 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	현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음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 상황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현세적 패턴을 만들며 살아가며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패턴이 됨
존재하는 장소와 가치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적, 졸업 등 성과를 냄	여가와 문화공간 속에서 느끼는 쾌락과 성취를 중요시함	젊은 세대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가 기준이 되며 젊은 세대가 경험한 환경은 세대 성향과 도전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냄
삶의 기준점	성공적인 이행을 완료한 성인을 기준으로 함	현재를 함께하는 동년배들과 찾아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에서 성인의 모습과 동년배들의 모습을 절충하며 세대 패턴을 만들어 감

출처: 강주연(2021, p.13-14)

이외에도 젊은 세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미래세대로 보는 관점이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

도로 훼손시키고 있다.” 라고 경고한 1972년 출간된 로마클럽의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 of Growth)’가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서용석 외, 2011). 이후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자원 보존의 필요성과 같은 요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되면서 국가 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이 국제환경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였다(장재현, 2012). 1992년 개최된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에서 제시된 27개의 행동 원칙 중 원칙 3에서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외교통상부, 2011). 특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작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과학자, 농부, 기업, 노조, 환경단체, 원주민 등의 9개 그룹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동시대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국부(國富)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당대(當代)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인 자산을 축적해 후속 세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라고 역설한다(Rawls, 1999). 즉,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유산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서용석, 2012). 이러한 흐름에 따라 UNESCO는 1997년 제27차 파리 총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

언을 채택했으며, 2007년 5월에 설립된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Council, WFC)는 주로 기후 보안에 초점을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와 같은 법규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서용석, 홍정훈, 2014).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는 미래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세대’라는 단어에서 자기 자식이나 손자, 적어도 자기의 생물학적 후손을 생각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자기 자손도 아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세대’의 진정한 의미이다. 미래세대는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 미래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자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미래세대란 우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고려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Dator et al., 2006) 이러한 정의는 미래세대를 생물학적인 관계와 국적을 초월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현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한다. 인류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자연과 환경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물적인 관계나 국적을 초월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세대의 인류를 위한 적극적인 결정과 행동을 요구(서용석, 홍정훈, 2014)한다.

이 외에도 조나단 글로버(Jonathan Glover)는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투표권을 갖거나 권력을 얻을 수도 없는 세대 또는 잠재적으로 현세대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는 집단”으로 보았다(서용석 외, 2011). 반면, Huey-li Li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매 순간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로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공동체에 미래세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서용석 외, 2011).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 ‘세대 간’의 범주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문제로

미래세대의 개념적 범주보다는 현재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홍종현, 2020). 이런 의미에서 서용석, 홍정훈(2014)은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세대 간 정의를 인용하여 “미래 또는 과거 세대가 현세대에 대해 합법적인 주장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세대는 미래 또는 과거 대에 대한 상호의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시대에서 미성년자 등,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들은 지금과 같은 인권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미래세대 역시 확장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대 간 이익 다툼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그리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세대 간 정의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세대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형성은 어느 정도 미래세대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인데, 국제적 흐름은 미래세대 인권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젊은 세대에 관한 제도적 정의와 의미

한 사회에서 ‘젊은 세대(young people)’를 일컫는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와 관련하여 대체로 어린이, 아이, 아동, 청소년, 청년, 미래세대 등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젊은 세대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표 II-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6〉 국내법상 젊은 세대에 대한 명칭과 연령 범위

해당 법령	명칭	연령 범위	비고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요보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자, 6세 미만의 아동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등	14세 미만	실종 당시의 나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 19세 미만	연 나이 19세 제외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근로기준법	근로소년	15세 미만	사용금지(취직 인허증 소지시 가능)
		15~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원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형법	미성년자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교 재학자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만 20세 성년기 19세를 성년으로 봄
소년법	미성년자 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	연 나이 19세 제외
청년기본법	청년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15세 이상 - 29세 이하	

출처: 문호영, 최창욱(2015)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또한 청소년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 등 인간 발달의 특성과 공교육과 같은 사회제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을 초기 청소년(9~14세), 중기 청소년(15~18세), 후기 청소년(19~24세)의 세 단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지경 외, 2015).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 정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리 논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에서는 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을 연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민법」, 「소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기 또는 그와 유사한 발달 시기에 대한 연령 범위를 대체로 18~19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성인으로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 증대 및 지연으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의 경계는 이미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가 확장되고 연장된 후기 청소년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서로 다른 집단으로 간주되었던 20대 청년과 후기 청소년은 단지 불리는 명칭이 다를 뿐 삶의 동일 선상에 놓인다(김지경 외, 2015).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이루어지는 후기 청소년기가 ‘생애 단계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와 더불어 연령 범주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전상진, 정주훈, 2006; 오찬호, 2010; 김지경 외, 2015). 또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세대 간 - 세대 내 불평등 심화 등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의 독립된 성인기로서 갖는 역할과 의무에서 유예되어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유예 ‘당한’ 상태에 있다(이광호, 2003a; 오찬호, 2010; 전상진, 2011). 따라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에 따른 경계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이 34세 이하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성인기 이행의 유예가 30대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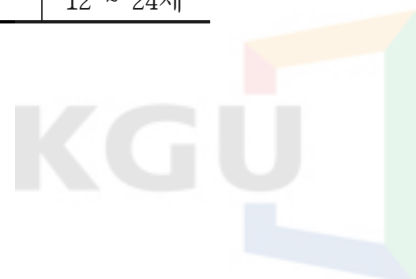
한편 젊은 세대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단체의 정의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인 “Youth”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청소년정책 관련 글로벌 온라인 웹사이트인

Youthpolicy.org에 의하면 청소년 연령을 규정한 180여 개 국가 중 약 47%가 10대와 20대를 포괄하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 50%가 30대를 포함하고 있다(김정숙 외, 2015; 이창호 외, 2016). 반면, 영국, 이스라엘, 미얀마 등과 같이 10대만을 청소년정책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등과 같은 국가는 40대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이창호 외, 2016). 또한 세계기구들은 국제 협약이나 관련 정책 자료에서 정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젊은 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집단의 연령대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조에서는 아동(child)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세계보건기구(WTO, World Health Organization)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 산출 시 15~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WB, World Bank)은 아동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12~14세로 규정하고 있다(이창호 외, 2016).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0~19세’를 ‘adolescent’, ‘10~24세’를 ‘young person’, ‘15~24세’를 ‘youth’로 각각 구분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21).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관련된 집단의 연령 구분은 다음 <표 II-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 국제기구·단체에서 정의하는 젊은 세대 관련 집단의 연령 구분

기관	집단을 정의하는 용어	연령 구분
UN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child)	18세 미만
UN 청소년 세계실천 프로그램 (UN's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 ~ 24세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sation)	청소년(youth)	15 ~ 24세
	청소년(adolescent)	10 ~ 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 ~ 24세
세계은행 (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 ~ 24세

출처: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21, p.30)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한편, 한국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의 <표Ⅱ-6>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같이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은 각각의 기본법과 관련 법령들에서 정의하는 연령 범위가 서로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 대한 연령적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이나 그 의미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제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연령에 따라 정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대의 중복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문호영, 최창욱, 2015; 장민서 외, 2017; 강주연, 2021). 그럼에도 전체 사회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서 젊은 세대 관련한 대상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연령 이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김지경 외, 2015). 왜냐하면 관련 법령은 연령에 따른 큰 틀을 제시하고, 정책은 관련 법을 근거로 정책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상태 등을 전제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젊은 세대 관련 집단의 연령 범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젊은 세대 관련 집단을 정의하는 명칭과 연령기준은 다음 <표Ⅱ-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정책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청소년과 청년 연령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젊은 세대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다른 각 국가와 사회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담론 형성과 패러다임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유엔(2005)은 청소년정책을 기존의 인간 발달단계 구분에 기초한 ‘연령 분절적 접근(age-separated approach)’에서 ‘연령 통합적 접근(age-integrated)’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UN, 2005; 이광호, 2008). 특히, 연령 통합적 사회는 그 사회에서 연령이 진입장벽으로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연령 유연성(age flexibility)’과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연령 다양성(age heterogeneity)’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Riley & Riley, 2000). 그리고 연령 통합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표 II -8〉 주요 국가의 젊은 세대 관련 집단 정의 명칭 및 연령 기준

국가명	명칭	연령	근거
일본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 넷 이용 환경 정비 등 에 관한 법률」
		3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젊은이(若者)	규정 없음(30대 포함)	「아동·젊은이 육성 지원추진법」
중국	청(소)년	14 ~ 28세	중국 공산주의 청년 단 (All-China Youth Federation)
미국	아동(Child)	13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시민법」, 「공 정노동표준법」, 「표 준소년법」
	청소년(Youth)	14세 이상 ~ 21세 이하	「인력투자법」
독일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아동(Kinder)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Heranzwachsende)	18세 이상 ~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 27세 미만	
영국	아동(Child)	13세 미만	「성범죄법」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프랑스	청소년(jeunes)	3 ~ 30세	체육, 청소년, 대중교 육 및 지역사회부
	청년(jeunes)	~ 26세	「기획균등법」

출처: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21)의 자료 일부를 수정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분절적인 대상 집단으로 정의되어 온 아동, 청소년, 청년을 아울러 ‘젊은 세대’로 정의하는 연령 통합적 접근은 각각의 집단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개별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인 사회구성 원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iley & Riley, 1999; 정경희, 2004).

3. 선행연구 고찰

1) 기후위기 언론보도와 담론 형성 연구

언론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위기 관련한 국제 회의와 국제협약, 기후 제도와 정책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대중들의 이해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언론은 기후위기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전문가 의견제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하기도 한다. 특히 대중들이 과학지식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정보원으로 뉴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Huber et al., 2019). 이런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시현(2024)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처음으로 수립된 2011년부터 ‘제3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대책’이 발표된 2023년 6월까지 국내 54개 언론사가 보도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류의 책임 조명과 반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측면’의 기사가 원인 진단과 전망에 집중하는 ‘과학적 측면’의 기사 보다 약 8배 많았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된 중앙정부 정책 관련 기사가 주류였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실천과 관련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윤순진(2022)도 2020년 여름, 장마와 태풍이 발생한 기간 중 포털 네이버에 생성된 뉴스 중 기후위기 관련 739건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반의 기사가 사회면으로 분류되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상황과 원인 진단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상기후가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미칠 영향 등 심층 기사는 상당히 적어 대중의 전환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 전달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조현국, 이봉우(2021)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국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기후변화 관련 뉴스 기사를 워드 클라우드와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강조됨에 따라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종합일간지보다 경제 분야와 지역신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마켓, 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뉴스의 중심 내용이 되면서 지자체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LDA분석 결과 총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특히 2009년의 덴마크, 2015년 파리에서의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등 범정부적인 협약과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이 뉴스 기사의 비중에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찬수(2019)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이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기에만 보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입체적 조명을 위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먼저 최이슬, 조원빈(2023)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구조적 토픽 모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자연환경 문제보다 기후변화 의제 관련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사안과 그에 대한 대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들에서 탄소배출이나 온난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점차 감소했고, 녹색경제나 녹색성장, 대북 관계 등과 연관된 내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보수 언론은 경제적 접근, 과학기술,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소를 강조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개입, 구조적 책임, 자연환경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지은(2023)도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일간지, 지역지 기사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결과 중 언론사 정치 성향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언론의 현실 반영과 현실 영향력이 보수와 진보 언론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치권 영향’ 의제는 보수 언론에서만 유의미한 현실 반영 보도가 검증된 반면, ‘기후위기’ 의제는 진보 언론에서 더 유의미한 현실 반영 보도로 현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김수겸(2022)도 언론과 정권별 기후변화 정책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면서 정책 사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프레임 차이가 있으며, 정권에 따라 언론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한빛나라 외(2021)도 최근 10년간 기후변화 관련 뉴스 데이터를 LDA 분석한 결과 보수 언론은 이상기후, 빙하, 해수면 등의 예후 관련 보도 비중이 많은 반면, 진보 언론은 인류문명, 생태계 등의 보도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외(2017) 및 주영기(2013)도 보수와 진보 언론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기후변화의 현황과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진단’ 프레임과 대응, 해결 방안에 중점 둔 ‘예후’ 프레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수 언론은 ‘예후’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Yun et al.,(2014)도 언론보도가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뿐만 아니라 경제지도 보수에 가까운 정파성을 보인다고 보았다. 진보 언론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임인재 외(2013)의 기후변화 원인과 대응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현철 외(2011)는 한국 사회의 3개 유력일간지를 중심으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적 논의에서 국내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후변화 관련 뉴스 프레임은 사실 나열형에서 행동 조직화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 개발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언론과 경제분배와 보존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언론이라는 구도가 기후변화 문제에 차별적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보수와 진보 언론이 편향적 보도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나 회의, 협의 사항 등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즉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통한 언론의 역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관련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대중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불균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윤순진(2016)은 언론보도가 기자들의 인식과 이해,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국내 보수와 진보성향의 신문사와 방송사 등의 언론사 기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실제로 인식하고 인간의 유발 책임에 동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기사의 상품성에 기초한 기사 작성에 매몰되면서 기후변화 보도를 비중 있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의 기자들은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증거 제시, 논쟁이 되는 내용,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기자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 반면 일부 기자들은 국익을 넘어 보편적 문제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민정 외(2021)는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최혜영, 신동훈(2011)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신문 기사 분석을, 지명훈(2015)은 한국과 미국 언론의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연구했다. 홍영식, 이덕로(2019)는 한국의 일간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정부 주도의 개발과 관료적 행태가 기후변화 정책에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의 미성숙과 기업의 참여 미흡에 대한 지적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후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지역 수준의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부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가 문제해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젊은 세대와 시민참여 연구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는 과학기술이나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청회,

자문회의, 여론조사,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합의 회의 등 많은 영역에서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시민의 역할은 결정된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나 투표권 행사 정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삶을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서의 좋은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은 주체로,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론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론적 인식의 토대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지구 시스템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삶의 전환은 존재와 세계를 인식하고, 사고의 전환을 토대로 한 삶의 변화(남미자 외, 2020)를 의미한다.

다양한 참여 모델 개발은 시민들이 숙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도 시작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실제 결정된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체계가 실험되었다. 2015년 6월 6일, 77개국 세계 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WViews)’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었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재단(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을 중심으로 한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 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운영본부에서 취합해 보고서 형태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세계시민회의(WWViews)는 세계 시민 숙의를 위한 방법인 ‘지구적 시민 숙의(global citizen consultation)’를 통해 유엔 등 국제적 수준의 논의와 협상에 있어 복잡한 거버넌스 이슈에 세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취합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정책 이슈에 시민과 정책결정자 간 ‘민주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시민회의(WWViews) 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민 의견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세계시민 의견과 한국 사회 시민 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

졌다. 특히 세계시민회의의 경험이 주는 의미와 과학기술 시민성에 관한 연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김직수, 이영희(2015)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WViews) 결과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구,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 약속과 이행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제를 영역별로 공통된 특징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시민 의견의 주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갖는 의미를 도출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세대 간 갈등 요소가 나타나면서 세대 문제에 관한 숙의와 토론,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주형, 이윤정(2015)은 시민 숙의라는 정책 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 프레이밍 되면서 우리 사회에 적용된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평가와 한계, 가능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세계시민회의 모델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지역개발에 관해 국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참여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보았다. 이영희, 정인경(2015)은 한국 사회에서 세계시민회의의 전개 과정을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구축 관점에서 평가했다. 그 결과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회의 참여자들은 지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민성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강운재 외(2015)도 일반시민들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이슈를 전문지식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시민참여의 기회’ 부재가 ‘낮은 단계의 시민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최근 기후위기 논의에서 “더 이상 기후위기를 기성세대에 기대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결석 시위를 주도한 그레타 툰베리가 주목받으면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청소년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선 최규연(2023)은 단기간에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룬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연구를 통해 기후 결석 시위의 세계화에는 대안적

정치활동의 열린 구조를 중요 요건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현정 외(2022)는 기후 시위의 현상학적 구조를 기후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시간성,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며, 갈등과 혼란에 직면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혼란을 감수하게 만드는 기후변화 존재를 강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보았다.

강다연(2022)은 ‘청소년 기후행동’에 참여하면서 기후행동가로서의 정체성 발달 과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로부터 기후행동가로서 정체성이 발달하고, 스스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력 발휘 모습을 발견했다. 또한 ‘청소년 기후행동’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쟁점(SSI, Socio-Scientific Issues)과 관련해 사회·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사회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과학 지식과 기능, 가치에 근거해 문제해결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훈, 윤순진(2022)은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참여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회원 대상 환경교육과 전 국민 대상 평생 환경교육, 환경단체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 토론 중심의 교육 방식, 전국 단위의 청소년 환경기후 모임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현명주, 김남수(2021)는 기후 결석 시위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참여를 가로막는 기존의 경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해체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재구성하는 ‘경계 짓기 경험’으로 보았다. 여기서 기후 결석 시위의 ‘경계 짓기’는 기존의 교육과 교육이 배제해 온 것을 드러냄에 있어 청소년들이 기후 결석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관습적으로 재생산해 온 것의 경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체성, 참여와 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 고유한 소통과 표현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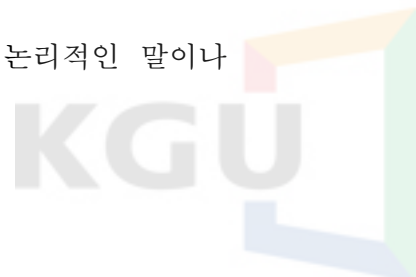
명주, 정희라(2020)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적인 모델로 청소년 기후행동의 이해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우선 황세영(2023)은 청소년 기후행동의 한 형태로 지역사회 정책 참여 활동의 의미를 행위 주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기회가 주어지면 기후위기 문제와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수빈, 윤순진(2022)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소통 대상인 미래 세대를 포함한 10대 중후반부터 만 65세까지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X세대, 전 기 Y세대, 후기 Y세대, Z세대로 구분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세대 간 인식 및 대응 행동 차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보다는 빈부격차, 경제 불안과 같은 경제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기오염·미세먼지나 쓰레기·폐기물 문제와 같이 가시적인 환경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상 속 실천과 경제성장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Z세대와 후기 Y세대인 청소년·청년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노년 세대보다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며, 특히 미래세대로 지칭되는 청소년·청년 대상 기후변화와 환경 감수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사했다.

4. 언론보도와 비판적 담론 분석

1) 언론보도와 담론

담론(談論, discourse)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말이나



글, 또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윤철수, 2018). 담화(談話)나 언술(言述), 또는 언설(言說)이라는 말과도 혼재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윤철수, 김경호, 2017). 담론 분석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관심 영역이 다양하다. 따라서 담론 분석의 학문적 전통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 담론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은 성격에 따라 정치 담론, 사회 담론, 정책 담론, 미디어 담론, 문화 담론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누가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면 담론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책 담론(policy discourse), 학술 담론(research discourse), 기업 담론(business discourse)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윤철수, 2018).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면 담론 대상에 따라서 공공 담론(public discourse), 전문가 담론(special discourse), 대중 담론(mass discours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현식, 김성해, 2014). 그리고 사설, 평론, 연설문, 기고문, 판결문, 전문가의 소견서, 여러 시각적 기호와 그림, 이미지, 영상 등도 다양한 차원에서 담론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담론의 유형과 논의 속에서도, 담론 개념에서는 공통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이나 이야기”라는 점이 강조된다(Said, 2003; 정재철, 2002; 이기형, 2006; 백선기, 이경락, 2009; 류웅재, 2010; 류희림, 2013; 박현식, 김성해, 2014; 최종환, 김성해, 2014; 박옥규, 2016; 최낙진, 2015; 설양환, 2017). 사이드(Said, 2003)는 담론을 “직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념 작용과 논리적 판단을 거친 질서 있는 표현의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반 다이크(Van Dijk, 1988)도 담론을 발화(發話), 즉 이야기를 전하는 주체와 대상, 문맥과 맥락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푸코(Foucault, 1971)는 담론을 “논증적인 언어체계”임과 동시에, “언표(statement)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표란 언설이나 담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說) 기호들의 집합(言), 즉 ‘언설’과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5)는 담론이란 “세상을 행위자가 의미 짓는 대로 구성하여 보

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통해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윤철수, 2018)고 보았다.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사실, 의견, 감정 등과 같은 정보들이 전달된다. 그러나 담론구성체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는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가치가 개입되면서 편향적으로 해석되어 특정한 공감, 판단, 결단, 행위 등을 유도하게 만든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성이 구성되면 개인, 사회, 민족, 국가 등의 사회적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고, 새로운 권력이나 질서 형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는 기존 이론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우리 현실의 담론 연구 자체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음을 상정한다. 담론은 그 자체에 사회의 역사성을 담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담론은 조직화 된 말로 사회적 힘을 발휘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사유 방식, 행동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실천의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가 된다. 담론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창출하는 논리성을 갖는 언술 체계 혹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체계다(이영환, 2003; 홍현미라 외, 2008).

담론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아닌 진리를 진리로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 지식과 권력의 견고한 관계를 구성하는 언어규칙의 조건들이며 제도를 비롯한 사회작동의 여러 층위에서 의미와 힘, 효과를 발휘한다(우아영, 2007). 담론 연구의 뒷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혁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Macdonell, 1992). 그러므로 사람들은 담론을 통해 사회적 존재와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담론 분석은 특정의 개념을 그 개념의 표면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이 생성된 사회적 맥락과 권력구조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장덕현, 2015). 맥락의 주관적·인지적인 차원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사회 인지적 접근으로 대표되는 반 다이크(van Dijk)의 핵심 개념인 맥락모형(context models)은 “행위자에게 적합성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속성에 관한 주관적 재현(정의)의 정신적 모형”을 의미한다. 담론행위자들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된 맥락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 속에서 제도화되는데, 그것은 구체

적 행위 상황 속에서 “담론의 생산과 이해가 그것을 사회적 환경에 적절한 것이 되게끔 적응시키는” 통제기능을 수행한다(van Dijk, 2001). 따라서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어떤 담론을 특정한 의미로 읽어내게끔 하는 사회적 맥락모형과 그것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적 기제를 규명해야 한다.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담론 분석 접근법은 구조주의와 기호학적인 언어의 모델, 그리고 탈구조주의와 탈근대주의와 같은 두 개 그룹의 지적이고 방법론적인 전통을 주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담론이론은 사회기호학, 사회언어학, 화용론, 스피치 액트(speech act) 이론, 대화분석 등이다. 둘째, 담론이론은 비판적 담론 분석, 포스트 맑스주의, 민속지학, 수용자론과 같은 영역들이 복합된 간(間) 학제적 특징을 갖는다(이기형, 2006; 정재철, 2015). 학술적으로는 개념적 정의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학문 분야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거나 명료하지 못하게 정의되기도 한다.

한편, 미디어 담론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생성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기자나 미디어 자체의 이념, 더 나아가 수용자들의 심리까지도 다양하게 연계된 복합적인 산물이다.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공 담론(public discourse)’을 분석 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 내포된 ‘프레임(frame), 특정한 입장, 사회적 실천들 그리고, 핵심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박현식, 김성해, 2014)을 의미한다. 또한 미디어 담론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텍스트와 영상, 광고 등을 통해 생성되는 담론이라는 점과 이렇게 생성된 담론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전파되는 매체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디어는 단지 현실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현실을 중개하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현실구성과 중개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상이 형성된다(박선희, 2002). 특히, 신문은 대중에게 무엇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가를 알리고, 이해하도록 돕는 해설 기능을 하며, 뉴스의 중요도와 의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과 지도를 통해 대중의 여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김희영, 2001). 따라서 신문

은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어진 사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여 대중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문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담론화된 현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담론적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인식을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담론적 실천 효과까지 발휘하기도 한다. 일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항으로 개념화하는 담론 프레임과 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과 JTBC 뉴스 보도를 텍스트로 하여 비판적 담론 분석을 한 연구 사례가 있다. 그 결과, 학생 인권은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지닌 대립 프레임 안에 놓임으로써 기존의 상식 속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당초 취지를 좌절시키는 사회적 실천 효과를 낳았다(이기일, 성열관, 2012).

언어 중심적 담론이 텍스트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적(靜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미디어 담론은 시대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중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動的)’ 성격이 강하다(윤철수, 2018). 또한 미디어 담론은 ‘미디어’에 관한 담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제나 현상, 사건에 대해 미디어가 전개하는 담론을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미디어 담론은 미디어 관련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학문과 관련해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디어가 사람의 삶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이기호, 2006) 때문이다. 여기서 막강한 영향력이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노출 정도가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담론은 의미의 연쇄로만 파악해 실제 대상의 사회적 제도적 과정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디어 담론의 논의에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푸코(Foucault)와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이론이다. 이들은 담론을 기호들의 체계나 언어구조적 차원이 아니라 사물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푸코(Foucault)는 시대 변천 과정에서 담론들이 어떤 조건들을 바탕으로 변환되었나에 주목하면서 담론의 의미 형성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배제’의 절차를 거쳐 담론의 질서가 구축된다(Foucault, 1971).

한편 언론사들은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통해 기사를 취사선택하거나, 뉴스 정보의 내용에 대한 관점을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등 조정과 편집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틀 짓기’ 과정에 해당한다(윤철수, 김경호,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는 현실의 재구성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극본에 따라 연출되는 가공된 현실이다. 또한 뉴스 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틀로 규정(류희림, 2013)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영철, 2012).

고프만(Goffman, 1974)은 뉴스 프레임을 언론수용자가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해석의 틀’로 정의하고 있다.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를 통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틀”로, 갠슨과 래시(Gamson & Modigliani, 1987)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들로 볼 때 프레임은 이슈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의 해석적 역할을 한다. 또한 엔트만(Entman, 1991)은 뉴스 프레임의 주요 특성을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으로 보고, 언론이 사건 보도에 있어 특정 요소를 선택해 강조하거나 배제하면 대중들은 보도된 내용대로 현실을 해석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 보도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따라 대중들이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는 현상은 프레임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문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김홍규, 2006; 김혜영, 2009; 정재희, 2009; 김지선, 2015; 이은주, 2015; 이순희, 정지현, 2017; 이지영, 2019)은 담론이 지배 세력의 이념과 권력을 지속시키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고화되어 대중의 인식과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영향을 준다. 신문에 나타난 담론을 분석하여 담론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정재희, 2009; 김윤민, 2016)도 신문사가 자신들이 견지하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담론을 형성하여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영향을 끼친다(이지영, 2019).

특히 기사 담론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언론과 이데올로기, 독자 등의 관계를 파악했던 반 다이크(van Dijk, 1988)는 뉴스 보도 자체를 미디어 담론

유형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뉴스 담론의 의미론적 거시구조 분석은 헤드라인(headline)과 리드(lead)가 어떻게 기술되고, 뉴스 보도의 원래 텍스트 소스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요약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헤드라인은 리드 문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본문 요약은 물론 담론의 상황을 정의한다. 즉 텍스트의 요약적 서술(abstract description)을 통해 의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van Dijk, 1988). 이는 결국 언론사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뉴스 프레임 구성을 통해 대중들이 언론사가 전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뉴스 프레임 구성 양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언론의 정파성은 이슈와 정치적 사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보나 단서를 제공하는, 일종의 준거집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송현주, 2015). 정파성은 언론사의 보도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된 이유는 기성 체제의 핵심 영역과 그로부터 소외된 엘리트 집단 간 권력 이동에 따른 헤게모니 투쟁,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직 민주화 이후 복합적인 사회 갈등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점 등 두 가지 차원(김영옥, 2011)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은 언론사 간의 정파적 대립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배 블록의 헤게모니 위기에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강명구, 2004)이다. 언론사의 정파성 분석 요소로는 취재원이나 논조가 있다. 취재원은 기사의 출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개인 취재원과 기관 취재원(청와대, 정당 등)으로 나누어진다. 취재원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이들 개인 또는 취재원들의 유형이나 성격,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코딩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정파성을 판단하였다(윤영철, 2000). 또한 논조는 논설이나 평론 등의 경향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는 사설이나 칼럼 자료는 정파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최진호, 한동섭, 2012).

결론적으로, 미디어 담론 연구에 있어 ‘정파성(partisanship)’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 중 하나로 정치적 무리의 파벌을 뜻하는 정파(政派) 또는 당파(黨派)와도 비슷한 의미다. 그러나 보통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은 뉴스 프레임이나 담론을 통해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정적 측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학계의 논의를 보면 정파성을 “정당에 대한 정서, 인식 및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 (송현주, 2015)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이 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 또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관점, 가치, 기억 등을 편파적으로 전달하는 성향” (박현식, 김성해, 2014), “언론이 특정한 정치세력 및 집단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김동윤 외, 2013)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언론의 정파성을 수용자 영향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정훈, 이상기, 2016)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의견을 다루는 것은 다양한 수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노현주, 윤영철, 2016)는 시각들이다. 이러한 언론의 정파성은 서구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다. 이는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정파성이 갖는 고유한 성격 때문이다. 언론의 정파성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이념과 노선보다는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저널리즘에서 정파성이 표출되는 형태는 논리적 근거에 기초한 이성적 비판이나 논쟁보다는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공격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박영흠, 김균, 2016).

2)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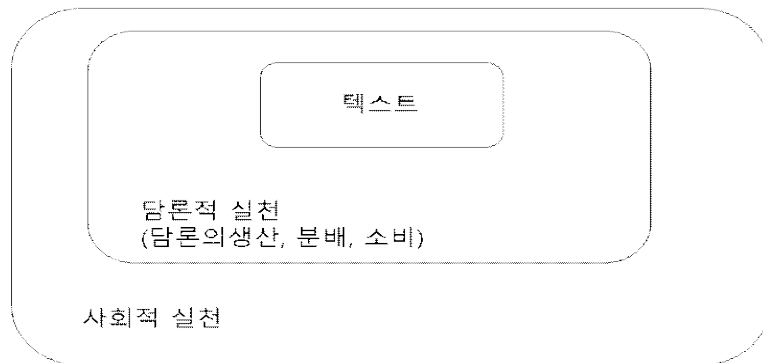
비판적 담론 분석 학파는 특정한 텍스트 분석 방법과 배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추구한다. 그들은 ‘담론 분석을 통한 사회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학문 간 제도적 장벽을 넘나드는 학제 간 협동(inter-disciplinarity)과 이론적·방법론적 다각화를 추구한다.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을 발전시킨 이론 틀과 방법론을 보다크(Wodak & Meyer, 2001)는 4가지

로 분류하였다. 첫째, 변증법적-관계론적 접근(dialectical-relational approach)은 다양한 언어학 이론들을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통과 통합시킨 접근법이다. 둘째, 담론사 분석(discourse-historical approach)은 담론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담론 분석에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접근법이다. 셋째, 사회 인지적 접근(socio-cognitive approach)은 담론행위자들의 주관적 인지 세계와 담론의 인지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적 차원이 지배와 불평등의 재생산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주목한 접근법이다. 넷째, 사회행위자 접근(social actors approach)은 앞의 세 가지 접근이 텍스트, 맥락, 기능을 중요시했다면 사회행위자 접근은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관계, 즉 상호작용의 동학 분석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Fairclough, 2003, 2012)으로 담론의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지배적 이념을 지지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가시화하게 한다(Fairclough, 2003, 2012; Devereux, 2014).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의 이해와 그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Jäger & Maier, 2009). 비판적 담론 분석에 의한 비판은 우리가 익숙하게 의존해 온 관행을 지적하는 것으로, 어떤 것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비판이 아니라 어떤 일들도 우리가 믿어 왔던 것처럼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판이다(Foucault, 1988).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3)에 따르면 구성하는 실천으로서의 담론은 특히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사회관계들, 그리고 지식과 믿음의 체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구성적이다. 담론과 사회 변동 간의 관계에 주목한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을 텍스트와 기호체계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인식하면서 담론과 사회 변동 간의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는 <그림 II-4>와 같은 3단계의 분석 틀에서 담론을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구성하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담론을 실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Fairclough, 1992; 1995; 이예슬 외, 2019).





출처: Fairclough(1992, p.73)

<그림 II-4>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 분석모델

우선 텍스트적 실천은 어휘,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분석으로, 어휘 선택 등을 통해 텍스트 간의 사용 빈도와 결합 관계 등을 분석한다. 담론적 실천은 담론이 생산, 분배,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텍스트가 이용되고, 어떠한 맥락이 결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Fairclough, 2003). 구체적으로는 발화의 힘(the force of utterance), 결속 구조(cohere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신명선, 2002).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분석은 담론의 사회적-문화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황적 맥락과 사회와 문화, 제도와 관련된 정치적 측면, 가치 및 정체성의 문제가 강조된다. 이를 통해 특정의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사회적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Fairclough, 2003). 실천(practice)이라는 용어는 실천의 주체와 대상, 목적을 문제 삼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능동적인 참여와 비판하는 의사소통 주체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담론 사건(discursive event)이 사회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론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constructive effect)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명선, 2002). 그러나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은 단계화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실천이 담론적 실천을, 담론적 실천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으며 각각의 차원을 분리하여 텍스트를 읽거나 텍스트 분석 후에 담론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는 방식을 지양한다고 볼 수 있다.

반 다이크(van Dijk, 2001)는 비판적 담론이론을 ‘담론, 권력, 지배, 사회적 불평등과 담론 분석의 위치를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과 사회 불평등의 담론적 재생산에 관한 이론 형성과 비판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적 운동”으로 보았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연구들이 “피지배집단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배관계를 연구하고, 피지배집단의 체험을 지배담론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지배집단의 담론적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고, 지배담론에 대한 대안을 피지배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van Dijk, 2008). 보다크(Ruth Wodak) 역시 비판적 담론 분석의 목표가 “기호학적 자료들에 관한 체계적 탐구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탈신비화”하고, 나아가 “권력의 구조들과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Wodak & Meyer, 2001). 또한 담론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담론이란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되는 언어 사용’이며,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특정한 세계관 하에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지칭한다(Titscher et al., 2000).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담론은 담론과 사회가 맺는 변증법적 관계, 즉 담론이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이자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구성적인 실천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 학파의 담론이론에서 강조점은 “언어와 언어 사용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 (Fairclough, 1995, 2001)로 담론은 사회의 비언어적 영역들과 관계 맺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socially conditioned) 과정이자 사회적 실재를 구성 socially constitutive)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학파는 담론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조한다. ①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특히 담론과 권력 불평등 간의 관계 규명에 비중을 가지고 담론 자체의 권력 효과, 담론 밖의 권력과 담론 간의 관계, 담론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투쟁을 모두 포괄하는 ‘권력으로서의 담론’이다. ② 담론은 지배와 권력 효과를 낳는 동시에 지배집단과 저항

집단 간의 투쟁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내적 긴장, 서로 다투는 담론 간의 갈등, 이를 통한 담론 질서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 ‘행위와 투쟁으로서의 담론’이다. ③ 의미는 텍스트를 누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텍스트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권력 효과를 낳는지 ‘맥락의 중요성’이다. ④ 담론을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담론의 언어적 질서 자체가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같이 여기는 관념론적 오류(Macdonell, 1986) 극복하기 위해 비언어적 형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갈등의 맥락 속에서 특정한 담론의 생성·재생산·위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담론의 사회적 환경’을 주요한 과제로 여긴다.

신진욱(2011)은 비판적 담론 분석의 한계와 지배관계를 치밀하게 폭로하기보다는 규범적 판단의 선언적 전제 경향과 언어적 전략과 장치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의 작동 양식에 대한 분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론의 지배 기능과 헤게모니 효과를 드러내는데 치중한 나머지 담론의 적대성과 균열, 담론 투쟁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비판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면 비판적 담론 분석의 비판적·해방적 목표는 힘과 예리함을 더할 수 있고 주장하였다(신진욱, 2011).



제3장 연구방법

1. 자료 분석

1) 자료 수집과 조사 기간

기후위기에 관한 미디어 담론과 젊은 세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국내 4개 종합일간지의 언론보도를 분석 데이터로 한다. 이 4개 종합일간지를 분석 데이터로 한 이유는 첫째, 매체별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여 보수와 진보의 정파성과 연계한 의미가 잘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 수준에서 보수와 진보는 적지 않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인식과 대응에서 젊은 세대가 지니는 처우와 참여 및 의미 등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파성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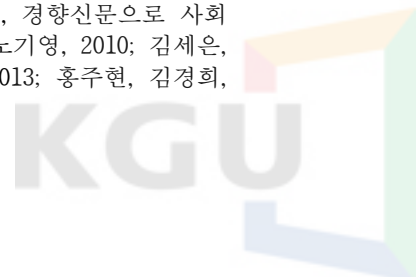
둘째, 이 4개 종합일간지가 한국사회 일간신문의 보도 경향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조선일보를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빅카인즈(BIGKinds),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에서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빅카인즈에서 2018년부터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고, 네이버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검색이 불가능했다. 또한 다음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고, 이후부터는 다음에서 보안을 이슈로 차단하면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의 종합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념상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수성향 신문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진보성향 신문으로 분류하여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⁶⁾

6) 한국 언론의 정파성 관련한 연구 논문 다수는 언론사를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한국의 대표

이 연구의 언론보도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년간이다. 이 연구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었던 2015년 열린 파리협약 직전인 2014년 1월을 연구 분석 대상 자료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y, CBDR)’이라는 구호 아래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그리고 기후 불평등(climate inequality)을 주요 의제로 이끈 파리협약 이후 환경에 대한 대응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와 조직, 개인 차원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제시된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과 같은 개념들은 기존의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기후위기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책임의 당사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후 관련 의제가 환경·생태적 범주를 넘어 인권, 동물권, 평화, 돌봄 등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젊은 세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고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할 책임의 당사자로 새롭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파리협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기한의 정함이 아닌 5년 단위 감축목표 갱신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내용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 체결 이전 기후위기 논의가 치열했고, 한국 사회에도 이런 추이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2014년 1월을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을 분석 기간의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이 끝나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제4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논의가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의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모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료 시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신문 기사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인 보수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로 진보 신문은 한겨레, 경향신문으로 사회적 통념상 나눈다고 밝히고 사용함(민영, 2006; 김경미, 2009; 김경희, 노기영, 2010; 김세은, 2010; 김영옥, 2011; 채영길, 2012; 최진호, 한동섭, 2012; 강범일 외, 2013; 홍주현, 김경희, 2017; 박영흠, 정제혁, 2020; 박상현, 2024)



2)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표 III-1>과 같이 국내 언론사의 신문 기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표 III-1> 데이터 수집 및 내용

구분	기후 위기	젊은 세대
분석자료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검색엔진	BIGKinds(www.bigkinds.or.kr)	
데이터 수집 시기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8년간)	
검색 범위	기후, 생태, 환경, 탄소	아동, 어린이, 아이, 청소년, 학생, 청년, 미래세대, 젊은 세대
데이터 수량	61,865건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의 정파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수 신문으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진보 신문으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분석자료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4개 신문사의 보도기사, 사설, 칼럼 등 모든 텍스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담론 생산의 주체는 언론인뿐 아니라, 전문가, 학자, 정치인, 시민사회 리더와 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분석을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데이터는 기후, 생태, 환경, 탄소를 핵심 주제어(key words)로 하였다. 젊은 세대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아이, 아동, 청소년, 청년, 학생, 미래세대, 젊은 세대를 핵심 주제로 하여 각각의 주제어들을 대입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내용은 일자, 언론사명, 제목, 본문, 뉴스 요약 내용, URL 순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보수 신문 31,112건, 진보 신문 30,753건을 포함한 총 61,865건의 기후 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신문 기사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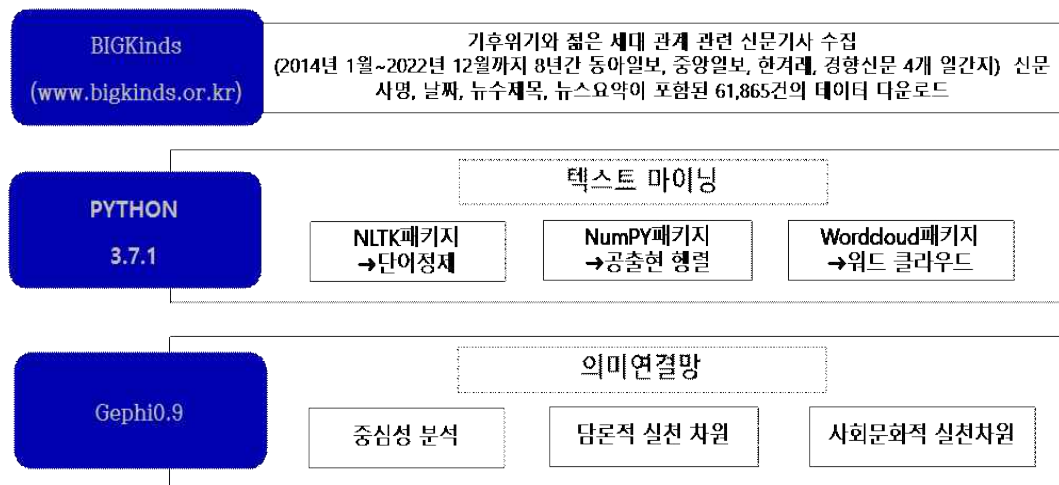
이 연구의 데이터 분석 방법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간 신문 기사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표 III-2>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내용

구분	방법		내용	도구
기초 분석	텍스트 마이닝	단어정제	형태소 분석, 불용어(stop words) 처리, 핵심어 도출	Python 3.7.1
		동시 출현단어 분석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유사한 맥락에서 단일 핵심어로 통일 및 핵심어들 사이의 연결구조와 특성 파악	
		워드 클라우드 분석	핵심어의 빈도 시각화	
주제 분석	텍스트 마이닝	주제어 분석	주제어 빈도분석 및 핵심어 빈도 시각화	Python 3.7.1
			구조적 등위성에 대한 단어의 유사한 군집별 도출	
구조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중심성 분석	연결정도	Gephi0.9
			근접	
			매개	
			고유벡터	
		담론적 실천 차원(밀집도 분석)	핵심어들 간의 연결과 응집력 관계 정도(토픽모델링)분석 및 토픽명 부여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	신문 기사 원문 기반 주요 담론에 따른 사회적 효과 기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절차는 <그림 III-1>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절차는 기초분석 단계이다. 기초분석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Python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어 빈도 및 공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을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으로 각 단어의 빈도수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주제 분석에서는 추출된 주제어 빈도분석과 핵심어 빈도 시각화를 통해 주요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구조 분석에서는 의미연결망 분석에 대한 밀도와 핵심어 연결망 중심성을 실시하였다. 이후 Gephi0.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군집을 시각화함으로써 형성하고 있는 군집별 내포하고 있는 의미구조를 내용에 따라 상호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III-1>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데이터 분석 절차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혹은 무정형의 특징을 지닌 자연어 텍스트를 특정한 목적에 유용한 정보 추출을 위해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Fayyad et al., 1996; Witten & Frank, 2005; Jusoh & Alfawareh, 2012; Inzalkar & Sharma, 2015; Kavakiotis et al., 2017). 때에 따라서는 분석 과정에 나타나는 어휘나 언어 사용 방식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Sebastiani, 2002). 모든 문서를 문법, 문장구조, 조사, 단어의 순서 등을 무시

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단어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단어 주머니(bag of words)’ 접근 방식의 자동 기계학습과 통계 방법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과 지식경영 등 다양한 기술을 차용한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Chakraborty et al., 2013; 양연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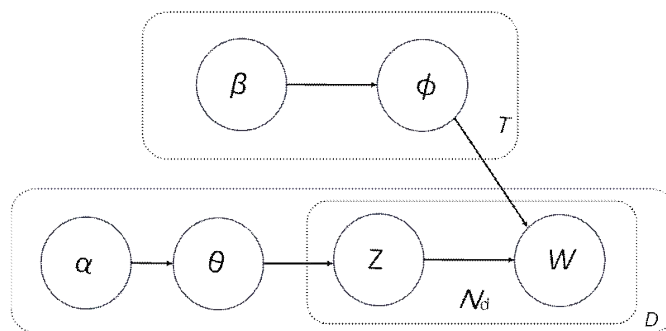
텍스트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요약, 문서 검색, 정보 검색과 같은 문서 사용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 추출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수행된다. 텍스트 분류, 문서 군집화, 언어 인식, 핵심 문구 식별 등 문서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기도 한다(손복은, 고호경, 2018).

토픽모델링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개념인 ‘말뭉치’와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Matrix, DTM)’을 기본으로 하는데, 토픽모델링을 문서-단어 행렬(DTM)을 기반으로 문서에 잠재되어 있는 토픽(의제)들의 등장 확률을 예측하는 통계 기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때 말뭉치는 문서들의 집합이고, 문서는 단어로 구성된 ‘단어 주머니’로 풀이된다. 단어들이 모여 문서를 이루고, 그 문서들이 모여 말뭉치가 된다는 것이다. 단어는 토픽을 반영하며, 토픽은 개별 기사에 조금씩이라도 잠재되어 있다. 즉 이 말뭉치 안에서 ‘단어-토픽-문서’의 관계를 풀어내는 통계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영민, 2017).

토픽모델은 문서 집합으로부터 특정 개수의 주제를 판별할 수 있으며, 전체 단어들의 발생 확률 분포는 개별 주제마다 다르게 추정이 된다. 또한 각 문서는 여러 개의 주제가 공존하며 개별 주제들의 비율은 그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이 속한 주제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준홍, 2016). 따라서 토픽모델링은 특정한 텍스트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토픽을 구분하는 기법이다. 이때 토픽은 복수의 단어들로 구성되는 주제 범주를 나타낸다. 토픽모델링은 복수의 텍스트 집합을 대표하는 주제 범주를 파악하고, 각 텍스트들을 해당되는 주제 범주로 분류해 주는 작업을 수행한다(주혜선 외, 2017). 또한 토픽모델링은 정제되지 않은 형식의 신문 기사, 소셜미디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가운데 논의되는 주제나 동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단어의 종류와 빈도 등을 분석하여 문서

에 등장하는 핵심 주제와 규칙을 드러내고, 문서의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측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단위 자료에 접근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자동화된 기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탐색적으로 발견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이다. 또한, 문서 집합의 토픽을 압축하여 문서 집합 내 숨겨진 규칙을 읽어내는 데도 효과적이다(조원광, 2017).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주어진 문서에 대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모델 기법의 하나이다. 단어들의 확률을 이용하여 문서의 잠재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확률 모델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 토픽모델링의 표준적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Blei et al., 2003; 배정환 외, 2013).



출처: 조한국, 이봉우(2021). p.155

<그림 III-2> 시각화된 LDA 모형의 개요

블레이(Blei, 2012)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을 활용한 토픽 구분이 강점을 갖는 이유로 각 문서에서 단어를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토픽에 할당하고자 하는 것과 각 토픽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의 단어에 대해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을 조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문서에 나타난 모든 단어를 최소한의 토픽에 할당하면서도, 할당된 단어들 가운데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단어들이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높여야 하므로 상대적 분류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지은, 2023).

토픽모델링은 하나의 문서가 N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문서에 포

함된 토픽은 $1 \leq t \leq N$ 으로 나타난다. 단어의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사용해 단어와 문서로 이루어진 행렬에서의 단어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잠재 의미 분석은 단순히 여러 문서 사이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단어의 유무만을 고려하나,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은 확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은 토픽의 포함 확률을 고려하게 되므로 다양한 단어로 구성된 집합에서보다 적합하게 쓰인다(Blei & Laffety, 2009).

2) 의미연결망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일련의 행위자들로 구성된 집합과 조직에서의 행위자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한 관계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김경모, 2005). 사회 현상의 분석에 있어,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의 연결 관계를 근간으로 문서의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Veling & Van Der Weerd, 1999). 즉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텍스트 내의 네트워크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Hoser et al., 2006; 이수상, 2014; 김승곤, 설현도, 2020). 따라서 의미연결망 분석은 수집된 문서에서 추출된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둬으로써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드’ (node)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link)로 구성되며(Wang & Rada, 1998), 이에 대한 관계와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Landherr et al., 2010). 연결망을 구성하는 노드 간의 연결이 많을수록 연결망 밀도가 높아지는데, 밀도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연결망에서 키워드 간의 관계가 응집력과 복합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성(centrality)은 각 노드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Landherr et al., 2010; 조재인, 2011; 최윤정, 권상희, 2014; 이승후, 김학선, 2018). 이는 노드 사이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

성(eigenvector centrality) 등 4가지의 중심성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개념은 <표 II-9>과 같다.

<표 III-3> 의미연결망 분석의 중심성 지표

구성	내용	표준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연결된 모든 엣지(edge)의 개수]를 가지는지 측정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성 및 영향력이 큼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는 정도 측정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의 인접성이 높다.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 측정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단어는 다른 단어 사이에서의 중개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음
고유벡터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드의 중심성 측정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단어는 실질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짐

출처: 당약함(2022, p.55)

3) 비판적 담론 분석 절차

(1) 텍스트 차원의 분석

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위해서는 버즈 분석과 주제어 분석, 의미연결망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내에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장과 어휘, 어조 등의 텍스트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단어들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버즈 분석은 관심 주제어를 포함한 문서의 발행 빈도나 검색 빈도의 총량 확인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문서의 발행 빈도를 시계열로

추적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유예림, 2017). 이 연구에서 버즈는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신문 기사의 건수를 의미하며, 버즈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어느 기간에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대한 이슈들이 주목받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도별 버즈량 분석을 통해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정파성에 따른 보도량의 변화 추이도 확인하였다. 버즈 분석의 시각화는 연도별 버즈량의 경우 Microsoft Office 365버전의 Powerpoint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신문 기사 정보는 사설, 기고문, 안내문, 단순 보도, 담화문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비정형 자료로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의미한다(조성우, 2011). 이런 자료들은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는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 가능한 정형 자료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도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여서 수집한 자료를 전처리로 클리닝 하여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단계가 선행되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텍스트=데이터”로 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해 텍스트를 ‘텍스트 데이터(text-as-data)’라고 부른다(Blei, 2012; Grimmer & Stewart, 2013; Roberts et al., 2016; Allcott et al., 2017). 텍스트 데이터는 수십만 개의 단어와 그들의 조합으로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고차원성(high-dimensionality) 데이터”라고 부른다(Roberts et. at., 2016; Allcott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문장에서 단어의 품사를 무시하고 하나의 단어로만 인식하는 방법으로 고차원성 데이터의 차원 수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형용사, 부사, 접속사, 관형사, 어미, 감탄사, 한자, 조사 등은 제외하고 명사만 추출하였다. 또한 단어의 명사 중 영어로 표시되어 있거나, 축약어나 혼용어, 띄어쓰기가 다른 단어 등은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에 나타나는 숫자, 각종 문장부호와 특수문자, 공란 처리 등 정제할 수 있는 함수를 코드로 구성해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연구 목적에 따라 지정어, 불용어를 설정해서 분석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지정어는 분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를, 불용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분석에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는 기후, 생태, 환경, 탄소, 아동, 어린이, 아이, 청소년, 학생, 청년, 미래세대, 젊은 세대 등 12개의 단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정어로 설정하였다. 불용어로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나 상투적인 표현을 가진 단어,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단어들과 뜻을 가지기 어려운 한 글자 미만 단어 등은 불용어로 설정해 처리하였다. 이렇게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명사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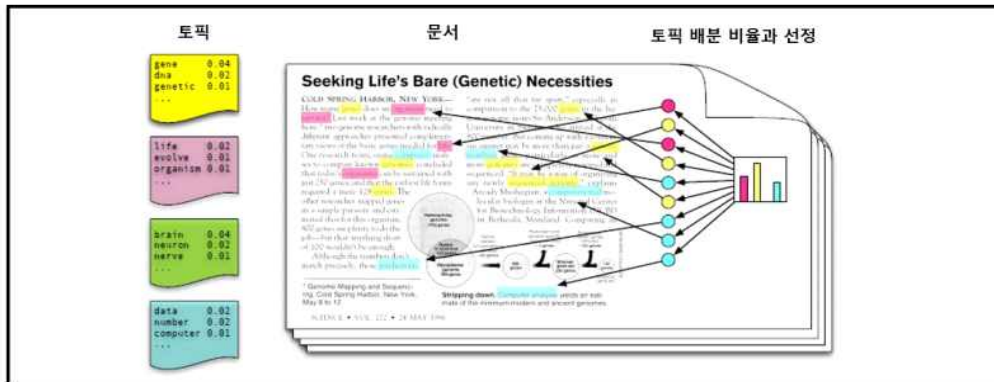
(2) 토픽모델링 분석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어휘로 전 처리된 데이터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주요 담론을 도출하여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였다. 어휘별 담론 도출을 위한 군집 분석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 빈도 집계한 데이터 중 상위 50개 단어를 정리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빈도수 상위 50개 단어 내에서도 유사어, 불용어 사전 등을 구축하여 단어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의 질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빈도수 상위 50개 단어가 집계된 데이터를 완성하였다.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신문 데이터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히기 위해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텍스트가 상호 어떻게 결합하여 어떤 담론들이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토픽모델링은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라는 알고리즘 모델에 기반한다. LDA는 문서 집합 내의 모든 개별 문서들이 특정한 수(k)의 토픽들(topics)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각 토픽은 문서 집합의 전체 어휘 집합(vocabulary)을 이루는 모든 단어들이 해당 토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확률적 분포로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림Ⅲ-3>과 같이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은 문서들을 이루고 있는 토픽들과 토픽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키워드의 활용 빈도와 분포를 종합하여 토픽 주제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에스라, 2019; 이가영, 2020).

이는 분석 대상 문서 내의 모든 단어에 반복되어 토픽의 주제어 분포와 문서의 토픽 분포를 파악하고 연관성 있는 단어들끼리 묶어 담론을 도출한다.



출처: Blei (2012, p.79), 이슬아(2022, p.96) Blei의 확률적 토픽모델의 그림을 국문으로 수정하였음.

〈그림 III-3〉 LED 확률적 토픽 추출(토픽모델링)

특히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텍스트 차원에 기반하여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는지 해석했으며, 반복되는 특정 단어 중심으로 이 단어가 어떤 수사적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려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토픽모델링을 통해 숨겨져 있는 특정 담론들이 어떤 단어들과 함께 담론 속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데이터의 텍스트 의미 해석은 물론 담론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의 토픽 수를 지정할 때 기준은 연구자가 해석 가능하고 해당 분야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서 임의의 수를 지정하거나 임의의 수 몇 개를 지정해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자가 해석을 통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최적의 토픽을 구하기 위해 복잡도(perplexity)와 토픽 응집성(topic coherence)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토픽 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최적의 토픽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담론을 추출했다.

일반적으로 복잡도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토픽모델이 문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만 낮은 복잡도 값은 결과 해석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복잡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도 있다(O' Callaghan et al., 2015).

Newman et al(2010)은 이런 복잡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토픽 응집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토픽 응집성을 기반으로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여 담론을 추출해 시각화했다.

(3)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담론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 과정에서는 담론적 실천 분석은 담론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텍스트성 구현을 분석하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접합(articulation)이다(Fairclough, 1992, 1993, 1995). 홀(Hall, 1986)에 의하면 담론의 접합은 특정한 상황에서 담론 요소 간의 결합 형태로, 담론의 통일성을 부여해 준다. 그러나 담론의 통일성을 위한 접합은 결정적, 절대적 그리고 변화 불가능한 연결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즉 담론의 해체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이데올로기 또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요소들과 탈접합되고 재접합되면서 통일성을 재구성해 간다. 이 연구에서 담론 요소 간의 접합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 분석에서 도출된 담론 내의 담론 요소 간의 상관관계의 변화를 파악해서 요소 간의 결합을 참고하여 접합, 탈접합, 재접합을 분석하였다.

신문 기사에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담론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포화된(saturated) 자료로서 역할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 담론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적용해 특정의 개념을 그 개념의 표면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이 생성된 사회적 맥락과 권력구조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또한 담론 사건(discursive event)이 사회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론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constructive effect)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

1. 텍스트 차원의 분석 결과

1) 버즈 분석 결과

이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 동안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주제로 검색된 총 61,865건의 종합일간지 신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언론의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버즈량을 분석한 결과 <그림 IV-1>과 같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과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시기별 언론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기후+젊은 세대 키워드 관련 데이터 연도별 추이

연도별 보도 건수 추이 결과 2014년 5,269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6,350건으로 1,000건 이상 상승하였으나 2016년 5,431건으로 900건 정도 하락하는 등

상승과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6,000건 수준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9년에 6,770으로 상승 폭이 다소 높았고, 2021년 10,01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9,349건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와 진보 언론을 비교해 볼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은 진보보다는 보수 언론에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보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2)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4개의 신문 기사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주제어 빈도분석과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1) 핵심 주제어 빈도분석

분석 기간(2014~2022년) 동안 4개 신문 기사에 나타난 주제어를 빈도순으로 상위 50개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해서 ‘교육’ (13,212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 (12,550회), ‘아이’ (11,634회), ‘학교’ (9,429회), ‘학생’ (9,078회), ‘청소년’ (8,684회), ‘청년(8,259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5위권 안에 ‘여성’, ‘활동’, ‘시민’, ‘후보’, ‘참여’ 등의 단어가 포진되어 있었다.

<표 IV-1> 전체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교육	13,212	26	기술	3,014
2	환경	12,550	27	가족	3,004
3	아이	11,634	28	개발	2,972
4	학교	9,429	29	혁신	2,914
5	학생	9,078	30	복지	2,843
6	청소년	8,684	31	체험	2,778

7	청년	8,259	32	시설	2,684
8	기후	7,758	33	탄소	2,679
9	사업	7,541	34	기후변화	2,586
10	지원	7,450	34	부모	2,586
11	대학	7,200	36	일자리	2,581
12	정책	6,960	37	경영	2,487
13	어린이	6,638	38	단체	2,466
14	아동	6,268	39	교사	2,391
15	기업	6,258	40	대응	2,358
16	활동	5,848	41	생태	2,350
17	미래	5,752	42	마을	2,345
18	위기	5,224	43	초등학교	2,326
19	산업	4,151	44	건강	2,293
20	시민	3,764	45	변화	2,284
21	여성	3,602	46	어린이집	2,281
22	후보	3,588	47	대선	2,221
23	프로그램	3,264	48	보호	2,220
24	안전	3,192	49	기관	2,216
25	참여	3,044	50	금융	2,214

주: 빈도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분석 기간(2014~2022년) 동안 보수 신문에 나타난 주제어를 빈도순으로 상위 50개를 확인한 결과 <표 IV-2>와 같이 나타났다. ‘교육’ (7,340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환경’ (6,429회), ‘아이’ (5,928회), ‘학생’ (5,000회), ‘대학’ (4,935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6위~10위까지에 나타난 단어들은 ‘사업’, ‘학교’, ‘지원’, ‘기업’, ‘청소년’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체 신문분석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술’, ‘개발’, ‘혁신’, ‘경영’, ‘기후’, ‘가족’ 등의 단어들이 25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보수 신문에 나타난 단어 빈도분석 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로는 ‘성장’, ‘경영’, ‘개발’, ‘기업’, ‘혁신’, ‘산업’, ‘기술’, ‘금융’, ‘창업’ 등 경제와 관련성 있는 용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 기간(2014~2022년) 동안 진보 신문에 나타난 주제어를 빈도순으로 상위 50개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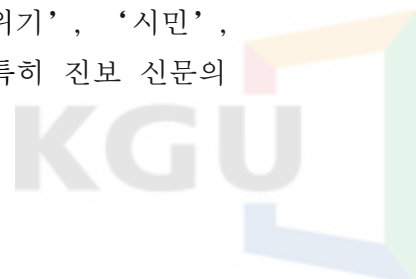


〈표 IV-2〉 보수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교육	7,340	26	복지	1,573
2	환경	6,429	27	체험	1,530
3	아이	5,928	28	위기	1,525
4	학생	5,000	28	일자리	1,525
5	대학	4,935	30	창업	1,463
6	사업	4,603	31	참여	1,422
7	학교	4,428	32	금융	1,420
8	지원	4,342	33	여성	1,403
9	기업	4,209	34	캠페인	1,381
10	청소년	4,013	35	시설	1,368
11	청년	3,676	36	건강	1,353
12	아동	3,643	37	시민	1,330
13	활동	3,495	37	모집	1,330
14	어린이	3,172	39	부모	1,307
15	미래	3,143	40	어린이집	1,300
16	정책	2,918	41	기관	1,268
17	산업	2,598	42	후보	1,262
18	프로그램	1,966	43	변화	1,223
19	기술	1,895	44	직원	1,194
20	개발	1,865	45	공부	1,186
21	혁신	1,849	46	마을	1,182
22	경영	1,781	46	인구	1,182
23	안전	1,603	48	성장	1,135
24	기후	1,599	49	온라인	1,134
25	가족	1,593	50	실천	1,125

주: 빈도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결과를 보면 상위 5위권에는 ‘기후’ (6,159회), ‘환경’ (6,121회), ‘교육’ (5,872회), ‘아이’ (5,706회), ‘학교’ (5,001회) 등의 단어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또한 6위~10위까지에 나타난 단어로는 ‘청소년’, ‘청년’, ‘학생’, ‘정책’, ‘위기’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전체 신문분석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탄소’, ‘기후변화’ 등의 단어가 25위 안에 포진되어 있었다. 아울러 보수 신문 25위 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위기’, ‘시민’, ‘후보’, ‘여성’, ‘참여’ 등의 단어가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진보 신문의



단어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단어인 ‘기후’, ‘위기’가 상위권에 나타났다. 보수 신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탄소’, ‘기후변화’, ‘생태’, ‘조사’, ‘대응’ 등의 단어들도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보수 신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인권’, ‘행동’, ‘대선’, ‘정치’, ‘국회’ 등의 단어도 나타났다.

〈표 IV-3〉 진보 신문 단어 빈도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기후	6,159	26	산업	1,553
2	환경	6,121	27	단체	1,528
3	교육	5,872	28	대응	1,518
4	아이	5,706	29	생태	1,505
5	학교	5,001	30	행동	1,481
6	청소년	4,671	31	대선	1,475
7	청년	4,583	32	가족	1,411
8	학생	4,078	33	정치	1,364
9	정책	4,042	34	교사	1,323
10	위기	3,699	35	노동	1,320
11	어린이	3,466	36	시설	1,316
12	지원	3,108	37	프로그램	1,298
13	사업	2,938	38	인권	1,282
14	아동	2,625	39	부모	1,279
15	미래	2,609	40	복지	1,270
16	시민	2,434	41	조사	1,263
17	활동	2,353	42	체험	1,248
18	후보	2,326	43	초등학교	1,226
19	대학	2,265	44	국회	1,219
20	여성	2,199	45	보호	1,182
21	기업	2,049	46	교육청	1,168
22	탄소	1,661	47	마을	1,163
23	기후변화	1,640	48	기술	1,119
24	참여	1,622	49	개발	1,107
25	안전	1,589	50	중립	1,103

주: 빈도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2)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 분석

같은 기간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그림 IV-2〉, 〈그림 IV-3〉, 〈그

림 IV-4>와 같이 전체 신문, 보수 신문, 진보 신문 모두 ‘교육’, ‘환경’, ‘아이’, ‘학교’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 신문의 경우 ‘대학’, ‘사업’, ‘지원’ 단어가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 ‘청소년’, ‘청년’ 단어 언급이 많았다. 또한 10위권을 기준으로 언급된 단어에서 차이는 보수 언론에서는 ‘대학’, ‘사업’, ‘지원’, ‘기업’ 단어가 나타난 반면 진보 언론에서는 ‘청년’, ‘정책’, ‘위기’ 단어가 나타났다.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기업’을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 언급이 많았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IV-2> 전체 신문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 IV-3> 보수 신문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 IV-4> 진보 신문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

또한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전체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에서 학교, 학생, 교육, 아이 글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다. 보수에서도 교육, 학생, 아이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는데, 학교는 다소 줄어든 크기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에서는 학교, 교육, 아이가 비슷한 크기로 크게 나타났지만, 청소년과 학생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로 줄어들어 나타나고 있었다.

3) 의미연결망의 중심성 분석 결과

이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 동안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에 나타난 의미연결망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심성 값을 제시하였다.

〈표 IV-4〉 전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연결 중심성 (Degree)		순위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168	1	아이	0.141
2	학교	0.105	2	학교	0.058
3	환경	0.100	3	교육	0.049
4	교육	0.094	4	환경	0.047
5	청소년	0.092	5	청소년	0.042
6	어린이	0.082	6	어린이	0.040
7	학생	0.077	7	학생	0.034
8	청년	0.069	8	청년	0.031
9	코로나19	0.067	9	코로나19	0.029
10	미래	0.058	10	대학	0.020
11	활동	0.057	11	아동	0.019
12	아동	0.055	12	미래	0.018
	기후위기	0.055		활동	0.018
13	지원	0.054	13	지원	0.017
14	기후	0.051	14	승진	0.015
15	대학	0.047		기후위기	0.015
16	기업	0.044	15	기후	0.014
17	사회공헌	0.042	16	국회	0.012
18	프로그램	0.041		기업	0.012
19	초등학교	0.040	17	프로그램	0.011
20	필요	0.037		대선	0.011
21	기후변화	0.033		초등학교	0.011
22	대선	0.032	18	여성	0.009
23	여성	0.031		필요	0.009
	사업	0.031		사회공헌	0.009
24	온라인	0.029	19	환경부	0.008
				온라인	0.008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같은 기간 하나의 주제어에 연결되는 다른 주제어의 수를 측정하여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 중심성(Cd, Degree Centrality) 분석 결과 빈도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표 IV-4〉와 같이 나타났

다. 즉 ‘아이’, ‘학교’, ‘환경’, ‘교육’, ‘청소년’, ‘어린이’, ‘학생’, ‘청년’ 등의 순서로 다른 핵심어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다. 그런데 빈도분석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코로나’, ‘미래’, ‘활동’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버즈 분석에서도 2021년도는 기사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상황과도 연관성 있어 보인다.

매개 중심성(Cb, 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에서도 역시 ‘아이’, ‘학교’, ‘교육’, ‘환경’, ‘청소년’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또한 ‘대선’, ‘국회’, ‘사회공헌’ 등의 단어들이 나타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다음은 근접 중심성 분석으로 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 ‘학교·환경’, ‘교육’, ‘청소년’, ‘학생’ 등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미래’, ‘필요’, ‘기후’, ‘온라인’, ‘기후위기’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필요’, ‘온라인’ 등의 단어가 나타나면서 기후위기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시기 젊은 세대에 대한 언급도 함께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전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 (Closeness)		순위	고유벡터 중심성 (Eigenvector)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509	1	아이	0.170
2	학교	0.487	2	환경	0.153
	환경	0.487	3	교육	0.146
3	교육	0.486	4	학교	0.143
4	청소년	0.481	5	청소년	0.139
5	학생	0.478	6	학생	0.125
6	어린이	0.477	7	어린이	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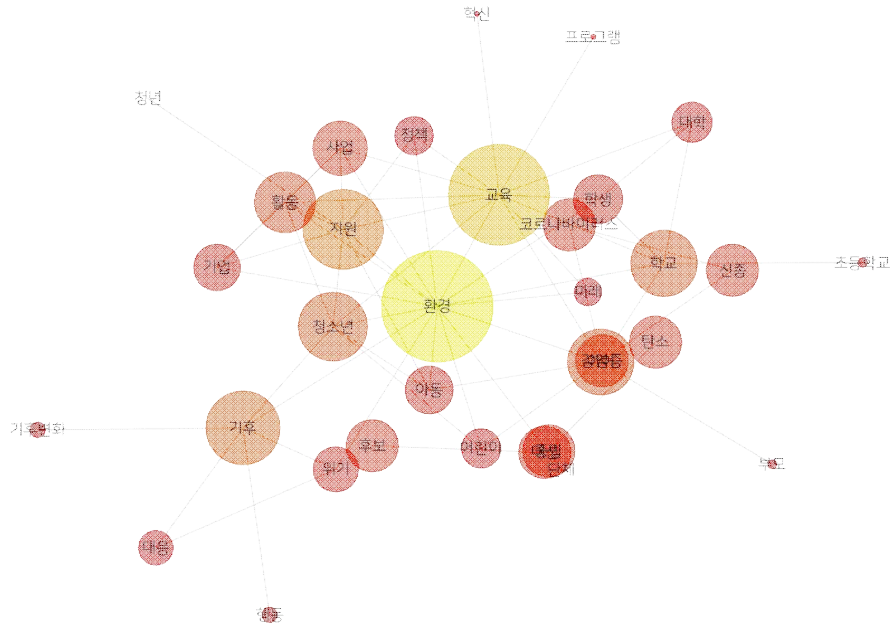
7	청년	0.472	8	코로나19	0.113
8	코로나19	0.470	9	청년	0.111
9	활동	0.465	10	활동	0.109
	미래	0.465	11	미래	0.106
10	지원	0.464	12	지원	0.103
11	아동	0.462	13	아동	0.096
12	대학	0.460	14	프로그램	0.089
13	필요	0.457	15	기업	0.088
14	기업	0.456	16	대학	0.086
15	프로그램	0.455	17	필요	0.085
	기후	0.455	18	사회공헌	0.080
16	초등학교	0.453	19	기후위기	0.079
17	여성	0.451	20	초등학교	0.077
18	온라인	0.449	21	기후	0.076
	기후위기	0.449	22	사업	0.071
19	정책	0.447	23	온라인	0.070
	사업	0.447	24	여성	0.064
				친환경	0.064
			25	일자리	0.061
			26	정책	0.060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고유벡터 중심성(Ce, Eigenvector Centrality) 분석 결과에서도 근접 중심성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아이’, ‘환경’, ‘교육’, ‘학교’, ‘청소년’ 등의 단어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특히 근접 중심성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공헌’, ‘친환경’, ‘일자리’ 단어가 나타났다는 점은 젊은 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단어로 보인다.

전체 신문의 연관분석 기준을 통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살펴보면 <그림 IV-5>에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처럼 ‘환경’, ‘교육’, ‘지원’, ‘청소년’, ‘기후’, ‘학교’, ‘아이’ 등의 단어 이미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은 교육, 학교, 아이, 기후, 청소년, 지원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학교, 아이, 학교, 대학, 환경, 지원, 청소년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그림 IV-5〉 전체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또한 ‘청소년’은 교육, 기후, 지원, 어린이, 아동, 활동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지원’은 청소년, 활동, 기업, 정책, 사업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후’는 청소년, 위기, 대응, 기후변화, 행동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고, ‘학교’는 대학, 초등학교, 아이, 학생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보수 신문에서는 같은 기간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다음 <표 IV-6>과 같이 나타났다. ‘아이’, ‘환경’, ‘교육’, ‘학교’, ‘청소년’, ‘학생’, ‘코로나19’, ‘활동’ 등의 순으로 다른 핵심어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다. 그런데 빈도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코로나19’, ‘활동’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6〉 보수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연결 중심성 (Degree)		순위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162	1	아이	0.159
2	환경	0.104	2	교육	0.079
3	교육	0.098	3	환경	0.068
4	학교	0.080	4	학교	0.047
5	청소년	0.073	5	학생	0.041
	학생	0.073	6	청소년	0.038
6	코로나19	0.072	7	어린이	0.033
7	활동	0.065		코로나19	0.033
8	어린이	0.062	8	활동	0.028
9	사회공헌	0.060	9	대학	0.026
10	미래	0.059	10	미래	0.024
	지원	0.059		지원	0.024
11	기업	0.057		아동	0.024
12	아동	0.052	11	기업	0.022
13	대학	0.048		청년	0.022
14	프로그램	0.046	12	사회공헌	0.020
15	청년	0.045	13	프로그램	0.016
16	사업	0.036	14	승진	0.014
17	초등학교	0.035	15	국회	0.012
	기후	0.035	16	초등학교	0.011
	친환경	0.035	17	친환경	0.010
18	캠페인	0.033		온라인	0.010
19	온라인	0.030	18	사업	0.009
20	ESG	0.029		인구	0.009
21	필요	0.028		환경부	0.009
			19	기후	0.008
				디지털	0.008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매개 중심성 분석을 살펴본 결과 ‘아이’, ‘교육’, ‘환경’, ‘학교’, ‘학생’, ‘청소년’, ‘소년 중앙’ 등의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공헌’, ‘미래’, ‘친환경’, ‘ESG’, ‘필요’ 등의 단어들도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대안 활동들이 보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연관성 단어로 볼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등의 단어가 포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가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근접 중심성 분석인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 ‘교육’, ‘환경’, ‘학교’, ‘학생’ 등의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코로나-19’, ‘어린이’, ‘활동’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고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 ‘아이’, ‘환경’, ‘교육’, ‘청소년’, ‘코로나-19’, ‘학생’, ‘활동’,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접 중심성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공헌’과 별도로 나타나 기후위기 대응으로 젊은 세대에 의한 사회공헌활동의 사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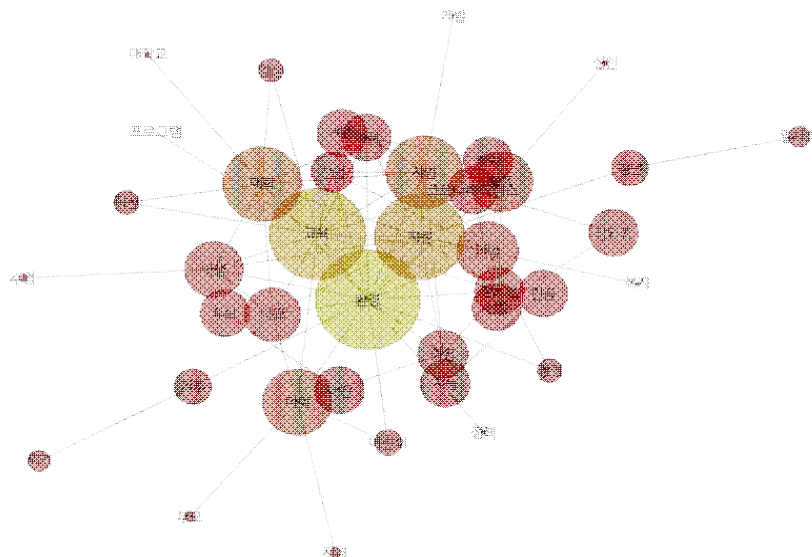
<표 IV-7> 보수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 (Closeness)		순위	고유벡터 중심성 (Eigenvector)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493	1	아이	0.176
2	교육	0.480	2	환경	0.175
3	환경	0.477	3	교육	0.169
4	학교	0.465	4	청소년	0.135
5	학생	0.463	5	코로나19	0.134
6	청소년	0.462	6	학생	0.131
7	코로나19	0.457	7	활동	0.130
8	어린이	0.455		학교	0.130
	활동	0.455	8	지원	0.123
9	미래	0.452	9	사회공헌	0.119
10	지원	0.451	10	기업	0.118
11	기업	0.450	11	미래	0.117
12	아동	0.449	12	어린이	0.115
13	프로그램	0.445	13	프로그램	0.111
14	대학	0.444	14	아동	0.103
15	사회공헌	0.442	15	대학	0.094

16	청년	0.439	16	사업	0.091
17	온라인	0.437	17	청년	0.089
18	필요	0.435	18	친환경	0.080
19	초등학교	0.433	19	온라인	0.078
	사업	0.433	20	필요	0.077
220	친환경	0.429	21	캠페인	0.075
			22	초등학교	0.073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보수 신문의 연관분석 기준을 통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살펴볼 때 <그림 IV-6>과 같이 ‘환경’, ‘교육’, ‘지원’, ‘대학’, ‘사업’, ‘아이’ 등의 단어 이미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은 ‘교육’과 ‘지원’으로 그 외에도 사업, 아이, 대학, 어린이, 경영, 학교, 기업, 활동, 청소년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학교, 학생, 대학, 아이, 산업, 사업, 청소년으로 ‘지원’은 학생, 기업, 대학, 미래, 사업, 지능, 인공, 복지, 청년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그림 IV-6> 보수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진보 신문에서는 같은 기간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표 IV-8>과 같이 ‘아이’, ‘학교’, ‘청소년’, ‘기후위기’, ‘어린이’, ‘환경’, ‘교육’, ‘청년’ 등의 순서로 다른 핵심어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기후위기’와 ‘기후’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를 포괄하는 단어 ‘아이’, ‘청소년’, ‘어린이’, ‘청년’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진보 신문은 ‘기후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를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후위기’, ‘기후변화’, ‘탄소중립’, ‘대응’ 등의 단어가 나타났으며, ‘대선’ 단어가 15위에 순위 되어 있어 젊은 세대가 기후위기의 이해당사자이면서 대응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아이’, ‘학교’, ‘청소년’, ‘어린이’, ‘환경’, ‘기후위기’, ‘청년’, ‘교육’ 등의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선’, ‘국회’ 등의 정치적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점은 ‘13일’, ‘26일’, ‘16일’, ‘2018’ 년 등의 단어들이 매개 중심성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숫자 중 2018년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학교 파업’ 1일 피켓시위를 시작한 시기이다. ‘13일’은 2020년 3월 13일 우리 사회의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한 날이기도 하다.

<표 IV-8> 진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순위	연결 중심성 (Degree)		순위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140	1	아이	0.144
2	학교	0.102	2	학교	0.077
3	청소년	0.090	3	청소년	0.056
4	기후위기	0.083	4	어린이	0.050
5	어린이	0.081	5	환경	0.042
6	환경	0.077	6	기후위기	0.040
7	교육	0.069	7	청년	0.039
8	청년	0.063	8	교육	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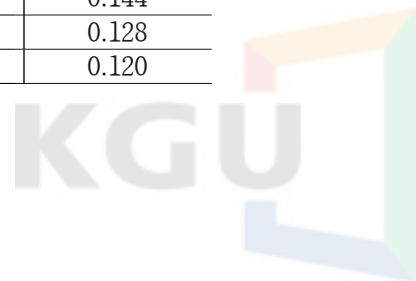
9	기후	0.060	9	학생	0.030
10	학생	0.056	10	코로나19	0.026
11	미래	0.043	11	기후	0.025
12	코로나19	0.043	12	미래	0.018
13	아동	0.042		아동	0.018
14	활동	0.037	13	대선	0.017
15	대선	0.035	14	여성	0.015
	기후변화	0.035	15	국회	0.013
16	지원	0.034		대학	0.013
17	여성	0.033		승진	0.013
18	필요	0.031		활동	0.013
19	초등학교	0.030	16	지원	0.012
20	대응	0.029		필요	0.012
21	대학	0.028	17	정책	0.011
22	프로그램	0.027	18	기후변화	0.010
23	탄소중립	0.025		초등학교	0.010
	정책	0.025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다음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 ‘학교’, ‘청소년’, ‘환경’, ‘어린이’ 등의 단어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 ‘청년’, ‘학생’, ‘기후위기’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표 IV-9> 진보 신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근접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순위	근접 중심성 (Closeness)		순위	고유벡터 중심성 (Eigenvector)	
	단어	값		단어	값
1	아이	0.494	1	아이	0.189
2	학교	0.481	2	학교	0.177
3	청소년	0.474	3	청소년	0.173
4	환경	0.469	4	환경	0.158
5	어린이	0.468	5	기후위기	0.150
6	교육	0.465	6	교육	0.147
7	청년	0.464	7	어린이	0.144
8	학생	0.460	8	청년	0.128
9	기후위기	0.458	9	기후	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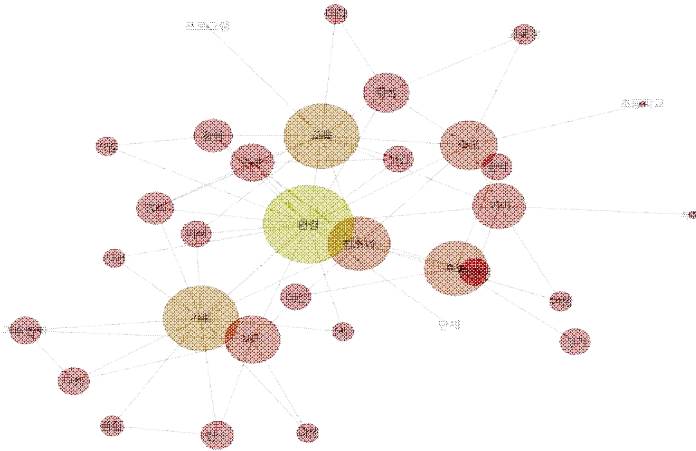
10	기후	0.452	10	학생	0.116
11	코로나19	0.452	11	미래	0.102
12	미래	0.448	12	활동	0.096
13	필요	0.448	13	코로나19	0.091
14	지원	0.445	14	지원	0.090
15	아동	0.443	15	아동	0.089
16	활동	0.442	16	필요	0.086
17	여성	0.440	17	기후변화	0.083
18	초등학교	0.437	18	대응	0.076
19	대선	0.437	19	초등학교	0.074
20	정책	0.436	20	프로그램	0.073
21	국회	0.434	21	여성	0.071
22	대학	0.432	22	대선	0.070
23	프로그램	0.432	23	정책	0.067
24			24	대학	0.062
25			25	시민	0.061
26			26	사회공헌	0.061

주: 중심성 값이 동점인 경우 공동 순위로 배정.

고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 ‘아이’, ‘학교’, ‘청소년’, ‘환경’, ‘기후위기’, ‘교육’, ‘어린이’, ‘청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접 중심성에 나타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시민’, ‘사회공헌’ 단어가 나타나 젊은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으로 시민으로서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 신문의 연관분석 기준을 통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살펴볼 때 <그림 IV-7>과 같이 ‘환경’, ‘기후’, ‘교육’, ‘청소년’, ‘후보’ 등의 단어 더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은 ‘기후’와 ‘교육’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기후’는 청소년, 청년, 미래, 정책, 탄소, 중립, 시민, 정책, 기후변화, 행동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교육’은 학교, 학생, 청소년, 아이, 미래, 지원, 활동, 사업, 대학, 프로그램 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 ‘청소년’은 기후, 위기, 지원, 학교, 후보, 활동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후보’는 청소년, 공약, 대선, 선거와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그림 IV-7〉 진보 신문 연관분석 기준 의미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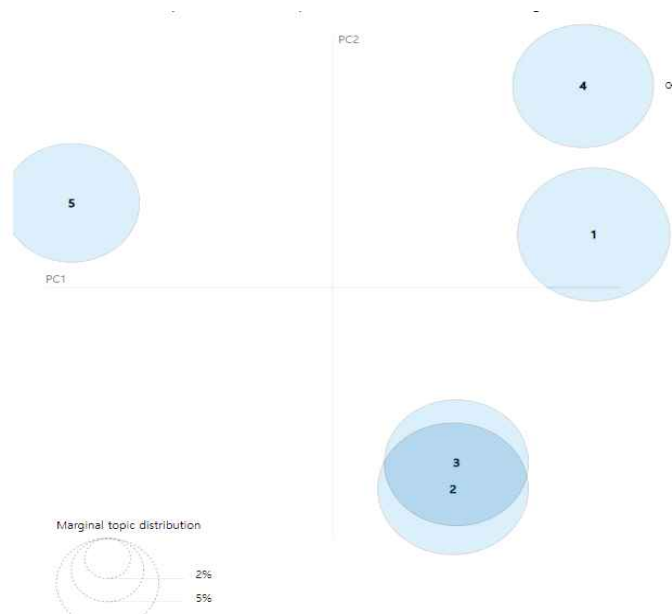
주제어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분석 결과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모두 ‘환경’과 ‘교육’ 주제어가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수 신문에서는 ‘지원’이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 주제어가 연결되어 나타났다. 또한 주제어와 연결된 더미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수 신문의 경우 ‘환경’에 ‘교육’과 ‘지원’이 맞물린 더미로, ‘교육’은 학교, 학생, 대학, 아이 등의 주제어 더미로 나타난 반면, ‘지원’은 대학, 기업, 산업, 지능, 계층, 미래 등의 주제가 더미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과 ‘학교’는 ‘교육’과 ‘환경’의 더미에 연결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울러 진보 신문에서 ‘환경’과 ‘청소년’이, ‘기후’와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났으며, ‘기후’는 청소년, 후보 등의 주제가 더미로, ‘교육’은 학교, 학생, 아이 등의 주제가 더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은 사업, 코로나바이러스, 취약, 활동, 기업, 청소년, 신중, 인공 등의 주제어 더미로 나타났다. 진보 신문의 경우 ‘환경’, ‘교육’, ‘기후’가 각각 흩어져 나타났다. ‘환경’은 청소년, 후보, 어린이 등의 주제어 더미로 나타난 반면, ‘교육’은 지원, 활동, 학생 등의 주제어 더미로 ‘기후’는 위기, 대선, 청년 등의 주제어 더미로 나타났다.

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 전체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텍스트의 잠재적 구조 파악을 위해 PyLDAvis를 활용한 LDA 모형 시각화를 통해 전체 신문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각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서 확률적 분포가 높은 순으로 전체 어휘가 나열된 어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명명하였다. 2014~2022년 전체 신문의 분석 결과 총 5개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가장 큰 크기를 보였던 토픽 1과 토픽 2~3까지 3개의 토픽은 비슷한 크기를 나타냈고, 토픽 4와 5의 토픽이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IV-8〉 전체 신문 보도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그림 IV-8〉에 나타난 하나의 원은 하나의 토픽 군집으로, 크기가 클수록 해당 토픽의 중요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또한 원과 원의 배치가 서로 가깝거

나 중첩되어 있으면 서로 관련성이 높은 토픽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신문의 토픽은 총 5개인데, 토픽 2와 3은 중첩되어 있고, 토픽 1과 4는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표 IV-10〉 전체 신문 보도의 토픽 구성 단어의 목록과 토픽명

토픽 번호 (% of tokens)	상위 단어	토픽명
토픽 1 (24.4%)	학생, 환경, 학교, 청소년, 정책, 육아, 진형, 위기, 교육청, 활동, 지원, 수능, 기후, 교육감, 학부모, 시민, 프로그램, 교사, 청년, 미래, 참여, 단체, 사업, 행동, 대응, 대입, 유학, 난민, 모집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 필요
토픽 2 (22.3%)	아이, 대학, 학생, 학교, 교육, 부모, 공부, 수업, 자녀, 환경, 학습, 미래, 고민, 가족, 입학, 과학, 건강, 수학, 학원, 어린이, 기술, 성적, 초등학교, 학기, 지능, 교사, 대학교, 직업, 온라인, 시험	불안정 돌봄과 학습 격차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토픽 3 (21.2%)	어린이집, 학교, 영어, 마을, 보육, 환경, 시설, 아파트, 학생, 공간,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가족, 주택, 아빠, 도서관, 예산, 체험, 부부, 교육, 학부모, 자녀, 사업, 분양, 프로그램, 건물, 장애인	돌봄 주체의 스트레스와 (돌봄)공간에 대한 불안감
토픽 4 (16.3%)	기업, 지원, 사업, 산업, 아동, 환경, 출산, 저출산, 활동, 아이, 안전, 혁신, 창업, 기술, 정책, 개발, 금융, 경영, 가습기, 직원, 임신, 대학, 살균제, 제품, 조사, 피해자, 미래, 남자, 투자, 회사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 필요
토픽 5 (15.8%)	여성, 청년, 후보, 정치, 인구, 사건, 정책, 국회, 노동자, 노동, 대선, 남성, 일자리, 공약, 선거, 결혼, 청와대, 개혁, 경력, 고용, 아빠, 보수, 진보, 선수, 육아휴직, 인권, 음악, 전쟁	도래할 두려움에 대한 대안 세력 요구

LDA 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기후 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필요, 불안정 돌봄과 학습 격차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돌봄 주체의 스트레스와 (돌봄) 공간에 대한 불안감,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

준 필요, 도래할 두려움에 대한 대안 세력 요구 등이 주요 토픽명으로 도출되었다.

토픽 1에 등장한 상위 단어를 살펴본 결과 학생, 환경, 학교, 청소년, 정책, 육아, 전형, 위기, 교육청, 활동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토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위기, 기후, 시민, 참여, 단체, 행동, 대응, 난민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 ‘시민=참여=행동’이라는 공식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후위기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토픽명은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 필요’로 붙였다.

토픽 2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아이, 대학, 학생, 학교, 교육, 부모, 공부, 수업, 자녀, 환경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는 나타나지 않은 미래, 입학, 과학, 수학, 학원, 성적, 고민, 학기, 지능, 온라인, 시험, 직업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성적, 고민, 지능, 입학, 시험 등은 학습 격차로 오는 불안함이 미래나 직업 등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된다. 코로나가 불러온 불안정한 돌봄이나 학습 격차가 사회 이슈화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연결되어, 토픽명은 ‘불안정 돌봄과 학습 격차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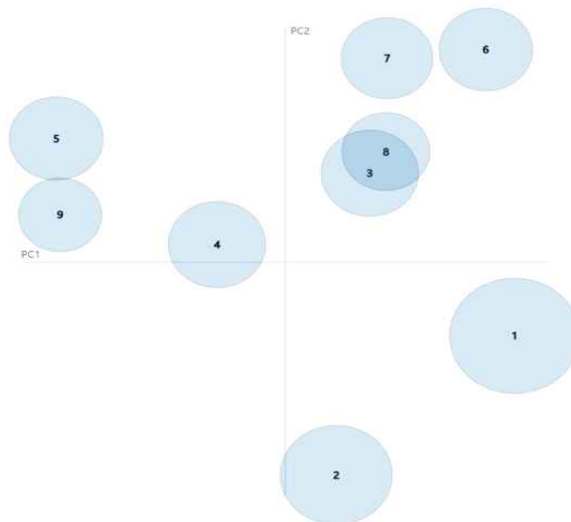
토픽 3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가 어린이집, 학교, 영어, 마을, 보육, 환경, 시설, 아파트, 학생,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 시설, 아파트, 공간, 유치원, 주택, 건물, 장애인, 아빠, 도서관, 부부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토픽 3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시설, 아파트, 공간, 유치원, 주택 등 돌봄 공간과 연결된 단어들로 돌봄 공간의 취약성 내용이 나타나며, 가족 관련한 단어들이 돌봄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토픽명은 돌봄 주체의 스트레스와 (돌봄) 공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붙였다.

토픽 4의 경우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기업, 지원, 사업, 산업, 아동, 환경, 출산, 저출산,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는 산업, 출산, 저출산, 개발, 안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조사, 피해자, 투자, 혁신, 창업, 기술 등의 단어들도 나타났다. 특히 토픽 4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의 단어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생활용품 안전과 연결된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 필요’로 붙였다.

토픽 5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여성, 청년, 후보, 정치, 인구, 사건, 정책, 국회, 노동자, 노동,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후보, 정치, 인구, 사건, 국회, 노동자, 노동, 대선, 일자리, 공약, 선거, 청와대, 진보, 보수, 인권, 음악, 전쟁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토픽 5는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 기간이 포함된 시기로 후보=정치=국회=공약=대선=개혁=청와대=진보=보수 등의 단어들은 정치세력보다는 대안 세력으로 등치가 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노동, 일자리, 경력, 고용, 육아휴직 등의 단어들은 생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쟁이나 인권 등의 단어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타나 토픽명은 ‘도래할 두려움에 대한 대안 세력 요구’로 붙였다.

2) 보수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보수 신문에 대한 토픽모델링도 전체 신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보수 신문에 나타난 토픽은 총 9개로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보수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9개의 주제는 가장 큰 크기를 보였던 토픽 1 외에 나머지 8개의 토픽은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픽 3과 8은 중첩되어 있으며, 토픽 5와 9도 다소 중첩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토픽 6, 7은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토픽들은 서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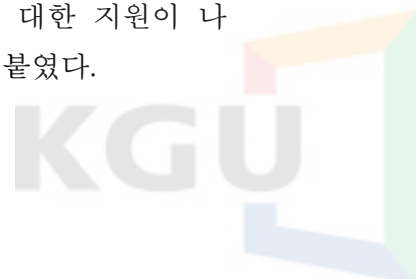
LDA 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토픽명은 신(新)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 세대, 기후위기가 불러온 학습 격차(교육 불평등)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세대, 기후위기 돌봄 공백 세대, 외로움, 고립감을 체념하는 젊은 세대, 기후위기가 만든 각자도생의 세대,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세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1> 보수 신문 보도의 토픽 구성 단어의 목록과 토픽명

토픽 번호 (% of tokens)	상위 단어	토픽명
토픽 1 (19.0%)	대학, 기업, 교육, 사업, 지원, 활동, 산업, 미래, 환경, 혁신, 창업, 기술, 경영, 양성, 직원, 캠퍼스, 융합, 성장, 개발, 학생, 학교, 대학교, 전형, 전공, 진로, 선도, 육성, 역량, 직장, 변화	신(新)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 세대
토픽 2 (13.9%)	학생, 교육, 학교, 영어, 아이, 교사, 프로그램, 환경, 학습, 수업, 학부모, 모집, 초등학교, 학기, 학원, 공부, 청소년, 교실, 도움, 사이버, 성적, 대학교, 입시, 온라인, 학부, 유치원, 캠프, 체험	기후위기가 불러온 학습 격차 (교육 불평등) 세대
토픽 3 (10.7%)	자녀, 청년, 아이, 부모, 환경, 미래, 가족, 위기, 로봇, 학대, 공부, 도서관, 기술, 외국인, 화가, 사업, 자연, 청소년, 고민, 자신감, 농업, 기후, 블록, 소년, 역사, 여행, 인구, 교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세대
토픽 4 (10.6%)	어린이집, 아이, 아동, 어린이, 환경, 보육, 출산, 가정, 안전, 인구, 지원, 미션, 학교, 시설, 저출산, 캠페인, 양육, 자녀, 정책, 출생, 발달, 둘째, 인증, 의무, 유치원, 신생아, 보호, 의료	기후위기 돌봄 공백 세대

토픽 번호 (% of tokens)	상위 단어	토픽명
토픽 5 (9.9%)	아이, 부모, 아빠, 육아, 사건, 마을, 여성, 신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아동학대, 가족, 걱정, 아동, 등교, 혼자, 가정, 포기, 워킹맘, 감 염, 남자, 육아휴직, 사망, 부부, 질병, 학교, 소 년, 중소기업, 확산	외로움, 고립감을 체념하는 젊은 세대
토픽 6 (9.8%)	결혼, 정책, 수학, 여성, 아파트, 수능, 지능, 전 파, 산업, 분양, 인공, 출산율, 주택, 규제, 공 약, 개학, 기술, 혁신, 승진, 대입, 교육, 소감, 전용, 능력, 미래, 경쟁, 환경, 상위	기후위기가 만든 각자도생의 세대
토픽 7 (9.5%)	정책, 후보, 금융, 저출산, 청년, 청소년, 지원, 일자리, 복지, 선거, 고용, 대선, 환경, 인구, 국 회, 노동, 교육감, 예산, 이혼, 여성, 은행, 재 능, 연령, 회사, 출마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세대
토픽 8 (8.7%)	임신, 아기, 공간, 수시, 청년, 축제, 출산, 환 경, 정시, 청소년, 복귀, 캠퍼스, 뷰티, 친환경, 라인, 신도시, 청와대, 청원 정치, 출시, 체험, 박람회, 창업, 광장, 면적, 시민, 매장, 화장품, 모바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세대
토픽 9 (7.8%)	아이, 건강, 제품, 예능, 사용, 피부, 시험, 환 자, 과학, 질환, 방법, 유아, 물질, 환경, 유해, 공부, 외국어, 소비자, 과목, 가족, 성인, 가습 기, 발생, 쓰레기, 살균제, 유산균, 합격, 논문, 영향, 오해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세대

토픽 1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대학, 기업, 교육, 사업, 지원, 활동, 산업, 미래, 환경, 혁신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양성, 역량, 선도, 융합, 성장, 전형, 전공, 진로, 직원, 직장, 변화 등의 단어들도 나타났다. 특히 토픽 1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에는 미래, 혁신, 양성, 역량, 선도, 성장, 변화 등 미래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의미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나타나, 토픽명을 ‘신(新)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 세대’로 붙였다.



토픽 2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학생, 교육, 학교, 영어, 아이, 교사, 프로그램, 환경, 학습, 수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 집, 학습, 공부, 학기, 사이버, 성적, 입시, 온라인, 학부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토픽 2에 나타난 단어들의 특성은 학습, 수업, 공부, 학기, 성적, 입시, 사이버, 온라인 등 교육이나 학습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 교육격차나 교육 불평등의 내용과 연결되어, 토픽명은 ‘기후위기가 불러온 학습 격차(교육 불평 등) 세대’로 붙였다.

토픽 3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자녀, 청년, 아이, 부모, 환경, 미래, 가족, 위기, 로봇, 학대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위기, 로봇, 학대, 화가, 도서관, 블록, 기후, 농업, 역사, 여행, 교과서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로봇, 화가, 농업, 블록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로봇, 블록 체인, 스마트팜 농업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과 연결되는 새로운 진로 개척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토픽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세 대’로 붙였다.

토픽 4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어린이집, 아이, 아동, 어린이, 환경, 보육, 출산, 가정, 안전, 인구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신감, 미션, 인증, 의무, 저출산, 둘째, 신생아, 의료, 보호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아이, 아동, 어린이, 보육, 출산, 둘째, 신생아, 저출산 등의 단어들 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돌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들이 부 족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토픽명은 ‘기후위기 돌봄 공백 세대’로 붙였다.

토픽 5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아이, 부모, 아빠, 육아, 사건, 마을, 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는 아빠, 사건, 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걱정, 등교, 혼자, 포기, 위킹 맘, 사망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등치되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걱정, 혼자, 포기, 사망 등 정서적 외로움 이나 고독감과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체념하는 내용이 나타나면 서, 토픽명은 ‘외로움, 고립감을 체념하는 젊은 세대’로 붙였다.

토픽 6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결혼, 정책, 수학, 여성, 아파트, 수능, 지능, 전과, 산업, 분양 등이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수능, 능력, 전

용, 전파, 규제, 공약, 개혁, 승진, 경쟁, 상위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토픽 6의 경우 수능, 지능, 승진, 경쟁, 상위 등 능력 중심의 사회와 연결된 단어들이 가열화되는 경쟁과 그로 인한 낙오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위기가 만든 각자도생의 세대’로 붙였다.

토픽 7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로는 정책, 후보, 금융, 저출산, 청년, 청소년, 지원, 일자리, 복지, 선거 등이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후보, 일자리, 복지, 선거, 고용, 교육감, 국회, 노동, 출마, 재능, 연령, 이혼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후보, 선거, 교육감, 국회, 출마 등 선거와 관련한 단어들은 기후위기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복지, 노동 등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대책 요구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세대’로 붙였다.

토픽 8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임신, 아기, 공간, 수시, 청년, 축제, 출산, 환경, 정시 등으로 나타났다. 수시, 정시, 축제, 복귀, 뷰티, 친환경, 라인, 신도시, 청와대, 은행, 청원, 정치, 출시, 박람회, 창업, 광장, 면적, 시민, 매장, 화장품, 모바일 등의 다른 토픽에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청원, 정치, 광장, 시민 등은 참여 활동과 관련한 단어들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변화와 개선 등 정책 제안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세대’로 붙였다.

토픽 9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아이, 건강, 제품, 예능, 사용, 피부, 시험, 환자, 과학, 질환 등이었다. 제품, 예능, 사용, 피부, 시험, 환자, 과학, 방법, 물질, 유해, 외국어, 소비자, 과목, 가습기, 발생, 쓰레기, 살균제, 유산균, 합격, 논문, 영향, 오해 등의 다른 토픽에 나타나지 않았던 단어들이 토픽 8과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다. 특히 제품, 사용, 환자, 방법, 물질, 유해, 과학, 합격, 논문, 영향 등은 과학실험을 통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단어들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세대’로 붙였다.



3) 진보 신문 보도의 분석 결과

진보 신문에 대한 토픽모델링도 전체 신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진보 신문에 나타난 토픽은 총 5개로 <그림 IV-10>과 같다.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5개의 주제는 가장 큰 크기를 보였던 토픽 1, 2, 3은 크기가 거의 비슷했으며, 나머지 토픽 4와 5의 토픽이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픽 2와 5는 중첩되어 있으며, 나머지 토픽들은 서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진보 신문 보도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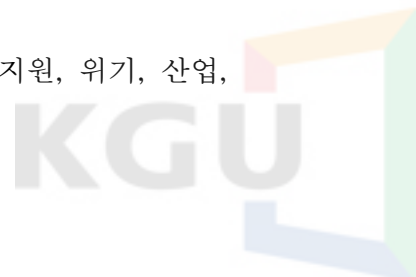
LDA 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토픽명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 세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 일상생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세대, 도래할 미래를 공감하고 준비하는 전환 세대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2〉 진보 신문 보도의 토픽 구성 단어의 목록과 토픽명

토픽 번호 (% of tokens)	상위 단어	토픽명
토픽 1 (21.7%)	아이, 부모, 환경, 어린이, 가족, 안전, 자녀, 초등학교, 학교, 가정, 출산, 스마트폰, 아동, 어린이집, 교사, 학생, 교육, 인구, 유치원, 조사, 사건, 시설, 동물, 사고, 어른, 지원, 부부, 아기, 여행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세대
토픽 2 (21.6%)	환경, 정책, 기업, 기후, 지원, 위기, 산업, 미래, 교육, 기술, 활동, 청소년, 사업, 대응, 시민, 인권, 학생, 기후변화, 참여, 단체, 여성, 혁신, 청년, 회복, 기관, 경영, 예산, 교과서, 승진, 급식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 세대
토픽 3 (21.0%)	교육, 학생, 대학, 후보, 학교, 수업, 교사, 정치, 교육감, 청년, 대선, 청소년, 시민, 선거, 공약, 정책, 진보, 학기, 수능, 고등학교, 보수, 역사, 입시, 국회, 미래, 중학교, 공부, 노동, 환경, 야구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
토픽 4 (18.7%)	학교, 아이, 학생, 교육, 사업, 보육, 마을, 영어, 가습기, 공간, 놀이, 살균제, 주거, 체험, 주택, 지원, 프로그램, 공부, 아파트, 시설, 교육청, 세월호, 학부모, 피부, 정책, 어린이집, 입학, 의료, 환경, 도서관	일상생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세대
토픽 5 (16.9%)	여성, 청년, 노동자, 육아, 디지털, 고민, 환경, 결혼, 교육, 미래, 남성, 일자리, 고용, 청소년, 학교, 기업, 성적, 노동, 피해자, 기후, 전문가, 위기, 시민, 건강, 직업, 회사, 학급, 소득, 온라인, 전환	도래할 미래를 공감하고 준비하는 전환 세대

토픽 1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아이, 부모, 환경, 어린이, 가족, 안전, 자녀, 초등학교, 학교, 가정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스마트폰, 조사, 사건, 동물, 사고, 여행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사건, 사고, 안전, 스마트폰 등은 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피해자로 연결되면서 진상 조사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내용이 나타나, 토픽명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세대’로 붙였다.

토픽 2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로는 환경, 정책, 기업, 기후, 지원, 위기, 산업,



미래, 교육, 기술 등이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기후, 대응, 인권, 참여, 단체, 회복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토픽 2의 경우 위기, 기후, 기후변화, 인권 등 위험에 대한 불평등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타났다. 또한 대응, 시민, 참여, 단체 등의 단어들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 세대’로 붙였다.

토픽 3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교육, 학생, 대학, 후보, 학교, 수업, 교사, 정치, 교육감, 청년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정치, 대선, 교육감, 선거, 공약, 진보, 보수, 국회, 미래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정치, 대선, 선거, 공약, 정책, 진보, 보수, 국회 등 권한을 가질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내용이나 직접 후보자 등 정치 세력화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토픽명은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로 붙였다.

토픽 4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학교, 아이, 학생, 교육, 사업, 보육, 마을, 영어, 가습기, 공간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가습기, 공간, 놀이, 살균제, 세월호, 피부, 의료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피부 등의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위험들과 연결된 내용이 나타났다. 또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교육청 등의 단어들은 역량 강화와 연결된 내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명은 ‘일상생활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세대’로 붙였다.

토픽 5의 상위에 등장한 단어는 여성, 청년, 노동자, 육아, 디지털, 고민, 환경, 결혼, 교육, 미래 등이었다. 다른 토픽에서 보이지 않았던 디지털, 고민, 노동자, 노동, 직업, 소득, 전환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토픽 5의 경우 디지털, 노동자, 일자리, 직업, 회사, 고용, 전환 등의 단어들이 생존과 미래의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토픽명은 ‘도래할 미래를 공감하고 준비하는 전환 세대’로 붙였다.

이상과 같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에서 도출된 19개의 토픽명을 보다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토픽명끼리 묶어서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IV-13>과 같이 19개 토픽명은 5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V-13〉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토픽 범주화

번호	범주명	토픽 번호(토픽명)
1	기후위기 피해 세대	전체토픽 2. 불안정 돌봄과 학습 격차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전체토픽 3. 돌봄 주체의 스트레스와 (돌봄)공간에 대한 불안감
		보수토픽 2. 기후위기가 불러온 학습 격차(교육 불평등) 세대
		보수토픽 4. 기후위기 돌봄 공백 세대
		보수토픽 5. 외로움, 고립감을 체념하는 젊은 세대
		보수토픽 6. 기후위기가 만든 각자도생의 세대
2	기후위기 이해당사자 세대	전체토픽 1.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 필요
		전체토픽 5. 도래할 두려움에 대한 대안 세력 요구
		보수토픽 7.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세대
		보수토픽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세대
		진보토픽 1.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세대
3	기후위기 경제성장 역군 세대	전체토픽 4.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 필요
		보수토픽 1. 신(新)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 세대
		보수토픽 9.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세대
4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세대	보수토픽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세대
		진보토픽 4. 일상생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세대
5	기후정의 행동 세대	진보토픽 5. 도래할 미래를 공감하고 준비하는 전환 세대
		진보토픽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 세대
		진보토픽 3.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

범주명 1은 ‘기후위기 피해 세대’로 돌봄과 학습 격차, 외로움, 고립감, 각자도생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명으로 구성하였다. 범주명 2는 ‘기후위기 이해당사자 세대’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 대안 세력 요구, 정책 요구, 기후위기 대응 행동, 책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명으로 구성하였다. 범주명 3은 ‘기후위기 경제성장 역군 세대’로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 신 경제성장 동력,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명으로 구성하였다. 범주명 4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세대’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핵심 세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명으로 구성하였다. 범주명 5는 ‘기후정의 행동 세

대’로 전환 세대, 기후정의 행동 세대,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명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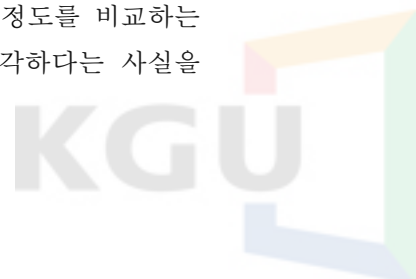
3.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담론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비판적 담론 분석 단계 중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신문에 보도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사회문화적 실천 담론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담론들이 무엇인지, 신문의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심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가중되는 젊은 세대

분석 기간인 2014~2022년 시기에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담론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제 ‘이례적’,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는 말이 낯설거나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되고 있었다. 폭염, 홍수, 가뭄, 대기오염, 바이러스 등의 기후위기는 노인뿐만 아니라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가 더 크다는 조사와 연구가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지금보다 앞으로 도래할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 불가능의 두려움은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성 담론들이 신문의 정파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60년 전 태어난 세대보다 훨씬 많은 이상기후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공대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27일(한국 시각) “연령대별로 극한 기후를 겪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처음 시도해, 기후위기가 빚어내는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조명해 냈다”고 밝혔다. (후략)



-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한겨레, 2021.09.27.)

전 세계 22억 명의 아동 중 거의 절반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영향으로 “극히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이달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 아동이 폭염 홍수 가뭄 대기오염 등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후략)

- 세계 어린이 10억 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한겨레, 2021.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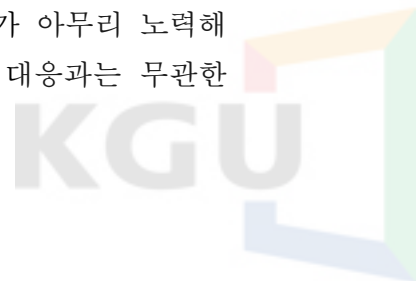
성인이나 고령층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도 여름철 폭염과 극한 기온 상승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전역 47개 어린이병원에서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첫 대규모 연구 결과다. 미국 보스턴 어린이 병원 연구진은 보스턴 공중보건대, 마운트시나이아이컨 의과대 연구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극 (후략)

- 지구 평균기온 상승하자 어린이들 응급실 방문도 늘었다(동아일보, 2022.02.07.)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5월 25일 유니세프 본부의 새 보고서 ‘어린이와 환경’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와 환경’은 유니세프 이노첸티(Innocenti) 연구소에서 발표한 새 보고서로 한국을 비롯해 OECD 및 EU 3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략) 한국은 39개국 중 간접적 요인 32위, 전반적 요인 31위, 직접적 요인 16위를 기록하며 세 분야를 종합한 전체 순위에서 32위 최하 위권에 머물렀다. 종합 순위에서 한국의 뒤를 이은 나라로는 칠레, 이스라엘, 불가리아, 벨기에, 미국, 코스타리카, 루마니아이며(순위 순),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각각 1, 2위, 일본이 13위를 기록했다. (후략)

- 유니세프, 한국 포함 OECD 및 EU 39개국 대상 ‘어린이와 환경’ 보고서 발표(유니세프, 2022.05.26.)

또한 지속 불가능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삶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들은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과는 무관한



잘못된 결정을 여전히 하고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자조의 목소리들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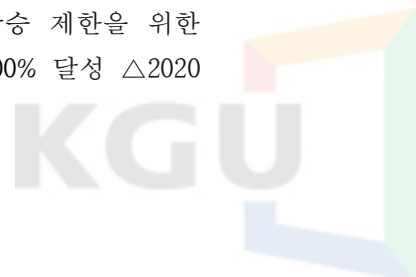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미래세대의 삶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 자원 부족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후략)

- 기후위기 대응 해법은 ‘순환경제’ [기고/아이너 엔센](중앙일보, 2019.09.18.)

‘99년 만에 가장 이른 벚꽃’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본 순간 울여름 더위가 걱정됐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날씨와 주변 자연의 변화를 체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환경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략) 아동들에게 기후변화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 풀어야 할 과제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 아이들의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기후변화 체감 ing’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참여 활동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아동 63.6%와 성인 58.2%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김미진(가명·고3) 학생은 자신이 꿈을 이룰 무렵이면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후략)

- 자녀들의 미래 뺏는 기후변화 방치[기고/이서영](동아일보, 2021.04.14.)

(중략) “한국 같은 입시경쟁 사회에서 거리로 나와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외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대로라면 자신들이 꿈꾸는 모든 미래가 멸종에 처할 거라는 거죠. 북극곰 걱정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차마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기후행동은 지난 8월 조회연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정부에 전달한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2050년 탄소배출 순 제로(0) 달성 △2050년 재생 가능 에너지 100% 달성 △2020



년 신규 석탄 화력 백지화 등이었다.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들겠다는 태도가 반가웠다. 변화의 조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성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는 시간을 쪼개 학생과 활동가로 두 가지 일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결석하더라도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이끌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셨어요. 정부 차원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실망스러웠죠.” (중략)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표현했다. 김보림 기후행동 활동가는 집회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이 됐을 때의 우리 모습을 그릴 수 없다.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를 인식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우리는 지금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후략)

- “지금 청소년은 ‘멸종위기 세대’ 어른들은 뭐 하는 거죠?”

[애니멀피플] 혼자가 아니야: 나, 우리, 지구 그리고 비전⑨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 김유진 활동가(한겨레, 2019.12.12.)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표현하면서 “2030년이 됐을 때의 우리 모습을 그릴 수 없다.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를 인식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분명하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만큼 기후위기를 시급한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고 있다. 그런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오늘보다 더 불행한 내일이 악몽처럼 느껴지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한 현재성과 가시성을 가진 피해당사자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차마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면서 사라지는 동식물만 걱정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2) 젊은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기후)교육 활성화

‘교육’은 주제어 빈도분석이나 토픽모델링 분석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이 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26개의 시·군·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들이 보도되면서 보도량의 증가로 인한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항에서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2024)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자체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지자체의 환경교육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자체의 환경교육이 젊은 세대를 표적으로 한다는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과 학교 밖의 다양한 환경체험교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대부분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 대응의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성격이 아직은 강하다. 반면,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보다 본질적 접근과 대응에 관한 내용들이 강조되면서 젊은 세대를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과 함께 기후위기의 이해당사자로서 청소년 기후행동 등과 같은 ‘행동’과 ‘주도성’에 주목하는 담론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환경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219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2025년을 목표로 한 ‘제1차 환경교육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올해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목표로 환경교육 도시 기반 마련,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 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교육 도시는 지역 구성원의 참여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0년부터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후략)

- 용인시, 2025년까지 환경교육 도시 조성에 219억 원 투입(경향신문, 2022.07.09.)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그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는 등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유치원 초·중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지역 주도형 ‘그린 환경교육’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자연생태체험 ▲에코라이프 ▲미세먼지 주제로 구성된다. (후략)

- 푸른 숲이 교실 속으로! 동작구, 우리의 미래 ‘환경지킴이’ 키운다(시사일보, 2022.04.14.)

환경교육 도시 지정 추진 제주도가 올해 제주도민 4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청정과 공존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교육 시행계획은 ‘제주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제3차 제주도 환경교육계획(2021-2025)’을 토대로 제주도 교육청과 (후략)

- 제주도, 도민 4명 중 1명 대상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경향신문, 2022.01.10.)

‘뮤지컬로 환경교육’ 대구, 강정보 디아크서 5일 환경교육 한마당 대구시는 오는 5일 달성군 다사읍 강정보령보 디아크에서 ‘2022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환경 관련 전시 체험 등을 통해 시민이 보다 쉽게 환경문제를 접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구환경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도 모여 환경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장에 마련되는 ‘학교 환경교육 마당’에서는 (후략)

- ‘뮤지컬로 환경교육’ 대구, 강정보 디아크서 5일 환경교육 한마당(경향신문, 2022.11.04.)

경남도, 기후위기 시대 연간 2만 2000명 환경교육 한다. 경남도 환경교육원은 올해 환경교육사 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65개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교육 여건을 반영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가 진단 도구 보급 사업, 온라인 환경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올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전환 (후략)

- 경남도, 기후위기사대 연간 2만 2000명 환경교육 한다(경향신문, 2022.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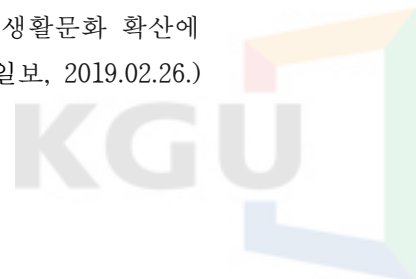
정부산하기관이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체험관 등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담론 형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폐교 건물 리모델링해 환경교육 체험관 조성 - 지난해 3월 폐교된 서울 강서구 옛 공진중학교 부지에 이르면 2024년 9월 다양한 기후 및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에코스쿨’ (가칭)이 들어선다. 이곳은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환경에 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체험관이자 교육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러한 계획을 담은 (후략)

- 폐교 건물 리모델링해 환경교육 체험관 조성(동아일보, 2021.08.19.)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청소년의 환경 분야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가족용 애니메이션 2종과 노래 율동(환경사랑송) 1종으로 연령과 교육 목적에 맞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함께해요, 환경사랑’은 가족용 애니 (후략)

- [국민의 기업]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앞장(중앙일보, 2019.02.26.)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민간 영역에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세계시민, 지구 생태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담론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기후 불평등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지난 1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3기 세리머니에서는 △국가별 효과적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계획 수립 △기후 관련 교육 확대 △기후위기 대응 시 전 세계 청소년 의견 반영 등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후략)

- 굿네이버스, 미래세대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 앞장서다(한겨레, 2022.12.14.)

서도비엔아이(대표 김원석)는 기독교 시민 여성운동 단체인 서울 YWCA와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청소년 에코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조망하고 환경적 책임 의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청소년 에코 캠프’는 기후위기를 마주하게 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코인플루언서’ (후략)

- 서도비엔아이, 서울YWCA와 청소년 환경교육 협약식 개최(중앙일보, 2021.05.06.)

[왜냐면] 유성동 | 민주시민교육 교원노조 정책실장·금산 신대초등학교 교사

‘응급실서 확인한 ‘조용한 학살’ (중략) 20대 여성 자살 시도 34% 늘었다’란 기사(한겨레, 5월3일)에 눈이 멈췄다. (중략)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19살 미만에서 300명이, 29살 미만에선 1,6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략) 이 교수는 지구생존지수의 추락, 세계 가뭄 위험지역의 확대와 환경 난민의 증가 등 여러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에 이어 생태 문명과 지구생태시민을 강조한다. 지구의 생태적 수용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양식 추구하고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략)

- 청소년 자살과 기후위기, ‘시민’ 교과가 필요하다(한겨레, 2021.06.17.)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환경교육 지원, 환경체험관 건립 지원, 환경교육 의무화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의 담론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이러한 환경교육과 관련한 기업 담론들이 진보 신문보다는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보다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소위 사회적 통념상 보수 언론이 친기업적인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소비자만 속게 만드는 녹색 거짓말을 뜻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의 활성화로 사람들이 산업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질수록 소비자를 꾸짖거나 겁주거나 현혹하면서 산업계는 더 강력하게 녹색광고로 대응한다. 또한 기업은 그린워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유엔, 세계자연기금 등의 국제기구, 정치인, 비영리 환경단체들에 대한 로비활동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기업이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담론을 소비하면서 증폭시키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하는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THE BODY SHOP)이 7월 3일까지 국내 청소년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구를 위한 목소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 ‘Be Seen Be Heard’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바디샵은 ‘지구를 위한 목소리’ 캠페인의 메인 활동으로 환경문제 인식과 청소년의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안 발의 추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자사몰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후략)

- 청소년 환경교육 의무화 위한 글로벌 캠페인 동참(동아일보, 2022.06.21.)

글로벌 화학기업인 LG화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활동

을 추진하기 위해 새 사회공헌 비전인 ‘그린 커넥터(Green Connector)’를 선포하고 생태계·교육·에너지·경제 등 4가지 중점 분야에서 ESG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그린 생태계 활동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확대한다. (중략) 라이크 그린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새롭게 시작되는 온택트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학생 멘토단과의 팀별 활동 등을 통해 환경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후략)

- LG화학,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관심 갖게 ‘라이크 그린’ 교육(경향신문, 2022.07.27.)

현대차그룹-해양환경공단, 어린이 해양환경교육 체험관 조성 -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어린이 해양환경교육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은 17일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해양환경공단 1층에 어린이 해양환경교육 체험시설 ‘키즈마린파크(가칭)’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해양환경공단은 키즈마린파크에서 해양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생물다양성 관련 (후략)

- 현대차그룹 “해양환경공단, 어린이 해양환경교육 체험관 조성”(동아일보, 2020.12.17.)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환경(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담론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환경(기후)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 교육 내용에 관련한 담론을 확인해 보면 정파성이 드러난다. 2021년 9월 제출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 소양 함양 강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강조되었다.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환경과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모두에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영역을 독립 신설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기사들이 보수 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진보 신문에서는 생태전환교육 강화 관련 중장기 계획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계획을 알리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이나 논의, 실천 사례 등과 관련된 기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 시행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진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보수정당으로 교체되면서 기후 관련한 정책들이 역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20일 지구에선 가장 큰 ‘기후파업’이 일어났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뉴욕시를 축으로, 160여 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450만 명이 거리를 행진했다. “즉각 행동하라”는 함성은 어리고 젊었다. 탄소배출이 없는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스웨덴 16세 소녀 톤베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기후야 바뀌지 마, 내가 바꿀게”라며 시위를 이끈 것도 10대와 청년들이다. 행동이 굵든 각국 정상들보다 미래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호소와 압박이 더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중략) 서울교육청이 17일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생태전환교실을 도입해 2024년까지 모든 학교·학년으로 확대하고, 햇빛발전소·채식선택제·텃밭이 있는 탄소배출제로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아리 활동, 전문가 순회강연, 교원 연수도 연계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발표한 ‘생태문명전환 도시 서울’ 공동성명은 첫마디에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고 정의했다. (후략)

- [여적] 생태전환교육(경향신문, 2020.06.17.)

고교학점제 명시한 ‘2022 교육과정’ 논의 착수 생태전환교육도 강화 -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후략)

- 고교학점제 명시한 ‘2022 교육과정’ 논의 착수 생태전환교육도 강화(한겨레, 2021.04.20.)



교육과정서 갑자기 사라진 ‘생태전환교육’ 교원단체 반발 -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총론에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은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교육 발표에 명시된 생태전환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이유 없이 삭제됐으며, 정부가 생태전환교육 삭제에 대해 사과하고 총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후략)

- 교육과정서 갑자기 사라진 ‘생태전환교육’ 교원단체 반발, 2022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삭제 전교조 등 교원단체 공동성명 “미래세대 학습환경권 침해하는 것” (한겨레, 2022.09.15.)

젊은 세대에 대한 환경(기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관한 담론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교육청,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환경(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지원, 환경체험관 건립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여 활동들이 나타났다. 지자체는 환경교육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 제공을 통해 가장 많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도량으로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기후)교육이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고, 물리적으로 정부보다 지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도량에서 가시화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ESG 경영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와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생산시스템에 대한 규제 압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빠르게 편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젊은 세대 환경(기후)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경영 전환의 한 축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기업에 대한 환경(기후)교육 관련한 기사들이 대부분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담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3) 기후위기 대응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젊은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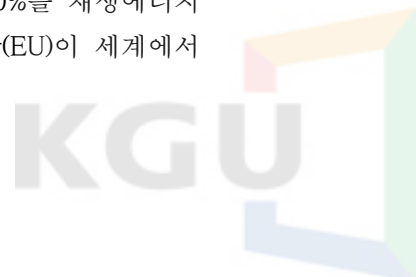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를 정치 의제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실천 행동은 ‘기후 행동’ 담론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담론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만들어 냈으며, 기후정치의 필요성 담론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보도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보수 신문의 경우 대부분 행사 보도성 단순 기사 형태이거나 관련한 전문가의 기고문이나 인터뷰 기사들이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에게 젊은 세대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보도기사들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화자이기보다는 후보자들이 화자가 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진보 신문은 젊은 세대가 화자가 되어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들이 답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보도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세대 간 차이 연구 결과 보도 등의 심층보도도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어 정파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달라는 어린이들의 손 편지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건강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답장을 보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린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직접 자필로 답장을 썼다. (후략)

-어린이들 손 편지에 대선후보들 “지구 건강하게 지키겠다” (동아일보, 2022.02.22.)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기후위기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자력발전 활용 문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뿐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인 RE100,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녹색 분류법’ 인 (후략)



- [신문과 놀자/환경 이야기]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청소년들이 환경정책 관심 가져야(동아일보, 2022.02.11.)

대선 공약에 목소리 내는 2030 “당신의 ‘청년’은 누구입니까?” 18일 오전 11시 전국 38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대선 대응 기구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하는 기자회견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청년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데도 근본적인 해결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면서다. 이들은 “후보들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후략)

- “내가 본 것 중 가장 구렸어”(중앙일보, 2021. 11. 18.)

일반 성인 90% 안팎이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부류로 특히 청소년이 두드러졌다.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쪽보다 부정 쪽 여론이 강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단 얘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헌법이 (후략)

-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 청소년 59%가 ‘그렇다’고 답했다(한겨레, 2021.12.01.)

청소년 기후행동 김도현 활동가(1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의제는 ‘기후위기’이다. 하지만 대선이 8개월여 남은 지금, ‘기후위기’는 정치권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다. 김양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정치인들과 청소년들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후략)

- “기후위기를 대선 의제로“ 청소년들이 먼저 시작한 기후정치(경향신문, 2021.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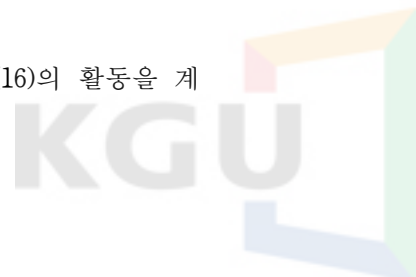
젊은 세대의 기후위기 대응은 국내를 넘어 국제연대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기후파업의 날’, ‘결석 시위’ 등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성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험난한 비판을 넘어 거침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시스템을 전복하라’, ‘대안을 넘어 권력으로’, ‘글로벌 기후파업: 의회의 시작’, ‘기후에 맞서는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진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과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의 내용 구성 보도가 많았다. 그러나 기사의 헤드라인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정파성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신문의 경우 “기후위기, 남 일 아니다.”, “기후위기 막자” 등을 헤드라인으로 잡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 신문에서는 “어른들에게 우리 미래 못 맡겨”, “지금 시스템으론 안돼” 등을 헤드라인으로 잡으면서 기성세대가 결정해 온 해결책들이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기후행동을 보도함에 있어 보수 신문들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진보 신문은 젊은 세대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후정의’라는 측면에서 담론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24일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매년 9월 마지막 금요일인 ‘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현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 설정을 검토하는 정부에게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략)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맞았을 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체감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행동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활동가들은 “예전에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북극곰의 위기’ ‘남의 나라가 물에 잠기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폭염과 장마,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후략)

- “기후위기, 남 일 아니다” …카메라 앞에 선 청소년 환경운동가들(동아일보, 2021.09.24.)

‘내가 튜베리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튜베리(16)의 활동을 계



기로 세계 곳곳에서 젊은 환경운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튜베리에게 용기를 얻고 영감을 받은 10대들이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 무능한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며 기후변화에 무감각한 정치권 등을 꾸짖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환경보호단체 ‘350.org’가 주최한 전 세계적 시위에서도 이들의 활동은 도드라졌다. 10대 환경운동가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거침이 없다. (중략) 매튜 니스벳 미국 노스이스턴대 환경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환경운동가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어젠다를 대신해서 말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이며 기성세대 활동가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메시지적으로는 기후변화 위기를 ‘글로벌 정의’의 문제로 규정한 것도 파급력을 낳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개발 국가들이 오히려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리엇 튜 영국 리즈대 교수는 “10대 환경운동가들은 단지 북극곰이나 고래들을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점점 더 인간과 생태계 전반의 의존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기성세대도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수긍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 “어른들에 우리 미래 못 맡겨” 환경운동 ‘2000년대생이 온다’ 기후변화 대응, 비판 넘어 거침없이 행동하는 10대들, 나무늘보 보호 나선 콜맨 유엔 앞 등교 거부 시위 비야세노르, 태국 릴리, 비닐봉지 금지 운동 캐나다 림, 임신 거부 캠페인, 후원 없이 스스로 행동·글로벌 문제 주장으로 큰 호응 이끌어(경향신문, 2019.09.24.)

“기후위기의 진짜 당사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9월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국내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글로벌 기후파업’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튜베리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날이다. 이날 온라인 중계된 청소년 기후행동의 기자회견장에는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 ‘대안을 넘어 권력으로’ ‘글로벌 기후파업 : 의회의 시작’ ‘기후에 맞서는 정치’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놓여 있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는 기후위기의 ‘진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구성하자고 제안

했다. (후략)

- “지금 시스템으론 안돼”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 맞아 ‘기후시민의회’ 제안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 (경향신문, 2021.09.24.)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 P4G 정상회의 특별 세션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정부·기업에 실효적 대책 촉구 “기후문제 의사결정 현장에 더 많은 청년 참여 필요” 콜롬비아, 2023년 GYCC 유치 의사 첫 해외 개최 세계 35개국에 있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미래세대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 전달했다. 청년들은 기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현장에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기업에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이른바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략) P4G 미래세대 특별 세션에서는 실천과 리뷰, 새로운 관점, 지구의 미래, 패널토론 등을 진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을 결집했다. 미래세대들은 P4G의 5개 주요 분야와 연계해 ▲도시·생활 ▲산업·농업 ▲음식 ▲해양·강 ▲플라스틱 ▲육지·숲 등 6개 분야에서 ‘버릴 것 안 만들기(ZERO WASTE)’에 대해 2개월간 온라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후략)

- 35개국 청년들, P4G 정상에 “기후위기 막자” 대책 촉구(동아일보, 2021.05.29.)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기후행동이 기후소송까지 이어지고,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면서 기후위기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적극적인 주도 세력으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진보 신문에서는 칼럼 형태의 보도를 통해 필요성 등의 진단들이 간헐적이지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기후소송 관련한 같은 내용의 기사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 신문에서는 “20주 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 62명 아기의 ‘기후소송’으로, 진보 신문에서는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로 잡으면서 보수 신문은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보 신문은 “기후정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 계절을 훌쩍 건너편 듯 5월 나들이객들의 옷차림은 벌써 초여름이다. 지난해 재난에 가까운 폭염을 경험해, 다가오는 여름이 지레 걱정스럽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인류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운데, 이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청소년들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청소년 기후소송단’이다. (중략) 한국에서도 어른들의 무책임함에 분노한 작은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작년 8월, 숨 막히는 폭염 속에 모인 50여 명의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며 지난 3월15일 ‘세계 등교 거부 동참’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청소년 기후행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후략)

- [학교의 안과 밖] 오월의 작은 시민들(경향신문, 2019.05.06.)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중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 오는 것 그 이상이다. (중략)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한겨레, 2020.03.13.)

청소년들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지 못해 미래세대의 생명권, 환경권,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기후소송’이다. (중략) 기후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은 16일 오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 원고인 윤현정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 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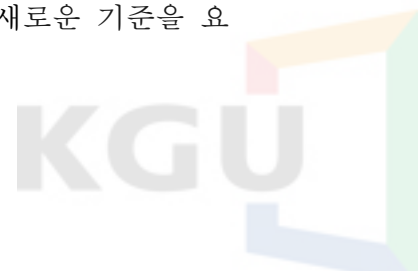
- “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헌법소원(중앙일보,

2022.02.16.)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 없는 아이인데” - 13일 오전 11시 20분, 20주차 산모 이동현(39)씨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인도에 섰다. (중략) 부모를 포함한 성인 20여 명이 바로 뒤에 섰다. 이씨는 “배 속에 있는 아기 딱따구리(태명)와 함께 기후소송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딱따구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서가 접수된 ‘아기 기후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중략)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을 가지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아기 기후소송에 나선 이들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래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은 “우리가 크면 너무 늦는다.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 1세, 3세, 6세 세 자녀를 둔 서성민(37)씨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후략)

- 20주 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 62명 아기의 ‘기후소송’ (중앙일보, 2022.06.13.)

2018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담론에서는 젊은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삶과 젊은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의 차원에 천착해서 그들이 느끼고 간파하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젊은 세대 관련된 언론 기사로 형성되는 담론은 저항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 무능한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는 등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를 외치며 기후과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며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논의되는 방식이 기후위기를 도구로 삼아 젊은 세대가 직면한 삶의 위기가 통치성과 소수 전문가들의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징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이다. 또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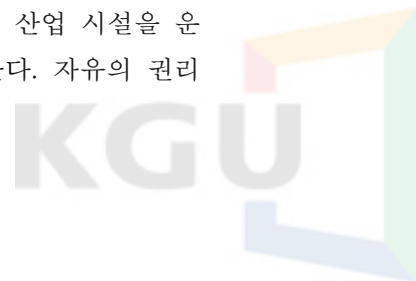


이런 저항적 행동의 근간은 세대 간 정의이며, 세대 간 정의는 세대 간의 형평성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 세대 간의 관계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는 곧 자원, 재원, 환경 등 세대 간 자원배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Lukas Meyer는 세대 간 정의를 “미래세대나 과거세대가 그들에게 상호의무 관계에 있는 현세대에 반하는 정당한 주장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서용석 외, 2011). 이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의 저항적 행동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유로운 주체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민으로서 “어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가기 위한 옛 것 ‘안에’ ‘새로운 것’ 들을 침투시켜 파열과 균열을 통해 확산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세하지만, 반복되는 힘이 거대 담론으로 형성되는 시작점이며, 그 힘이 젊은 세대의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4) 기후정의 행동에 나선 젊은 세대

기후정의가 새로운 환경운동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환경단체들도 기후정의라는 용어 사용을 시작했고,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이후 한국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기후정의 관련한 기사가 나타난 것은 2020년부터이다.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칼럼을 통해 기후정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집회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발언들이 기사 보도를 통해 주로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매일 100t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다른 곳에서 100t의 물을 정화한다. 오염 행위를 정화 행위로 상쇄했으니, 결과적으로 오염수 배출은 제로(0)다. (중략) 그런데 과거 반공해운동에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던 상쇄의 셈법과 시장교환의 논리가 오늘날에는 환경주의자의 언어로 전파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탄소흡수로 상쇄하는 탄소중립, 넷제로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중략) ‘코스의 정리’에서, 시장의 자유는 기업이 산업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을 기업 활동의 자유로 인정한다. 자유의 권리



에 따라 기업은 ‘오염 배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유는 다른 시장 참여자인 주민들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어업권 손실 이상의 보상이 제시되고, 기업이 배출로 인한 이익보다 적은 보상액으로 타협이 된다면, ‘배출 합의’가 성립하게 된다. 쌍방의 추가 비용도 없고, 외부의 개입도 없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코스의 주장이다. 분쟁 요인이 제거되면 오염은 ‘평화롭게’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시장 참여자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오염 배출 같은 공적 문제를 승인하는 상급심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 국제 기후협약이나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탄소 거버넌스 기구들도 이런 합의의 장으로 기능한다. (중략) 민주주의가 무력화된 곳에서는 삶이 지표 달성에 빨리 들어가고 숫자가 시민들의 실천을 통제하는 훈육과 규율의 수단이 된다. 사회를 시장으로, 사회구성원을 시장 참여자로, 시민을 소비자와 투자자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를 위한 전제다. 수요공급 모델을 따르는 탄소중립 같은 용어는 정책 관리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운동의 목표나 정치적 언어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가능한 경로에 가두고 봉쇄하기 때문이다. (후략)

- [정동칼럼]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정의(경향신문, 2022.07.11.)

“우리 종족도 얼마든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오. 실제로 우리는 막대한 자연 자원과 우수한 지적 능력까지 지녔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정도로 영적 성숙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오.” 노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포기의 미학’이 답이다! (중략) 편리함의 대가는 따질수록 어마무시하다. 겉보기에 깔끔·편리해도 아파트는 환경호르몬과 라돈 검출 위험이 있고 이웃·자연까지 분리한다. 터 조성 과정에서 논밭과 숲, 산을 없앤다. 이렇게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한 결과가 코로나19 사태 아닌가? 또 편리한 인터넷 마케팅, 플랫폼 시장, 택배회사, 해외관광과 여행, 자동차 대중화 등은 모두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와 연동해 기후위기를 촉진한다. (중략) 일반 시민들도 지구온난화와 생존 위기 앞에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처럼 “우리들 집(지구)에 불이 났으니 모두 불 끄는 행동을 해야” 한다. 24일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전국 360여 개 단체 수만 명이 ‘기후정의행진’에 나선다. 부디 서울시나 경찰이 방해하지 않길 빈다. 위기는 외면·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9·24 기후정의 대행진은 그간 무심코 누린 편의의 대

가를 책임성 있게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첫걸음이다. (후략)

- [강수돌 칼럼] 편리의 대가와 9·24 기후정의 행진 강수돌:고려대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한겨레, 2022. 09. 22.)

기후정의에 대한 퀴어한 실천인권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의제를 만날 때면 어떻게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할지 고민한다. 기존 주제에 성소수자의 맥락은 위기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지만, 무엇보다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후정의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경험할까. 최근의 폭우와 홍수처럼 재난이 발생할 때 주거와 가족관계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청소년 성소수자는 위기에 취약하다. 재난에 직결된 차별은 빈곤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비이성에 가족과 트랜스젠더, 퀴어 공동체는 재난 속에 집과 가족을 잃어도 부부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성별로만 취급된다. 시민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애도 될 수 없다. (중략) 기후정의는 근본적으로 타인의 안녕을 살피는 일이다. 나의 안전을 요구하면서도 가난하고 장애가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삶을 더불어 살핌으로써 같은 행성을 살아가며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위기를 견뎌내야 함을 확인한다. 기후정의는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공동의 감각을 일깨우며, 남반구와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주민들을 수탈해 온 서구 중심의 경제체제와 이성애 가족주의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후략)

- [NGO 발언대] 기후정의에 대한 퀴어한 실천(경향신문, 2022. 09.05.)

젊은 세대는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 등과 같은 자발적 집회 참여는 물론 자신들이 직접 주최하는 집회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 간의 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나온 젊은 세대의 발언들이 회자되면서, 기후담론의 발화자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서도 개인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개인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후위기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행동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적어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은 주로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담론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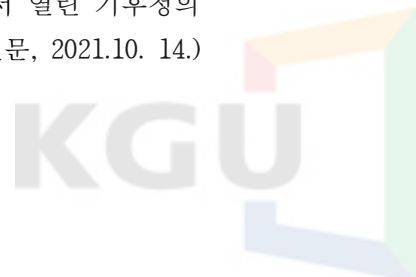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 200여 개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오는 25일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관련한 각종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5일엔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해 각국에서 ‘세계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 시위를 벌인다. (중략)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생태계 파괴로부터 비롯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 고통까지 가중되는 양상”이라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25일은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부·국회,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여전히 박약”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의 날 온라인 집회·퍼포먼스 25일엔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시위 동참(한겨레, 2020. 09. 02.)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NDC 상향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탄소중립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 위(이하 공대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탄중위 앞에서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NDC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당사자들이 배제된 현재의 논의 구조는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청소년과 청년, 반빈곤 활동가, 노동자와 농민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언제까지 미래 취급?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청소년들을 ‘미래세대’라고 부르면서도 청소년들이 기후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한다”며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대하는 방식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후략)

- “기후정의에 맞는 기후위기대응책 마련하라” 탄중위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 집회(경향신문, 2021.10. 14.)



24일 오후 5시쯤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죽은 듯이 몸을 누었다. 땅바닥에 누운 시민들은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손팻말에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재난 OUT 불평등 OUT’ ‘석탄 발전 중단하고 신공항 계획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적어 들었다. 기후재난과 기후 불평등에 항의 (중략) 행진에 앞서 오후 3시부터 본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소년과 청년 대표로 나선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김보림씨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 말고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면서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 3년 전에는 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3만 5000명이 ‘기후정의’ 외치며
쓰러졌다(경향신문, 2022.09.24.)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사회문제이며, 누구의 일상이든 수많은 방식으로 뒤흔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폭염이나 폭한,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변화가 소외 계층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공중 보건 및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어이자 운동이다. 기후정의 지지자들은 장기적인 완화 및 적응 전략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클라이밋 커넥션스 기사 “What is ‘climate justice’ ?” (Daisy Simmons.
2020.07.29.)

젊은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동안 인간이 무심코 누려온 편리함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책임성 있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태도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와 악몽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언어로 드러내면서 이 위기의 유발자가 정부와 기업, 기성세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은 물론 방관을 넘어 낙관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

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당장 멈추라고 행동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라는 것은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대하는 방식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닳아 있다.” 고 한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 운동과 담론을 이끄는 주요한 힘 중 하나는 청년(youth) 혹은 미래세대다. 기후운동과 담론에서 청년이 핵심어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를 청년이라 명명하는 그룹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그러한 기후운동을 주도하고 기후담론을 생산하고 있다(O' Brien et al. 2018; Fisher & Nasrin, 2021). 2018년 영국에서 시작된 멸종저항운동(extinction rebellion)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생태적 재앙을 초래한 정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서울시NPO센터, 2020). 또한 2010년 들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년을 원고로 한 기후소송들이 이루어졌으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기후시스템에 갖는 법적 권리가 제기되었다(박태현, 이병천, 2016). 생태적 위기를 경험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30여 개국에서 1,700여 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한국의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각국에서는 IPCC의 권고를 받아들여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박시원, 2021).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기후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12항에서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3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국가법령정보

센터, 2024)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23년 12월 16일, 청소년기후운동 단체들이 모여 ‘2030 청소년인권기후정의 선언’을 했다. 이 공동선언에 참여한 단체로는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한 가방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7개 단체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하여’가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자. 둘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내자. 셋째, 생활시간 보장과 생활양식의 자유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넷째, 청소년을 이윤·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입시경쟁 교육을 멈춰라.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녹색당, 2023) 등이다. 이 선언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 철폐를 통한 기후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임이 자명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성을 표방하는 젊은 세대들의 집단 행동들이 연대를 통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그 규모와 힘이 작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당사자성을 표방하는 젊은 세대의 집단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권한과 정당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포화된 담론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의는 한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인종, 젠더, 빈부격차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재난이 약자의 몫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젊은 세대의 기후행동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는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기후정의를 시대적 과제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성과 논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논의 과정에 젊은 세대를 핵심 파트너이자 이해당사자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5장 결론

1. 요약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전 세계 국가들은 수평적 협업 방식인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의 인식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국가, 지방정부, 기업,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과학, 문화예술, 종교 분야까지 총망라해 경계 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선언 방식의 기후행동으로 강화·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신문 기사 데이터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의미를 도출하고, 이에 기후위기에 잠재되어 있는 젊은 세대의 위상에 대한 담론 형성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대표적 매체인 신문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 생태, 환경, 탄소를 핵심 주제어(key words)로 하고, 젊은 세대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아이, 아동, 청소년, 청년, 학생, 미래세대, 젊은 세대를 핵심 주제어(key words)로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어들을 대입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 신문 기사 데이터의 텍스트 구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재적인 주제 발견을 통해 담론적 실천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담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실천이 어떻게 구성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간이다.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인 동아일보, 중앙일보(보수), 경향신문, 한겨레(진보) 등 4개 일간지며, 신문 기사에 나타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기사를 자료화하여 신문사명, 날짜, 뉴스 제목, 뉴스 요약을 포함한 61,865건을 추출하였다.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데이터 수집 시기로 설정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절차에 따라 가공과 분석 과정을 거쳐 추출된 주제어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제어에 대한 중요도는 빈도분석과 단어 가중치, 동시 출현 빈도를 확인해서 산출하였다. 또한 버즈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파별 상승 구간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보도 건수 추이 결과 2014년 5,269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6,350건으로 1,000건 이상 상승하였으나 2016년 5,431건으로 900건 정도 하락하는 등 상승과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6,000건 수준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수와 진보 언론을 비교해 볼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은 진보보다는 보수 언론에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보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4개 언론사의 신문 기사에 나타난 주제어를 빈도순으로 상위 50개를 확인한 결과 교육(13,212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환경'(12,550회), '아이'(11,634회), '학교'(9,429회), '학생'(9,078회), '청소년'(8,684회), '청년(8,259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보수와 진보 신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순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진보 신문에서는 보수 신문과 전체 신문 상위권 주제어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후'(6,159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단어인 '기후', '위기'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고, 보수 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탄소', '기후변화', '생태', '조사', '대응', '인권', '행동', '대선', '정치', '국회'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반면 보수 신문에서는 '성장', '경영', '개발', '기업', '혁신', '산업', '기술', '금융', '창업' 등 경제와 관련성 있는 용어들이 다수 나타났다.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에서 학교, 학생, 교육, 아이 글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보수에서도 교육, 학생, 아이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크게 나타났는데, 학교는 다소 줄어든 크기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에서는 기후, 학교, 교육, 아이가 비슷한 크기로 크게 나타났지만, 청소년과 학생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로 줄어들어 나타

나고 있었다.

주제어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 신문 모두 ‘환경’과 ‘교육’ 주제어가 연결되었다. 보수 신문에서는 ‘지원’,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 주제어가 연결되어 나타났지만, 주제어와 연결된 더미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신문은 ‘환경’은 ‘교육’과 ‘지원’으로 그 외에도 사업, 아이, 대학, 어린이, 경영, 학교, 기업, 활동, 청소년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학교, 학생, 대학, 아이, 산업, 사업, 청소년으로 ‘지원’은 학생, 기업, 대학, 미래, 사업, 지능, 인공, 복지, 청년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 신문은 ‘환경’은 ‘기후’와 ‘교육’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기후’는 청소년, 청년, 미래, 정책, 탄소, 중립, 시민, 정책, 기후변화, 행동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교육’은 학교, 학생, 청소년, 아이, 미래, 지원, 활동, 사업, 대학, 프로그램 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 ‘청소년’은 기후, 위기, 지원, 학교, 후보, 활동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후보’는 청소년, 공약, 대선, 선거와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총 19개의 토픽명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토픽명은 전체 신문분석 결과 5개의 주제가,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에서는 각각 9개와 5개의 토픽명이 형성되었다. 전체 신문에 형성된 5개의 토픽명은 기후 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 필요, 불안정 돌봄과 학습 격차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돌봄 주체의 스트레스와 (돌봄) 공간에 대한 불안감,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 필요, 도래할 두려움에 대한 대안 세력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수 신문에서 형성된 9개의 토픽명은 신(新) 경제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 세대, 기후위기가 불러온 학습 격차(교육 불평등)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세대, 기후위기 돌봄 공백 세대, 외로움, 고립감을 체념하는 젊은 세대, 기후위기가 만든 각자도생의 세대, 기후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요구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세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진보 신문에서 형성된 5개의 토픽명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세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 세대,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대, 일상 생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세대, 도래할 미래를 공감하고 준비하는 전환 세대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에서 도출된 19개의 토픽명을 보다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토픽명끼리 묶어서 상위 범주 5개로 분류하였다. 5개의 범주명으로는 기후위기 피해 세대, 기후위기 이해당사자 세대, 기후위기 경제성장 역군 세대,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세대, 기후정의 행동 세대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담론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담론들이 무엇인지, 신문사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기후위기 심화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가중되는 젊은 세대, ② 젊은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③ 기후위기 대응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젊은 세대, ④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행동에 나선 젊은 세대 등 4가지이다.

2. 결론 및 논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4개의 종합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언론보도의 버즈 분석 결과 2021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보수 신문 보도량이, 이후는 진보 신문의 보도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로는 2019년 12월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기후위기로 인식하면서 상승한 것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큰 이슈들을 단계별로 발표했기 때문

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국회 선언’을 시작으로 12월 10일 비전 선포,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8월 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국회 통과, 9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관련한 국내 이슈들이 연일 보도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보수 신문의 보도량이 증가한 이유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COP21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과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범정부적인 협약과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경제 관련한 내용이 늘어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 특히,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탄소시장의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 사회적 측면보다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마켓, 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적 측면의 기사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재편, 즉 젊은 세대들의 교육, 진로 등의 지원과 연결되어 보수 신문의 보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2020년부터 진보 신문의 기사 보도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2018년부터 촉발된 젊은 세대의 ‘기후과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도 이에 동참했다. 또한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험’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활성화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뉴스 프레임이 사실 나열형에서 행동 조직화형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개발 논리를 중심에 둔 보수 언론과 경제분배와 보존 논리를 중심으로 한 진보 언론의 차별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김현철 외, 2011)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언론사 4개의 신문 기사에 나타난 주제를 빈도순으로 확인한 결과 정파별로 나타난 주제어들이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

히, ‘교육’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젊은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행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과 환경, 아이가 비슷한 크기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함께 놓고 보수와 진보 신문을 비교해 보면, 보수 신문에서는 ‘아이’와 ‘학생’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고, ‘청소년’과 ‘청년’은 절반 수준으로 작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위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학생’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과 ‘청년’의 크기는 커져 있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보수 신문은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닌 학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학생=교육으로 교육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상위권에 도출된 주제어들은 상당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순위권에서는 정파성이 나타났다. 진보 신문에서는 ‘기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인권, 행동, 대선, 정치, 국회 등의 정치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타났다. 반면, 보수 신문에서는 산업, 기술, 개발, 경영, 혁신, 창업, 금융 등 경제 관련성 용어들이 다수 나타나 보수 언론의 정파성인 경제성장 개발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상위권에 나타난 단어들이 유사하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신문 기사가 사실 보도 중심의 단순 보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의 노출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결과 강조되는 내용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강찬수(2019)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내 언론이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해서는 국내 지자체 활동이나 기업 활동 등의 기사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신문 보도 내용이 기후변화와 기후 관련된 연구 성과보다는 주요 행사나 사건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들이 기후위기 피해 상황과 원인, 진단에 집중되어 있을 뿐 심층 기사는 적어 대중의 전환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 전달 역할은 매우 부족(박정현, 윤순진, 2022)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한 주제어 분석에서 정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적 성향성(orientation)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뚜렷한 심층보도의 미흡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전체 신문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환경’은 교육, 학교, 아이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학교, 대학, 아이, 지원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교육, 어린이, 아동, 기후, 지원, 활동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고, ‘지원’은 기업, 사업, 정책, 활동, 청소년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교’는 대학, 초등학교, 아이, 학생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은 기업과 사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담론화되고 있으며, 지원은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담론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역군으로 젊은 세대를 보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신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수 신문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환경’은 ‘교육’과 ‘지원’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학교, 학생, 대학, 아이, 산업, 사업, 청소년으로 ‘지원’은 기업, 대학, 미래, 사업, 지능, 인공으로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은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담론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은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교육=학생=미래산업 개발 역군으로 보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진보 신문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환경’은 ‘기후’와 ‘교육’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기후’는 청소년, 청년, 미래, 정책, 탄소, 중립, 시민, 행동, 기후변화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교육’은 학교, 아이, 학생, 청소년, 미래, 활동, 사업, 대학, 프로그램 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 ‘청소년’은 기후, 위기, 지원, 학교, 후보, 활동 등과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고, ‘후보’는 청소년, 공약, 대선, 선거와 연결되어 더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은 학교,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후’에 청소년, 청년, 미래, 시민, 정책, 행동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과 ‘후보’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를 교육의 대상보다는 청소년=미래=시민=행동이 등치되어 행동하는 시민으로, 청소년=후보=공약=대선=선거=정책이 등치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해당사자로 보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제어 빈도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나타나는 단어가 보수 신문은 아이, 청소년, 학생 정도인 데 반해서 진보 신문에서는 아이, 청소년, 어린이, 아동, 학생, 청년 등 주로 미래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보수 신문보다 진보 신문이 젊은 세대를 중심에 두고 보도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언론사의 정파성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전체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토픽2와 3이 보수 신문의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는 토픽 3과 8이 상당히 중첩되어 나타났지만, 상위 단어에서 중첩되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단어들에서는 토픽명을 다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확인되어 동일한 토픽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9개의 토픽명이 형성된 보수 신문에서는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신(新)기술 개발의 역군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반면, 진보 신문에서 형성된 5개의 토픽명서는 젊은 세대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요구는 물론,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한 기후정의 행동과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환 세대로 그려지고 있었다. 즉 보수 신문에서는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대상, 신(新)산업의 역군으로 대상화하고 있었지만, 진보 신문은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의 당사자로, 기후정의 행동의 중심 세력으로 주체화시키고 있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토픽별 단어들의 유사성은 존재하나 보수와 진보 신문 각각의 토픽명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유사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정파성의 중요한 단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 신문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반대로 진보 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면

서 토픽명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사의 정파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19개의 토픽명을 보다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토픽명끼리 묶어서 5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범주명 1인 ‘기후위기 피해 세대’는 진보 신문의 토픽명이 단 하나도 포함되어 않은 반면, 보수 신문의 토픽명은 9개 중 4개가 포함되었다. 또한 범주명 3인 ‘기후위기 경제성장 역군 세대’에서도 보수 신문의 토픽명은 2개만 포함되었고, 범주명 5인 ‘기후정의 행동 세대’에는 보수 신문의 토픽명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보 신문의 토픽명은 5개 중 3개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위 범주 분류에서도 보수 신문은 젊은 세대를 피해자와 경제성장의 역군으로 그려내고 있었으며, 진보 신문은 젊은 세대를 기후정의 행동 세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각각의 토픽별 단어의 유사성은 존재하나 전체적인 의미 맥락적 해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보도의 경향성에서 정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 분석에서 드러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담론은 4개로 파악되었으며,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이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를 공포와 악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요구는 정부와 기업,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지속 불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위기로 보고 있으며, 지금-여기서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 즉각적인 행동과 제대로 된 결정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는커녕 어떻게 꺼야 하나 논의만 하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주로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후안 엔리케스(Juan Enriquez, 2022)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고, ‘옳고 그름’의 실체를 적나

라하게 드러낸다. 예컨대 공장식 집단 사육으로 지속되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 외국인 차별과 혐오,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가난과 계급, 불평등 등의 이슈 등 미래 세대에겐 야만과 무지의 상징이 될 행동 양식들을 비판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 확증편향이 만드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게 첨예화되면서 기존의 사고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 앞에서 과감히 “당신의 ‘옳음’은 모두 틀렸다”고 선언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젊은 세대가 벌이고 있는 지금의 기후정의, 기후행동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기성세대가 혐오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과 그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의 발현이라 생각된다. 기후위기에 대해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기성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결정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된 근거가 젊은 세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질문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기성세대는 할 말을 잃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인류를 위해 옳은 선택이었는지 되짚어 보고 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의 대전환으로 떠밀려 가는 형국이다. 그 밀어냄의 힘이 바로 젊은 세대의 기후행동, 기후정의를 포함한 기후운동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포착한 진보 신문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다양한 방식의 연대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기후운동을 담론화하고 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이 같은 담론들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현재에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잔혹함에 대한 응답의 유보 즉, ‘강제적 유보’나 ‘자발적 유보’와는 다르다. 예컨대 젊은 세대의 기후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젊은 세대를 기후위기에 가장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받는 기후위기 피해자이자 당사자로 규정하며,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핵심 의제로 부각(de Moor et al, 2021; Han & Ahn, 2020)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세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나 피켓에는 ‘우리의 미래(our future)’라는 표현이 흔하게 나타나며, 청년기후운동은 ‘미래를 위한 저항’(Wahlstrom et al., 2019)으로 이해된다(이

상준, 2022). 이처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위협받는 기후위기의 희생자이고, 기성세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리더들과 정치인, 언론에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를 세대 간 불의(intergenerational injustice)의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프레이밍 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기후위기의 희생자인 젊은 세대가 직접 기후를 위해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Murray, 2020; Molder et al., 2022)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유보는 ‘역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담론은 주로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곱째, 보수와 진보 언론사 모두 젊은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기후)교육 활성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가르칠 권리’와 ‘교육에 대한 권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론 자체가 뉴스의 취재원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전문가나 해당 관료들의 의견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의 정파성 분석에서 취재원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이들 개인 또는 기관 취재원들의 유형이나 성격,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코딩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정파성을 판단(윤영철, 2000)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보수 신문은 사회적 통념상 젊은 세대를 교육의 대상이라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통한 계도의 대상, 나아가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담론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경(2004)은 언론사가 정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 대상의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편집 관행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저널리즘이 위기에 봉착한 중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실에 대한 논리적 토론”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발화자, 화자, 취재원으로 한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 대한 담론 분석의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 인식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한 논리적 토론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덟째, 연구 결과에서 환경교육은 압도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론화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뉴스 기사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만으로는 종합적인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후위기 보도에 나타난 젊은 세대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토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나 앞으로 도래할 변화,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장단점,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나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양 향상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인과관계, 의사결정, 다양한 주체 간의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과 체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가르치기가 아닌 “들릴 권리(the right to be heard)” 옹호(이기형, 2011)를 위한 발언권 보장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은 세대에 동조하거나 연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어린아이들이 될 안다고” 하면서 폄하하거나 얕잡아 보는 또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니 들어줘야지” 하면서 배려하는 척이 아니라 이들의 집단지성을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럴 때 가르치기가 아닌 젊은 세대의 말이 공명으로 촉발될 수 있으며, 상호 간 관계적인 가치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심심찮게 젊은 세대의 일부 목소리를 일반화시키는 의도적으로 기획된 젊은 세대의 표상으로 과잉 생산되는 관행도 성찰해 볼 수 있다. 가르치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젊은 세대의 발언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젊은 세대의 “들릴 권리”가 옹호될 수 있다.

아홉째,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 주도 세력으로 기후정의 행동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제 기후레짐에서의 담론은 주로 성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불가능성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의 연대적 실천이 국가와 권력, 법과 제도, 시민권과 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위기를 넘어 기후위기를 발동시키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통치성의 균열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언어로 기후위기에 대한 부정의가 적절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에서 주변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담론과 제도, 지식체계에서 어떻게 타자화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기후위기를 젊은 세대는 어떻게 간파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의 기후행동과 기후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담론화하는 작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 2011)는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이 주체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감내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좋은 삶에 대한 애착 혹은 판타지를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정의한다. 그에게 낙관주의가 ‘잔혹한’ 이유는 애착이 일상화된 위기, 좋은 삶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실의 위기를 감추기 위해 작동하는 정동이라는 데 있다. 이때 잔혹한 낙관주의는 단지 개인의 의지나 감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와 매개된 정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동시에 스스로 소진하게 만든다. 잔혹한 낙관주의는 한편으로 현실과의 모순과 불일치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의 생존방식을 포착하도록 돕는다(정성조, 2019).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실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환상에 기대고 있다고 보고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기후행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행동은 사회문화적 질서와 정치제도 등을 새로운 방식의 대안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대 갈등과 정치에 대한 적대적 문제로 또 다른 균열과 박탈감을 생산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코넬(R. W. Connell)이 제시한 젠더 레짐의 ‘위기 경향성’(crisis tendencies)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읽는다면 이는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것만은 아니며, ‘변혁할 잠재성을 지니고 미래의 사회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동성’(Connell, 1987)으로 젊은 세대들의 기후행동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기후행동은 새로운 기후레짐을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의 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다양한 ‘위기’ 담론은 기존 질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위협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을 견인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사회적 재생산의 구조는 국가와 시장, 가족 등의 재생산 주체들의 갈등과 협상의 경합 과정을 통해서만이 변화할 수 있다(허성우, 2011).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세대 간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 위기가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큰 범지구적 위협(global risk)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이어서 2021년 COVID-19의 영향은 두 번째의 범지구적 위기로 선정된 감염병(infectious diseases)의 경우, 기후변화(climate action failure) 요인 외에도 인류에 의한 환경 훼손(human environmental damage), 기상이변(extreme weather) 등의 환경적인 원인과 아울러 부정적인 기술의 진보(adverse tech advances) 등의 기술적 원인, 사회보장의 붕괴(social security collapse) 등의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인 위기 발생의 동인(driver)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현정, 2021).

세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기술, 사회, 문화의 변동에 따라 형성되지만, 사회 역시 세대에 의해 변화된다. 또한 세대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집단 기억으로 인해 서로 다른 특성과 가치관을 가진다. 따라서 한 세계관을 가진 세대가 사회적 주류로부터 퇴장하고, 다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회는 변할 것(서용석, 전상진, 2013)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토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신호는 40년 전부터 감지되었고, 20년 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생각이나 행동은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환경파괴의 주범인 생산과 발전의 논리 쪽으로 더 심각하게 기울어지는 기류도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정보 조작과 선동, 선전, 로비와 무기력한 정신상태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단체나 활동가들의 운동은 전투에 가까울 정도로 거세지고 있고, 동참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로서의 지구를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세계와 분리하는 것은 공간적·시간적 문제이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지 않을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와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산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현재의 문제를 더 나중에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부채와 같다. 미래가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게 만든 기존 세대들의 배반으로 구축된 배반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젊은 세대와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젊은 세대들은 당장의 생존만큼 앞으로의 생존이 더 걱정되는 거주 불가능의 지구를 만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힐난한 비판과 동시에 생산 체계의 미래가 아닌 이들 세대가 포기한 생성 문제의 오래됨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부여되었던 정체성(given identity)에서 새로운 정체성(new identity)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존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있다. 즉, “우리가 미래다” 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함께하자고 촉구하면서 변화해야 한다고 담론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동행이 기성세대들의 정체성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고군분투가 새드엔딩(Sad Ending) 보다는 해피엔딩(Happy Ending)으로 관철되길 희망한다. 기후위기에서 젊은 세대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실 상황에 대한 기록 확보와 분석을 통해 얻어낸 사례들을 추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 세대라는 인식을 통해 비동시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만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사실상 그들은 예전의 요인들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간섭한다” 고 해서 특정한 사회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시간들이 실제로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 (임대근, 2020)이라 명명하였다.

근 10여 년간 활발하게 생산된 청년 및 미래세대론, 스스로가 청년(혹은 미래세대)임을 전면에 내세운 논의는 세대 간 기후정의(intergenerational climate justice)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세대, 어른(혹은 기성) 세대의 의사결정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감수해야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반영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동등한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안새롬, 2022)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며, 어떤 방법을 채용할 것 등과 관련한 젊은 세대의 생애사적인 지향 틀(서용석, 전상진, 2013)은 개개인을 집합체로 묶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이나 삶의 내용들을 동일한 틀로 수용해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경험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미래세대 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 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 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김현준, 2022).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김현준, 2022). ‘세대 간 정의’라는 거대 담론은 주로 환경문제, 그것도 미래세대 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

래세대의 환경권 등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세대 간 정의’의 수용 여부의 쟁점은 무엇보다 비(非)동일성 문제다. 어떤 사람의 권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권리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의무를 부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의무를 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동일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 간 정의 규범화를 법 차원에서 현세대의 권리에 버금가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넷째, 기후위기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가치판단과 해석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응을 위한 일상적인 실천으로서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OpenAI가 공개한 ‘챗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출시 2주 만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면서 2023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생성형 AI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딥러닝, 강화 학습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 에듀테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현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미래 사회에는 무엇이 역량이 되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교육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역량을 위해 교육해야 하는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태시민성 교육과 젊은 세대가 확산시키고 있는 기후행동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따른 가치판단과 그에 따른 견해 차이를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 2010)는 성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이들의 상상력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paideia)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교육인 파이데이아(paideia)가 없다면 참여의 자유나 가능성은 무의미하며, 시민교육이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누구도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시민은 시민이 되도록 배움으로써 가능하다. 우선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아야 한다. 요즘처럼 텔레비전을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시민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 즉 시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이를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등의 경험이 중요하다.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젊은 세대의 보다 깊이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로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주제 기반의 담론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보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의 표면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대안 담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기성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일 수도 있다. 이미 이들은 낡은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그 바깥의 상식에서 기성 언론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스스로가 언론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기성 언론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기성 언론이 담아내지 못해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뿐 어찌면 인터넷을 통해 이미 젊은 세대들의 담론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기성 언론에만 없는, 어른들만 모르는 그들의 진지를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담론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SNS, 블로그, 댓글 등을 포함시켜 젊은 세대가 발화자인 담론을 포함시키고, 지역신문과 경제신문을 포함시킨다면 언론 간의 담론경쟁의 구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목소리 파악을 통한 대안 담론 분석까지 가능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책제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젊은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추후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후변화문제는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었고, 이 시기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이자 기후 운동의 상징이 된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UUFCCC COP)에서 ‘미래세대’를 기후 운동의 당사자로 호명하며, ‘기후위기를 세대적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홍덕구, 2021). 한국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이자 ‘나’의 위기로 경험하는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에게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것은 곧 ‘나’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거꾸로 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상준, 2022)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하임(Mannheim)은 세대 형성에 대한 객관주의적 접근과 주관주의적 접근을 모두 취하고 있다(박재홍, 2003). 그는 실제 세대 내의 구체적인 세대 단위를 형성하는 동인으로 “세대 단위 구성원들의 의식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언급한다. 그러한 ‘내용들’은 “그 안에 포함되고 이해되는 실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집단으로 묶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유대감을 지닌 세대가 등장하지 않으며, 세대 의식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지닌 세대 단위가 행사하는 ‘형성적 힘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Mannheim, 1928: 2013; 김선기, 2016). 여기서 만하임(Mannheim)의 ‘형성적 힘들’ 개념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담론’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젊은 세대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제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 연령 코호트 내 일부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방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00년대 초,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Prensky, 2001)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을 전제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은 어릴 적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으로 그렇지 않은 성인들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으로 제시해 서로 다른 언어,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에 착안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어른)를 구분하는 이론적 접근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지금의 젊은 세대(청(소)년) 기후 운동은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는 젊은 세대(청(소)년) ‘당사자’들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무시와 정치적 지위 박탈을 넘어 ‘나의 미래’와 이것의 토대가 되는 공공재(common)로서의 ‘대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과 권리를 직접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해된다(안새롭, 윤순진, 2021; 안새롭, 2022). 또한 젊은 세대(청(소)년)의 기후 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젊은 세대(청(소)년)를 기후위기에 가장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받는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당사자로 규정하며,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de Moor et al, 2021; Han and Ahn, 2020).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나 피켓에는 ‘우리의 미래(our future)’라는 표현이 흔하게 나타나며 청년 기후 운동은 ‘미래를 위한 저항’ (Wahlstrom et al., 2019; Wielk and Standlee, 2021)으로 이해된다(이상준, 2022). 이를 바탕으로 기성세대를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술 과학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인식하는 세대로 “기후변화 낙관 세대”로 명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기후위기에 직면해 살아가면서 기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그 속도보다 기후위기의 규모와 속도가 더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로 인식하면서 지금 당장 행동이라는 세대로 “기후위기 대응(행동) 세대”로 명명해 보았다.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세대 연구는 오늘날 사회학적 접근 이외에도 정치공학적 접근, 대중문화적 접근, 교육학적 접근, 조직행동론적 접근

근, 마케팅과 경영학적 접근, 소비사회론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 ‘세대’ 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툼이 있는 개념(a contested concept)’ ”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학문적으로 다양하고 세대 개념에 대해 설사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세대 연구가 시효(時效)를 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세대’ 개념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는 구격(舊格)의 것이라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박치완, 2019)이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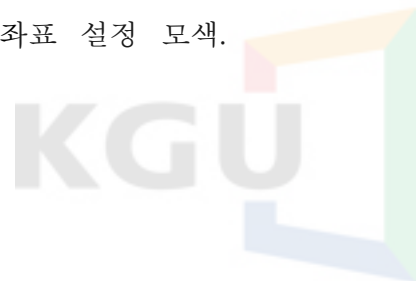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내문헌>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보도자료 (2022.10.26.),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1049&menuLevel=2&menuNo=17>
- 강다연 (2022). **행동 지향 과학교육 관점에서 탐색한 청소년 기후행동가들의 정체성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5), 319-348.
- 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신문 자료의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315-334.
- 강상인, 박창석, 김이진, 강주연 (2016). **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연구보고서. https://www.kei.re.kr/elibList.es?mid=a10101000000&elibName=researchreport&c_id=712256&act=view
- 강윤재, 김지연, 박진희, 이영희, 정인경 (2015).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와 전망: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5(1), 3-43.
- 강주연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젊은 세대(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언론보도의 담론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진영 (2022). **환경교육의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고찰: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찬수 (2019). 기후변화 보도에 인식한 한국 언론. **관훈저널**, 153, 92-98.
- 강철성 (2004). 21세기 환경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509-516.
- 고상두 (2010). 기후변화레짐에서 참여국의 이해관계와 유럽연합의 역할. **국제문제연구**, 10(1), 41-68.

- 고영철 (2012). 한 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3), 37-78.
- 관계부처 합동 (201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요약본)**.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1352&topic=>
- 관계부처 합동 (2018).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2021.10.08.),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load.do?atchFileId=ATCH_000000000018733&fileSn=1
- 관계부처 합동 (2019).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19~2023**.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국가전략정보포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29486>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 2021-2025**. http://www.climate.go.kr/home/cc_data/policy/3_nation_climate_change_adaptation_step_summary.pdf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보도자료 (2021.11.13). 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627
- 관계부처 합동 (2022).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022.10.26.) https://www.kier.re.kr/resources/download/tpp/policy_221026_1.pdf
- 교육부 (2021a). **탄소중립 중점학교 5곳 선정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06.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234>
- 교육부 (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보도자료(2021. 11. 2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국가인권위원회 (2023).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보도자료(2023.08.23.),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

- =24&boardNo=7609437&page=&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displayType=&year=&month=&menuLevel=&menuNo=
- 국무총리실 (2008).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3668666
- 권두승, 조아미 (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서울: 문음사.
- 기획재정부 (2014).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자금마련에 성공-21개국이 약 94억불의 자금을 공여하기로 약속**. 보도자료(2014.11.2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2474&menuNo=4010100
- 기획재정부 (2021).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2021.08.26.),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62&menuNo=4010100
- 기획재정부 (202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보도자료(2022.12.27.),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52&menuNo=4010100
- 기획재정부 (2023).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녹색기후기금(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 보도자료(2023.10.06). <https://www.ctis.re.kr/en/downloadBbsFile.do?atchmnflNo=9901>
- 기후변화협약 대응위원회 (2002).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577&pageFlag=&sitePage=>
- 김경모 (2005).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탐색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1(2), 162-207.
- 김경미 (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 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12(1), 45-60.



- 김정희, 노기영 (2010). 한국 언론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361-387.
- 김동윤, 김성해, 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3), 75-122.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5-68.
- 김선철 (2021).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13-21.
- 김세은 (2010). 한국보수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5, 37-78.
- 김수겸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기후변화 정책 프레임 분석 : 언론사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곤, 설현도 (2020).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혁신행동 연구동향. **기업경영연구**, 27(6), 1-12.
- 김에스라 (2019).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수 (2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일부위헌 판결에 대한 고찰. 이슈페이퍼 2022-04, 한국법제연구원. <https://klri.re.kr/kor/issueData/P/577/view.do>
- 김영옥 (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107-136.
- 김윤민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담론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진 (2022). 파리협정에 따른 적응 보고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고찰.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2), 263-273.
- 김인호, 김귀곤 (1998). 환경교육의 장(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11(1), 195-216.
-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 (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종민, 손다정, 남미자 (2021).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기후위기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기후위기 위험인식과 생태시민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4), 215-242.

김준홍 (2016).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연구동향 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선 (2015).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관점으로 본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직수, 이영희 (2015).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의 국제비교. **과학기술학연구**, 15(2), 65-97.

김현성 (2004). 집단 따돌림 담론을 통해 본 청소년 주체 형성 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3), 41-63.

김현준 (2022). 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환경법연구**, 44(3), 1-25.

김현진, 이은주, 김찬국, 김남수, 조운정, 임선빈 (2022).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철, 김학수, 조성겸 (2011). 한국 일간 신문의 기후변화 관련 뉴스프레임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19(2), 76-107.

김혜영 (2009). **영상 미디어의 교원평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호홍 (2021).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 이슈브리프, 232, 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홍규 (2006). **평준화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 (2001). **교육 문제를 다룬 신문 사설의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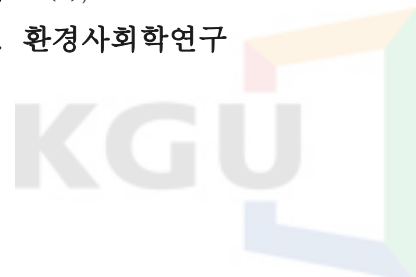
- 남미자, 김정미, 김종민, 윤상혁, 임수정, 정용주 (2020). **기후위기와 교육체제 전환 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상준 (1995). **환경교육론**. 대학사.
- 노현주, 윤영철 (2016). 신문, 방송, 포털매체의 의견 다양성 비교분석: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6), 68-99.
- 당약함 (202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을 기반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웅재 (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4), 37-73.
- 류희림 (2013). **한국 방송뉴스의 경제보도와 위기담론의 상관성 연구: KBS, SBS, YTN의 경제위기보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태훈 (2008).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한국정책학회보**, 17(3), 131-162.
- 문태훈, 김희석 (2022).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 31(1), 27-57.
- 문호영, 최창욱 (201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 1-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563Ce06t&brd_id=BDIDX_356RweG8a7bEnzkGpTBDqP&cont_idx=21&seltab_idx=0&edomweivgp=R
- 미래비전비서관실 (2009).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것으로 확정**. 보도자료(2009.11.17.),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down.do?brd_id=11642&seq=339705&data_tp=A&file_seq=1
- 민영 (2006). 정치광고의 이슈현저성과 후보자 선호도에 대한 효과 : 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과 네거티브 소구(negative appeal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5), 108-131.
- 박상현 (2024). 주요 일간지의 20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 분석 : 딥러닝을 이용한 분류 및 Doc2Vec을 이용한 유사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9(1), 1-43.
- 박선희 (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 분석: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1), 209-248.
- 박수진 (2022). **미래시간인식이 아동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원 (2021).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한국법연구**, 43(1), 39-81.
- 박연미 (2005).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청소년보호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흠, 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보**, 60(1), 202-228.
- 박영흠, 정제혁 (2020). 언론은 한일 갈등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프레임 유형과 의미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352-367.
- 박옥규 (2016). **공영방송 정책 주체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학**, 37(3), 1-23.
- 박정현, 윤순진 (2022). 기후위기 관련 인터넷기사 토픽모델링 분석: 2020년 여름 이상기후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279-300.
- 박주형, 이윤정 (2015).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속의 과정 평가: 글로벌 프레이밍, 로컬 셋팅. **과학기술학연구**, 15(2), 33-64.
- 박치완 (2019).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16, 7-43.
- 박태현, 이병천 (2016).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 소송을 소재로. **법학논총**, 40(2), 275-304.
- 박현식, 김성해 (2014).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언론보도 연구. **언론과학연**

- 구, 14(2), 75-112.
- 배정환, 손지은, 송민 (2013).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2012년 한국대선 관련 트위터 분석. **지능정보연구**, 19(3), 141-156.
- 백선기, 이경락 (2009). UCC의 정치 활용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의미-17대 대통령선거 시의 담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5, 187-237.
- 백영민 (2017).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서민지, 이수희, 손상희 (2016).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교육내용 선정 및 구성: 한·미 가정과 교과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21-43.
- 서보영 (2023). **기후위기와 복지 관련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표 (2016). 기후변화 인식을 둘러싼 담론 투쟁 : 새로운 축적의 기회인가 체계 전환의 계기인가. **경제와 사회**, 112, 137-173.
- 서용석, 류현숙, 정지범, 최호진 (2011).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용석 (2012). **전 지구적 위험에 대응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30.
- 서용석, 전상진 (2013). **세대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한국행정연구원.
- 서용석, 홍정훈 (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보도자료(2020.06.17),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68158&step1=3&step2=1>
- 서은정 (2017). 2015 개정 환경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탐색. **환경교육**, 30(3), 237-250.
- 설양환 (2017). **국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영재교육 및 영재에 대한 담론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복은, 고호경 (2018). 수학 담화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감성적 언어 빈도분석,

- 수학교육 논문집, 32(4), 555-573.
- 송현주 (2015). 정파성의 강도와 정책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정파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6), 221-245.
- 신명선 (2002). 사회적 실천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국어교육학연구**, 14, 235-264.
- 신범식 (2012). NSP Report 61,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EAI 워킹페이퍼 2012.07.18.), 재)동아시아연구원. https://www.eai.or.kr/main/publication_01_view.asp?intSeq=6529&board=kor_report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89, 10-45.
- 신현정, 임성은, 강다연, 김찬중 (2022).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35(1), 82-109.
- 안새롬 (2022). 기후 커먼즈 정치에서 청년 및 미래 세대론이 갖는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26(1), 141-177.
- 안새롬, 윤순진 (2021).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공간과 사회**, 31(1), 60-101.
- 알렉스 캘리니코스 (2024). **재난의 시대 21세기**. (이수현 옮김), 서울: 책갈피.
- 양연희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화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21). **202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10
- 오수빈, 윤순진 (2022).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 행동의 세대 간 비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35(4), 341-362.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2, 214-251.
- 오형나 (2012). **더반 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2214
- 외교부 (2009). **제1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09.0

- 7.09.),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3966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 외교부 (2015). **기후변화 바로알기**. 외교간행물(2015.11.16.),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58042
- 외교부 (2022).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보도자료.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33
- 외교부 (202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485
- 외교통상부 (2011). **Rio+20 정상회의 관련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혁 논의동향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502738>
- 우아영 (2007). **빈곤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울산광역시 교육청 (2021). **2021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본계획**. https://us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300318&q_fileId=AAAGrzAAQAAAZpiAAj1692
- 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 324-347.
- 유명순, 윤혜정, 천진희, 주영기 (2017). 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신문·방송·인터넷뉴스의 프레임, 효능감 정보 제시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3), 105-137.
- 유예림 (2017).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준, 윤이숙 (2016). 국제기후변화레짐과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진화. **환경정책**, 24(1), 71-107.
- 윤순진 (2009). 학교 기후 변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환경교육**, 22(2), 1-22.
-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7-61.



- 윤순진 (202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관 함께 탄소중립시대 첫 걸음 떼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06. 0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88316>
- 윤영철 (2000). 권력 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 48-81.
- 윤익준 (2014).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환경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6(3), 109-140.
- 윤철수, 김경호 (2017).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관련 미디어 담론 분석: 5개 일간신문 사설의 프레임 구성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5, 69-101.
- 윤철수 (2018).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영 (2020).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 (2003a).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31-349.
- 이광호 (2003b). 지난 10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청소년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개원 10주년기념 제28회 청소년문제토론평장 자료집), 59-82.
- 이광호 (2008).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 생애주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재설계 관점에서. **청소년복지 연구**, 10(2), 49-72.
- 이규창, 김에스라, 나용우, 최현아 (2022).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KINU 연구총서, 22 (1).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24&nav_code=mail674786094
- 이기일, 성열관 (2012).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171-197.
- 이기형 (2006). 담론 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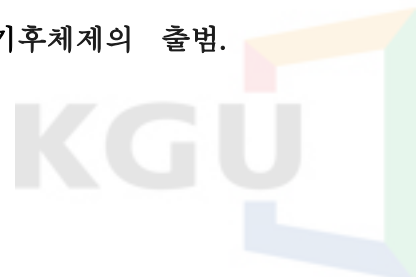
-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3), 106-145.
- 이기형 (2011).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 및 세미나 자료집), 269-297.
- 이기호 (2006). **신문에 나타난 제7차 교육과정 담론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김지연 (201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42326>
- 이상운, 이승준, 김이진, 허재영, 최도현 (2014).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 이행: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상준 (2022). **‘당사자운동’을 넘어선 연대: 청년 기후운동의 가능성**. 비판사회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72-187.
- 이선경 (2023). **기후위기 시대, 학교 교육과정과 환경교육**. (2023 학교 환경교육 국제컨퍼런스: 더 나은 삶과 교육을 향한 학교 환경교육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13-36.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순희, 정지현 (2017). 무상보육정책 담론의 이념적 딜레마: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4), 557-584.
- 이슬아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서울형혁신학교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준 (2016).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미래 환경정책 방향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1-79.
- 이승후, 김학선 (2018).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유스호스텔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4(2), 267-288.
- 이영환 (2003).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서울: 함께 읽는 책
- 이영희, 정인경 (2015). **‘지구적 속의 거버넌스’로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 관한 세계시민회의. **과학기술학연구**, 15(2), 1-31.
- 이예슬, 전해숙, 이권민, 민배현, 최용상 (2019).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한 재난대응에 대한 고찰 :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5(2), 223-238.
- 이은주 (2015).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정 (2016). **코호트(cohort) 관점에 기초한 특성화 통일교육 전략 연구**. (2016 통일·북한 연구 최종보고서),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19867&mid=SM00001151>
- 이재경 (2004). 창간40주년 기념 세미나: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기사, 기자, 공론장의 위기’. **신문과 방송**(2004년 4월호), (400), 239-260.
- 이재영 (2012).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2: 체험에서 참여로**. 공주대학교 출판부.
- 이정훈, 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7, 9-35.
- 이준희 (2020). **한국기업들의 ESG경영을 위한 변화**. Deloitte Insights(Climatic & Sustainability 특집호), 26-34. 딜로이트 고객산업본부.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SP/kr_insights_ESG-03.pdf
- 이지영 (2019). 신문 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 **육아정책연구**, 13(1), 29-51.
- 이지은 (202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환경이슈 보도의 차원 분류와 언론의 현실에 대한 영향 분석: 코로나19 전후 환경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이정상, 윤나래 (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구분 및 청소년 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https://www.ypec.re.kr/board/view?pageNum=4&rowCnt=10&menuId=MENU00312&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boardStyle=&linkId=75>

- 이혜경 (2021).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sOXwd-aza&fileName=
- 이혜숙 (2006).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 탐색과 청소년 담론 변화를 통해 본 청소년 규정방식. **아시아교육연구**, 7(1), 43-59.
- 임대근 (2020). 트랜스아이덴티티 인물형상의 표상들. **비교문학**, 81, 271-292.
- 임인재, 박성철, 이덕환 (2013). 논쟁적 과학이슈에 대한 신문보도 분석: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469-501.
-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서울: 웨일북.
- 장덕현 (2015). iSchool 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135-154.
- 장미림 (20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방향. **전북교육정책 오늘**, 7, 30-39.
- 장미정, 윤순진 (2012). 한국 환경교육운동의 형성과정과 정체성.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지**, 20(2), 85-105.
- 장미정, 임수정, 전푸름 (2019). 한국 사회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 『환경교육』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2(3), 276-303.
- 장민서,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783/view.do>
- 장윤정 (2012). 2007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환경용어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현 (2012). 리우+20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2(4), 125-143.
- 장진아 (2021). 기후위기사대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정책네트웍 교육현안보고서**, 7, 1-9.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0(6), 261-285.

- 전상진 (2011). 미래예측, 복고, 청소년 -후기근대 청소년의 위험과 도전과제에 대한 시간사회학적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27, 152-178.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11-26.
- 정민정 (2016). 파리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I: 법적 함의와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https://m.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9489>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12-39.
- 정재철 (2002). 한국언론과 이념담론. **한국언론학보**, 46(5), 314-348.
- 정재철 (2015). 한국 미디어 담론 분석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한국소통학보**, 28, 297-322.
- 정재희 (2009). **교육의 수월성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원, 문진영(2015). **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5630
- 조선총독부 편 (1920). **조선어사전**, 경성.
- 조성우 (2011). Big Data 시대의 기술. KT종합기술원 중앙연구소.
- 조성화, 최돈형 (2008). 교육관에 기초한 학교 환경교육의 목적 고찰. **환경교육**, 21(1), 57-69. 한국환경교육학회.
- 조용환 (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문화의 이해 -. **한국청소년연구**, 14(3), 5-17.
- 조원광 (2017). **의료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건강행동: 유방암 논문 초록과 환자 포럼 게시글의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재인 (201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4), 65-83.
- 조한혜정 (1999).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연세대 청년문화센터 왜 지금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가?

-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5-42.
- 조한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 21세기 학교 만들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한국, 이봉우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20년간의 뉴스 기사 분석.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1(2), 153-163.
- 조혜영 (2016). 청소년문화 연구 동향 분석과 발전과제. **청소년문화포럼**, 47, 109-142.
- 조효재 (2022). **탄소사회의 종말**. 서울: 21세기북스.
- 주영기 (2013). 한국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후변화 뉴스 프레이밍 차이 연구. **언론과학연구**, 13(3), 591-626.
- 주혜선, 이수상, 안현의 (2017).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국내 트라우마 연구동향 분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10), 103-123.
- 지명훈 (2015). 기후변화와 의사소통의 합리성 - 한국과 미국 언론의 기후변화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76), 326-343.
- 진민정, 이봉현, 신우열 (2021). **국내 기후변화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 진시현 (2024).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길 (2012).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 언론의 한미 외교관계 논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 533-574.
- 최규연 (2023). 기후운동의 세계화와 대중화 :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성장 요인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7(1), 7-51.
- 최낙진 (2015). 한국신문에 나타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담론. **언론학연구**, 19(3), 247-279.
- 최석진 (2004).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 8-23. <https://koreascience.kr/article/CFK0200436035693641.pdf>
- 최원기 (2015). **파리 기후협정의 채택과 포스트-2020 新기후체제의 출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최윤정, 권상희 (2014). ‘빅데이터’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241-286.
- 최이숙 (2002). 1970년대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이슬, 조원빈 (2023). 국내 언론의 정치성향과 기후변화 보도, 2000-2022년. **정치정보연구**, 26(2), 51-85.
- 최종환, 김성해 (2014). 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정치: 파업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7, 152-176.
- 최진호, 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1987년 이후 13~17대 대선캠페인 기간의 주요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과학연구**, 12(2), 534-571.
- 최현정 (2021). 기후변화와 COVID-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Issue brief**, 2021, 27. <https://www.asaninst.org/contents/%EA%B8%B0%ED%9B%84%EB%B3%80%ED%99%94%EC%99%80-covid-19-%ED%8C%AC%EB%8D%B0%EB%AF%B9-%EC%9C%84%EA%B8%B0%EC%9D%98-%EC%97%B0%EA%B3%84%EC%84%B1%EC%97%90-%EB%8C%80%ED%95%9C-%EC%9D%B4%ED%95%B4%EC%99%80/>
- 최혜영, 신동훈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1), 23-31.
- 하지훈, 윤순진 (2022).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참여 경험이 기후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구술사연구**, 13(1), 125-176.
-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 2022 개정 환경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https://www.kofac.re.kr/com/file/filedown?_ci=18356&_ck=79a97e348e714bd2a9d578b3232338c8
- 한국환경교육학회 (2003). 우리나라 사회 환경교육 발전방안 연구.
- 한빛나라, 김혜정, 김영옥 (2021). 기후변화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시기 및 언론사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7(6), 55-76.
- 허성우 (2011). 포스트발전국가론과 여성주의적 개입. **한국여성학**, 27(1), 117-1

54.

현명주, 정희라 (2020). **청소년 기후행동의 정체성에 관한 사례 연구: 청소년 기후행동가를 중심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현명주, 김남수 (2021).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4(2), 151-166.

홍영식, 이덕로 (2019). 우리나라 언론에 나타난 기후변화 거버넌스 연구 :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38-56.

홍종현 (2020). 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럽헌법연구**, 34, 243-288.

홍주현, 김경희 (2017).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62-177.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환경부 (2002).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경기도: 환경부.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0aee8853cab32407ffe0bdc3ef48d419&keyword=%EA%B8%B0%ED%9B%84%EB%B3%80%ED%99%94%ED%98%91%EC%95%BD%20%EB%8C%80%EC%9D%91%EC%B2%B4%EC%A0%9C%20%EC%97%B0%EA%B5%AC

환경부 (2008).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과천: 환경부.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0453#expDoc>

환경부 (2010).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미발간 활동현황자료(2010.12.13.)**.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39727&srchFr=&srchTo=&srchWord=&srchTp=&Bmulti_itm_seq=0&Bbitm_seq_1=0&Bbitm_seq_2=0&Bcompany_cd=&Bcompany_nm=

환경부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https://www.water.or.kr/upload/board/2022/11/20221107163644_1.pdf

환경부 (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https://www.me.go.kr/home>

/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7634

환경부 (2022). **파리협정 함께 보기**. (11-1480000-001814-01). 환경부.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5&boardNo=116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9>

황세영 (2023). 청소년 기후행동으로서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사례 연구: 행위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4(4), 115-141.

Yun, S. J., Ku, D. W., Park, N. B., Han, J. (2014). Framing Climate Change as an Economic Opportunity in South Korean Newspapers. *DEVELOPMENT AND SOCIETY*, 43(2), 219-238.

Yun, S. J. (2020).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Korea: Focusing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its NDC*. Climate Change Governance in Asia. Routledge.

<국외문헌>

Allcott, H.,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236.

Barnett, J. (2007). “The Geopolitics of Climate Change.” *Geography compass*, 1(6), 1361-1375.

Berlant, L. (2011). *Cruel Optimism*. Duke University Press.

Blei, D. M., Ng, A. Y.,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Blei, D. M., Lafferty, J. D. (2009). Topic models. *Text Mining: Classification, Clustering, and Applications*, 10(71), 34-41.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odansky, D., Diringer, E. (2010).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regimes: Im

- 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PEW Centre.
- Castoriadis, C. (2010). *Democratie et relativisme, Debat avec le MAUSS*, Paris, Mille et une nuits. 96.
- Chakarabarty, A., Wilson, B. (2013).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Sprawl: Emergent Themes from the Past Decade of Planning Research. *Review Sustainability*, 44(1), 92-96.
- Cohen, P. (1997). *Rethinking the Youth Question*. Education, Labour and Cultural Studies, Hampshire, Macmillan.
- Connell, R. W. (1987).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Cambridge: Polity.
- Dallago, L., Cristini, F., D. Perkins, D. D., Nation, M., & Santinello, M. (2010). The adolescents, life contexts, and school project: Youth voice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38(1), 41-54.
- Dator, J., Pratt, D., & Seo, Y. (2006). *Fairness, Globaliz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East Asia and Beyon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 Moor, Joost, Michiel De Vydt, Katrin Uba and Mattias Wahlstrom. (2021). “New kids on the block: Taking stock of the recent cycle of climate activism”. *Social Movement Studies*, 20(5), 619-625.
- Devereux, E. (2014). 미디어의 이해(심두보 역). 서울: 명인문화사. (원서 2014 출판)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marketization of public discourse: The Universities. *Discourse & Society*, 4(2), 133-168.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이원표 옮김 (2004), 『대중매체

-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2/e,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New York, NY: Routledge.
- Fairclough, N. (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a method for advanced students*. 김현강, 신유리 옮김 (2015). 정치담화분석. 서울: 박이정.
- Fayyad, U., Piatetsky-Shapiro, G., & Smyth, P. (1996). From Data Mining to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AI Magazine*, 17(3), 37.
- Fisher, D. R., Nasrin, S. (2021). “Shifting coalitions within the youth climate movement in the US.” *politics and Governance* 9(2): 112-123.
- Fornäs, J., Bolin, G. (1995). *Youth Culture in Late Modernity*. London: SAGE.
- Foucault, M. (1971). *Orders of discourse*. 이정우 옮김 (2012).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Foucault, M. (1988). *Technologies of the Self*. In L. H. Martin, H. Gutman, & P. H. Hutton (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pp. 16-49).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R. G. Braugard (Ed.),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Greenwich, Conn: JAI.
- Gillis, R. J. (1981). *Youth and history: transtion and change in European age relation, 1770-present*. New York:Academic Press INC.
- Goffman, I.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organiz 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ffin, C. (1997). *Representations of the Young, in: Jeremy Roche and Stanley Tucker(ed.), Youth in Society*. London: Sage.
- Grimmer, J.,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ysis*, 21(3), 267-297.
- Gutiérrez, L. M. (1994). Beyond coping: An Empowerment Perspective on S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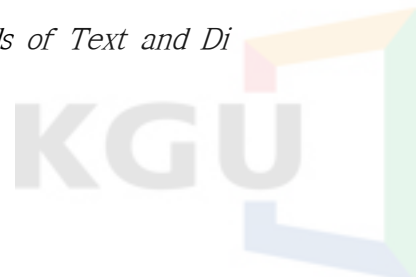
- ssful Life Events. *Th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21(3), 201-219.
- Hall, S. (1986). *Cultural Studies*. 임영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 & Co.
- Han, Heejin, Sang Wuk Ahn. (2020). “Youth mobilization to stop global climate change: Narratives and impact” . *Sustainability*, 12(10), 4127.
- Henderson, K., Tilbury, D. (2004). *Whole School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An International Review of Sustainable School Programs. Report prepared by the Austrian Research Institute i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ARIES) for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Austrian Government.
- Hoser, A. Hotho, R. Jäschke, C. Schmitz, G. Stumme. (2006).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Ontologie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3rd European conference on The Semantic Web: research and applications, *Conference paper*, 514-529.
- Huber, B., Barnidge, M., Gil de Zúñiga, H., & Liu, J. (2019). Fostering public trust in science: The role of social media.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8(7), 759-777.
- Hurrelmann, K. (1999). *Lebensphase Jugend*. Weinheim, Juventa.
- Inzalkar, S., Sharma, J. (2015). A survey on text mining-techniques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 Engineering*, 24, 1-14.
-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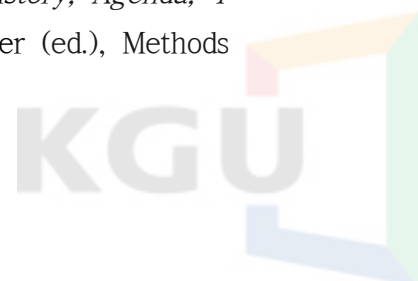
- Jäger, S., Maier, F. (2009).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Foucauldi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dispositive analysis. 34-61. In Wodak, R., & Meyer, M. (2009).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Juan Enriquez (2022). 무엇이 옳은가: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이경식 옮김, 서울: 세계사.
- Jureit, U., Wildt, M. (Eds.). (2014).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 Jusoh, S., Alfawareh, H. M. (2012). Techniques, Applications and Challenging Issue In Text M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Issues*, 9(6), 431-436.
- Kavakiotis, I., Tsave, O., Salifoglou, A., Maglaveras, N., Vlahavas, I., Chouvarda, I. (2017).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Methods in Diabetes Research. *Computational and Structural Biotechnology Journal*, 15, 104-116.
- Landherr, A., Friedl, B., & Heidemann, J. (2010). A Critical Review of Centrality Measures in Social Networks.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2(6), 371-385.
- Macdo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임상훈 옮김(1991),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0. 이남석 옮김(2013). 세대문제. 책세상.
- Molder, A. L., A. Lakind, Z. E. Clemmons, K. Chen (2022). “Framing the Global Youth Climate Movement: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Greta Thunberg’s Moral, Hopeful, and Motivational Framing on Instagram”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7(3), 668~695.
- Murray, S. (2020). “*Framing a climate crisis: A descriptive framing analysis of how Greta Thunberg inspired the masses to take to the*

streets” .

- Newman, M. (2010). *Network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O'Brien, K., Selboe, E., Hayward, B. M. (2018). Exploring youth activism on climate change: dutiful, disruptive, and dangerous dissent. *Ecology and Society*, 23(3). 1-13.
- O'Callaghan, D., Greene, D., Conway, M., Carthy, J., & Cunningham, P. (2015). Down the (White) Rabbit Hole: The Extreme Right and Online Recommender System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4), 459-478.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 OECD (2019). *Concept note: Transformative competencies for 2030*. OECD.
- Palmer, J. A. (1998).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1st century*. : Theory, practice, progress, and promise. New York: Routledge.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황경식 옮김(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Riley, M. W., Riley, J. W. (1999). Sociological research on age. *Ageing and Society*, 19(1), 123-135.
- Riley, M. W.,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 Robert, M. E., Stewars, B. M., Airoidi, E. M. (2016). A Model of Text for Experimen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11(515), 988-1003.
- Said, E. (2003). *Orientalism*. 3rded. London: Penguin.
- Sebastiani, F. (2002). Machine Learning in Automated Text Categorization. *ACM Computing Surveys*, 34, 1-47.
- Titscher, S., Meyer, M., Wodak, R., Vetter, E. (2000). *Methods of Text and Discourse Analysis*. SAGE Publication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UN (2005). *World Youth Report 2005*. New York: UN.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Van Dijk, T. A. (2001).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M. Wetherell, S. Taylor, & S. Yates (Eds.),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300-317. London: Sage Publications.
- Van Dijk, T. A. (2008). *Discourse and Pow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Veling, A., Van Der Weerd, P., (1999). Conceptual grouping in word co-occurrence networks. *IJCAI'99*, 2, 694-701.
- Wagaman, M. A. (2011). Social empathy as a Framework for adolescent empowerment.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78-293.
- Wahlstrom, M., Sommer, M., Kocyba, P., De Vydt, M., De Moor, J., Davies, S., & Buzogany, A. (2019). *Protest for a future: Composition, mobilization and motives of the participants in Fridays For Future climate protests on 15 March, 2019 in 13 European cities*.
- Wang, W., Rada, R., (1998). Structured hypertext with domain semantics. *ACM Trans*, 16(4), 372-412.
- Wielk, E., Standlee, A. (2021). Fighting for Their Future: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Community Building in the Youth Climate Change Movement. *Qualitative Sociology Review*, 17(2), 22-37.
- Witten, I. H., Frank, E. (2005). *Data mining: Practical machine learning tools and techniques*. 2nd Edition, Morgan Kaufmann Publisher, Burlington.
- WMO (2023). *The Global Climate 2011-2020: A decade of accelerating climate change*. Geneva: WMO.
- Wodak, R., Meyer, M.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istory, Agenda, Theory and Methodology." in: R. Wodak and M. Meyer (ed.),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2019. 05. 06). [학교의 안과 밖] 오월의 작은 시민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905062042015#c2b> (검색일: 2024. 02. 10.)
- 경향신문 (2019. 09. 24). “어른들에 우리 미래 못 맡겨” ...환경운동 ‘2000년대생이 온다’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09242142015> (검색일: 2024. 02. 08.)
- 경향신문 (2019. 10. 03). 이제는 기후행동이 필요한 때.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910032032005> (검색일: 2024. 02. 02.)
- 경향신문 (2020. 06. 17). [여적] 생태전환교육.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006172216025> (검색일: 2024. 02. 02.)
- 경향신문 (2021. 06. 20). “기후위기를 대선 의제로” 기후 정치 나선 청소년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730001> (검색일: 2024. 02. 06.)
- 경향신문 (2021. 09. 24). “지금 시스템으론 안돼”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 맞아 ‘기후시민의회’ 제안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41656001> (검색일: 2024. 03. 02.)
- 경향신문 (2021. 10. 14). “기후정의에 맞는 기후위기대응책 마련하라” 탄증위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 집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141720001> (검색일: 2024. 03. 11.)
- 경향신문 (2022. 01. 10). 경남도, 기후위기사대 연간 2만2000명 환경교육 한다. <https://www.khan.co.kr/local/Gyeongnam/article/202201101038001> (검색일: 2024. 03. 08.)
- 경향신문 (2022. 03. 09). 제주도, 도민 4명 중 1명 대상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203091104001> (검색일: 2024. 04. 24.)

경향신문 (2022. 07. 11). [정동칼럼] 탄소중립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10300105> (검색일: 2024. 04. 20.)

경향신문 (2022. 07. 19). 용인시,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219억원 투입.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207191542011> (검색일: 2024. 02. 02.)

경향신문 (2022. 07. 27). LG화학,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 관심 갖게 ‘라이크 그린’ 교육. <https://www.khan.co.kr/ePR/article/202207271954015> (검색일: 2024. 02. 17.)

경향신문 (2022. 09. 05). [NGO 발언대] 기후정의에 대한 쿼어한 실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50300005> (검색일: 2024. 02. 14.)

경향신문 (2022. 09. 24). 3년전에는 5000명이었는데...올해는 3만5000명이 ‘기후정의’ 외치며 쓰러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42108001> (검색일: 2024. 03. 11.)

경향신문 (2022. 11. 04). ‘뮤지컬로 환경교육’ ...대구, 강정보 디아크서 5일 환경교육 한마당. <https://www.khan.co.kr/local/Daegu/article/202211041023001> (검색일: 2024. 0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05. 16.)

기후위기비상행동 (2019. 09. 04). 기후위기비상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http://climate-strike.kr/2189/>(검색일: 2024. 03. 14.)

녹색당 (2023. 12. 16). 2023 청소년인권 기후정의선언. <https://www.kgreens.org/statement/?idx=17285496&bmode=view> (검색일: 2024. 05. 17.)

동아일보 (2020. 12. 17). 현대차그룹-해양환경공단, 어린이 해양환경교육체험관 조성.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7/104488284/2> (검색일: 2024. 03. 21.)

동아일보 (2021. 04. 14). 자녀들의 미래 뺏는 기후변화 방치[기고/이서영]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414/106394139/9> (검색

일: 2024. 04. 20.)

동아일보 (2021. 05. 29). 35개국 청소년들, P4G 정상에 “기후위기 막자” 대책 촉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9/107172637/1> (검색일: 2024. 04. 18)

동아일보 (2021. 08. 19). 폐교 건물 리모델링해... 환경교육 체험관 조성.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818/108611343/1> (검색일: 2024. 04. 07.)

동아일보 (2021. 09. 24). “기후위기, 남의 일 아니다” ...카메라 앞에 선 청소년 환경운동가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24/109380883/9?comm=> (검색일: 2024. 04. 10.)

동아일보 (2022. 02. 07). 지구 평균기온 상승하자 어린이들 응급실 방문도 늘었다. <https://bizn.donga.com/3/all/20220206/111610219/2> (검색일: 2024. 03. 02.)

동아일보 (2022. 02. 11). [신문과 놀자/환경 이야기]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청소년들이 환경정책 관심 가져야”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10/111710775/9> (검색일: 2024. 03. 04.)

동아일보 (2022. 02. 22). 어린이들 손편지에... 대선후보들 “지구 건강하게 지키겠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2/111976469/1> (검색일: 2024. 03. 04.)

동아일보 (2022. 06. 21). 청소년 환경교육 의무화 위한 글로벌 캠페인 동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20/114013768/1> (검색일: 2024. 03. 10.)

동아일보 (2022. 09. 19). 기후위기 대응 해법은 ‘순환경제’ [기고/아이너 엔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918/115510407/1> (검색일 2024. 04. 25.)

서울시NPO센터 (2020. 12. 0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움직임, 서울시 NPO 지원센터 현안과 이슈.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481 (검색일: 2024. 05. 17.)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검색일: 2024. 06. 05.)



시사일보 (2022. 04. 14). 푸른 숲이 교실 속으로! 동작구, 우리의 미래 ‘환경 지킴이’ 키운다. <http://www.koreasisailbo.com/573380> (검색일: 2024. 04. 20.)

외교부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 https://overseas.mofa.go.kr/un-ko/brd/m_5285/view.do?seq=1345538 (검색일: 2024. 04. 15.)

유니세프 (2022. 05. 26). 유니세프, 한국 포함 OECD 및 EU 39개국 대상 ‘어린이와 환경’ 보고서 발표 <https://www.unicef.or.kr/about-us/press/154820/>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 02. 01). ESG 투자 기준 내세웠지만 좌우파 모두의 비난 받아: [INVESTMENT] 블랙록의 ‘각성 자본주의’.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6> (검색일: 2024. 04. 01.)

중앙일보 (2019. 02. 26). [국민의 기업]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앞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5521> (검색일: 2024. 03. 19.)

중앙일보 (2021. 05. 06). 서도비엔아이, 서울YWCA와 청소년 환경교육 협약식 개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1412> (검색일: 2024. 03. 19.)

중앙일보 (2021. 11. 18). “내가 본 것 중 가장 구렸어” …대선 공약에 목소리 내는 20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4899> (검색일: 2024. 03. 20.)

중앙일보 (2022. 02. 16). “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헌법소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675> (검색일: 2024. 03. 16.)

중앙일보 (2022. 06. 13).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720> (검색일: 2024. 03. 18.)

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 <https://seeic.kr/content/> (검색일: 2023. 04. 10.)

한겨레 (2019. 12. 12). “지금 청소년은 ‘멸종위기 세대’ ... 어른들은 뭐하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20550.h

- tml (검색일: 2024. 04. 25.)
- 한겨레 (2020. 03. 13).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32513.html> (검색일: 2024. 04. 11.)
- 한겨레 (2020. 09. 02).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25일은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0388.html> (검색일: 2024. 03. 10.)
- 한겨레 (2021. 04. 20). 고교학점제 명시한 ‘2022 교육과정’ 논의 착수...생태 전환교육도 강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1839.html> (검색일: 2024. 02. 14.)
- 한겨레 (2021. 06. 16). 청소년 자살과 기후위기, ‘시민’ 교과가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99672.html> (검색일: 2024. 02. 14.)
- 한겨레 (2021. 08. 23). 세계 어린이 10억명, 기후변화로 극한 위험에 내몰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8783.html> (검색일: 2024. 03. 06.)
- 한겨레 (2021. 09. 27). 기후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891.html> (검색일: 2024. 02. 02.)
- 한겨레 (2021. 10. 26). [사설] 온실가스 또 사상 최고, 지구 구할 ‘마지막 기회’ 살려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6747.html> (검색일: 2024. 03. 06.)
- 한겨레 (2021. 12. 01).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 청소년 59%가 ‘그렇다’ 고 답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1569.html> (검색일: 2024. 03. 06.)
- 한겨레 (2021. 12. 08). 탄소중립 선언 1년...제도화 속도 냈지만, 실질적 변화는 ‘글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2486.html> (검색일: 2023. 04. 02.)
- 한겨레 (2022. 09. 15). 교육과정서 갑자기 사라진 ‘생태전환교육’ ...교원단체

- 반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8714.html> (검색일: 2024. 02. 16.)
- 한겨레 (2022. 09. 22). [강수돌 칼럼] 편리의 대가와 9·24 기후정의행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9764.html> (검색일: 2024. 02. 18.)
- 한겨레 (2022. 12. 14). 굿네이버스, 미래세대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 앞장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biznews/1071532.html> (검색일: 2024. 02. 26.)
- Climate Connections (2020. 07. 29). What is ‘climate justice’ ? <https://yaleclimateconnections.org/2020/07/what-is-climate-justice/> (검색일: 2024. 03. 17.)
- the Guardian (2019. 10. 15). 가디언의 환경서약 201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ng-interactive/2019/oct/16/the-guardians-climate-pledge-2019> (검색일: 2024. 02. 15.)



Abstract

Ph.D. Dissertat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young people regarding climate crisis in newspaper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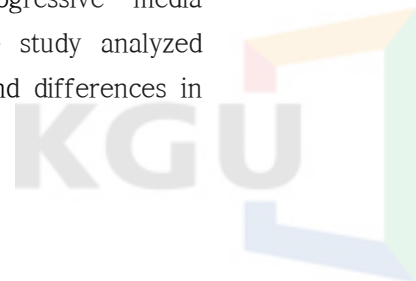
Kim Ji Soo

Department of Youth Scienc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was applied the critical discourse for which explored young people regarding climate crisis in news paper articles in South Korean media from 2014 to 2022. With the global significance of climate change and increasing the crucial roles of the young people, the government has concluded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aiming to enhance youth involvement in climate responses. In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regime, Korean society has responded to and changed in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climate) education, which is being treated as one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related to the young peop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ext mining methods was employed, reviewing existing research on media coverages and youth' s climate actions. Us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study examined major newspaper articles from Dong-A Ilbo, JoongAng Ilbo,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Using topic modeling, the study identified major discourses, with conservative media emphasiz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responses, and progressive media focusing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justice. The study analyzed major discourses on young people regarding the climate crisis, and differences in



discours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emerged. While conservative newspapers emphasized the young people as climate crisis education, progressive newspapers tended to give more importance to the younger people who were stakeholders in the climate crisis and took actions for climate justice. The study concludes that media portrayal might significantly influence public awareness and policy and suggest young people to strengthen education and commit in climate actions.

